

정책연구보고서 2016-46

지역사회운동사 Ⅲ

박 노 동

장 수 찬

김 도 균

민 병 기

이 정 림

연구진

연구책임

- 박노동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원

연구원

- 장수찬 /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연구원

- 김도균 /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연구원

- 민병기 /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구원

- 이정림 / 도시경영연구실 초빙연구원

연구보조

- 박으뜸 /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

요약문

제1장 서론

- 본 연구 작업은 대전지역사회운동사 3부에 해당하는 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 운동과 사회적경제운동을 중심으로 후기산업사회에 대한 대전지역사회운동의 대응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5년에 진행된 지역운동사 1부에서는 1960년 4·19혁명부터 1970년대 반유신운동, 87년 6월 항쟁과 80년대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면, 같은 해 작업한 2부에서는 87년 이후 새롭게 성장한 다양한 지역시민운동들의 전개과정을 정리하였다. 여기에는 참여연대, 경실련, 흥사단 등 종합적 시민운동부터 여성운동, 환경운동, 문화운동, 언론운동 그리고 사회적경제운동에 관한 내용이 일부 정리되었다.
- 그런데 사회적경제운동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경제운동과 마을공동체운동을 종합적으로 재정리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운동과 마을공동체운동은 외부권력과 정치경제체제의 개혁을 지향하는 기존의 외부지향적 사회운동과는 운동이슈 및 방식에 있어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전지역사회운동사 3부에서는 2부에서 일부 진행된 사회적경제운동과 마을공동체운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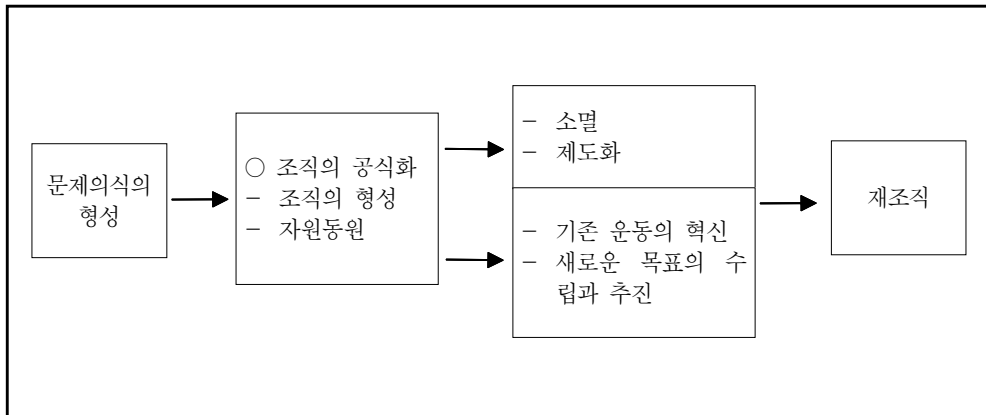
제2장 풀뿌리공동체 운동의 형성과 전개

1. 민주화 이후 사회운동 패러다임의 변화

- 1987년 6월 민주화 이후 민주화운동과는 구별되는 서구의 신사회운동과 같은 다양한 시민사회운동이 출현하면서 빈민운동, 생활여건 개선운동, 도시화에 따른 생활공동체 운동 등 자율적 시민사회와 시민의 자유 및 권리, 그리고 문

화 영역에서 시민운동의 다양한 분화현상이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시민사회 분화 현상은 시민운동의 전문화와 함께 풀뿌리공동체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생활세계의 전환을 위한 운동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 이 글은 이러한 차원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대전지역에서 나타난 풀뿌리공동체운동의 그 형성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지역 풀뿌리운동의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대전지역에서 노동운동이나 기존의 시민운동과는 다른 차원에서 풀뿌리운동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틀을 설정했다.



2. 마을별 풀뿌리운동의 전개과정

- 1990년대 중반 이후 대전지역에서 전개된 풀뿌리운동의 사례를 사회운동의 전개과정을 석교동, 중촌동, 그리고 법·중리동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다.
- 첫째, 문제의식의 차원이다. 석교동의 경우 교육과 보육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경제영역으로 확장을 보였다. 중촌동은 성평등 문화의 생활세계로의 확산이라는 문제의식에서 경제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법·중리동의 경우 공공의료와 대안경제의 결합이라는 고민이 지속되었다.

- 둘째, 주체의 차원이다. 석교동은 평범한 학부모이자 주부들이 중심을 이루었고, 이들은 학습과 활동을 통해 풀뿌리운동 활동가로서 정체성을 획득하고 강화해 갔다. 중촌동은 기존의 사회운동 조직과 활동가 중심에서 마을 주민으로 확산된 사례이다. 법·중리동의 경우는 의료기관과 활동가의 비중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의료 부문이 갖는 전문성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체의 특성으로 인해 석교동과 중촌동은 풀뿌리운동 조직의 전개과정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구체적으로 석교동이 알짬도서관에서 석교마을N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병렬적 연계 관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면, 중촌동의 경우는 그림 2.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풀뿌리여성 마을숲이라고 하는 위계적 체계의 특성을 보인다. 중촌동이 이러한 체계를 갖는 것은 기존 사회운동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셋째, 마을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석교동은 구도심 지역으로 역사·문화 자원을 갖고 있다. 반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촌동도 역시 구도심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석교동과 달리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지만 교육환경이 좋은 서구와 상대적 비교를 하게 된다. 법·중리동은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지만 저소득과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의료취약계층이 많다. 이러한 마을의 특성은 각각의 운동이 전개되는 양상과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섯째, 공동체성의 과도화 경향 현상이다. 세 사례에서 조금씩 다른 정도이지만 제한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활동에 하고 있는 마을 내 자생 조직 혹은 관변단체들이나 정치집단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의도되지 않은 배타성일 수도 있고 기존 질서에 대한 부정의 원인일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들과 개별적 연대의 형성에서는 활동의 확장에 지장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집단 간 거버너스의 구축의 상황에서는 제한요인이 될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음으로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이와 같은 차이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생활세계에서 대안체제의 실험이라는 사회운동의 일반적 특성을 보였다. 그리고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제도화의 영향, 사회운동 흐름의 변화, 그리고 주체의 인식확장이라는 요인들이 공통적으로 작용했다.

제3장 사회적 경제 운동의 형성과 전개

1. 대전지역 사회적경제운동의 전개과정

1) 사회적경제운동의 전사(일제강점기에서 1988년 이전)

- 일제강점기 신문 기사를 보면 대전과 공주지역에서도 소비자협동조합이 결성되어 활동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22년 6월 7일,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대전 본정의 이정목, 박노성, 권용성 등이 발기한 목하소비조합, 같은 해 8월 23일 기사에서는 대전 대동리의 심상옥, 우창길, 민동두 등이 참여한 대동소비조합이 결성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 공주에서는 한 해 앞서 1921년 6월 ‘공주 소비조합’이 결성되었다. 공주 소비조합은 결성이후에도 자금증액을 통해 조직을 확대한 것으로 보아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1932년 동아일보가 조사한 전국협동조합조사 자료를 보면 충북 3개, 충남 3개로 충청지역에서 총 6개의 협동조합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이 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대전지역 소비조합운동은 1980년 중반 서대전 신협에 의해 일부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신협은 1970~80년대 한국 협동조합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신협은 협동조합 관련 교육뿐 아니라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점포형 소비자협동조합을 운영했다.

2) 사회적경제운동의 형성기(1986~2006년): 시민사회로부터 출발

- 대전지역에서 신탁이 지역개발사업으로 진행한 점포형 소비자협동조합 활동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사회적경제운동은 87년 민주화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0년 6월 28일, 친환경로컬푸드운동 차원에서 한밭살림소비자협동조합(현재, 한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결성되었으며, 이후 97년 7월에는 한살림청주 대전점 형태로 대전에서도 한살림 활동이 시작되었다.
- 생협운동과 구분되는 자활공동체운동은 90년 중후반을 전후로 하여 대전지역에서도 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상호 신뢰와 호혜성에 기반을 둔 지역화폐운동, 의료생협운동 등도 200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즉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주요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생협운동과 자활공동체운동이 대전지역의 사회적경제운동 형성에 있어서도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적경제운동의 확산기(2007~현재): 제도화를 통한 확산

- 이 시기는 사회적기업육성법(2007년 1월) 및 협동조합기본법(2012년 12월) 등이 제정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지원으로 사회적경제영역이 양적으로 팽창한 점을 뚜렷한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대전지역에서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다. 앞서 언급한 자활공동체는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적기업육성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였으며, 마을문제와 주민들의 경제적 필요를 해결하려는 마을단위의 마을기업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로부터 출발한 사회적경제운동이 국가의 제도영역으로 본격적으로 포섭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민관협력의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 제도화 과정을 국가에 의한 포섭으로 보든 아니면 민관협력으로 보든 분명한 사실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양적으로 팽창했을 뿐 아니라 지역시민사회(혹은 시민운동)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2. 사회적경제운동의 사례

1) 한밭생협

- 한밭생협은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직접적 도전과 개혁을 지향하기보다는 안전한 먹을거리라는 생활의제를 중심으로 한 생활세계 개혁적 사회운동이었기 때문에 지역여성들이 운동의 핵심적 집단으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초기 의욕적인 출발에도 불구하고 생협운동은 물품구매와 판매, 물류, 마케팅, 회계 등 높은 전문화 수준을 요구하는 업무의 연속이었다. 즉 출범 초기 여러 경영상의 문제와 함께 만성적인 적자상태가 계속되었다.
- 초기 경영의 비효율성과 만성적인 적자는 한밭생협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는 당시 소규모 지역생협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평(인천), 부천, 별내(강서, 양천), 수원, 안산 등 수도권 지역생협을 중심으로 물류사업통합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1세기생협연대를 결성하기에 이르는데, 이 과정에 한밭생협 또한 참여하였다.
- 한밭생협은 21세기생협연대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된다. 특히 물류통합과 조합비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영의 합리화뿐 아니라 만성적인 적자상태에서 벗어날 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경영에 대한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생협운동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원과 지역사회 활동을 강할 수 있는 여력 또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 한살림대전

- 한살림운동은 생명사상을 기반으로 한 도농직거래 운동으로 1986년 설립되어 대전에서는 1997년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한살림대전의 창립특징은 8,90년대 농민운동 및 환경운동을 기반으로 한 다른 지역한살림 조직과는 차별적으로 소비자가 운동의 주체가 되어 조직했다는 점이다. 즉 한살림의 소비자들은 화학농업과 저곡가 정책으로부터 벗어나 생태적인 농업·농촌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택하고 확산했다.

- 한살림대전은 지난 15년 동안 조직규모와 사업적으로 크게 성장해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87년 민주화운동이후 성장한 시민의식과 생협법의 제정과 같은 제도적 변화 그리고 수입농산물 증가에 따른 식품안전사고의 증가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소비자주권의식과 환경의식이 성장한 시민의 등장은 생협을 성장시켰고, 계속되는 식품관련 사고는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필요를 강화시켰다. 여기에 대전의 특수성인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웰빙(well-being)을 추구하는 소비력 있는 중산층의 증가는 한살림대전의 성장의 주된 요인이다.
- 하지만 최근 국내의 경기침체와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간 본격화된 경쟁구조는 조직성장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한살림대전에서는 지역순환농업체계와 도농교류연대 사업을 강화하고, 워커즈(workers) 등의 대안고용모델 시행, 탈핵운동과 GMO반대운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즉 위기에 대해 사회운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팽창한 조직규모는 조직 내부적으로 살림꾼(직원)들의 업무과다 및 부족한 노동조건을 형성했고 최근 이직률이 증가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부적으로 심화하는 사회 위기에 대한 대안조직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어, 이는 향후 한살림대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3) 마당극패 우금치

- 마당극패 우금치는 80년대 사회참여적인 문화운동 흐름 안에서 태동하여, 90년에 창립한 26년의 역사를 가진 대전의 전문예술단체이다. 우금치를 창립한 구성원들은 주로 80년대 학번으로 민주화운동의 영향 아래서 전통예술을 흡수했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연희 형식의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마당극 창작공연 단체를 설립했다.
- 하지만 90년대 후반 이후 소비·대중문화의 확산으로 사회운동으로써의 문화운동이 약화되면서 사회성이 강한 마당극도 전국적으로 쇠퇴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금치는 자체 조직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발전해왔다. 즉 우금치

는 창립부터 단원 모두가 극단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는 공동출자, 공동운영의 동인제(同人制) 시스템으로, 투명한 재정과 민주적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구성원 간의 높은 신뢰를 형성했다. 또한 단원들의 출자를 통해서 창작공간 등 공유자산을 축적하여 조직의 기반동력으로 활용했다.

- 이러한 결과, 우금치는 창작극 40편, 총2,500회의 공연을 진행한 우수 마당극 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우금치는 지역축제 제작, 교육 및 복지공연 사업, 시민단체와의 연대 사업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 우금치는 2012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여 신규단원을 육성하고 있으며, 2015년 대흥동에 마당극 전용공간 ‘별별마당’을 자체 건립하여 마당극 전수와 시민교류 사업으로 문화공공성을 실천하고 있다.

〈목 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4
제2장 풀뿌리공동체 운동의 형성과 전개.....	7
제1절 민주화이후 사회운동 패러다임의 변화.....	7
제2절 풀뿌리운동의 사회운동적 성격.....	10
제3절 풀뿌리공동체 운동의 사례.....	28
제4절 종합.....	63
제3장 사회적경제운동의 형성과 전개.....	67
제1절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	67
제2절 사회적경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	69
제3절 사회적경제운동의 전개과정.....	78
제4절 사회적경제운동의 사례.....	99
제5절 종합.....	152
참고문헌.....	157

〈표 목 차〉

〈표 2. 1〉 지배적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교.....	8
〈표 2. 2〉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의 특성.....	19
〈표 2. 3〉 지역성과 목적에 따른 공동체의 유형.....	23
〈표 2. 4〉 마을공동체의 성장단계.....	24
〈표 2. 5〉 알뜰도서관 활동 내용(2004년 12월~2005년 8월).....	32
〈표 2. 6〉 석교마을N사람들의 주요 활동 내용.....	39
〈표 2. 7〉 대전여민회 소속 후보자의 제4회 지방선거 득표결과.....	46
〈표 2. 8〉 2002년 대전민들레의료생협의 과제.....	56
〈표 3. 1〉 도별 협동조합분포 현황.....	79
〈표 3. 2〉 초기(1996~1999) 자활지원센터 지정현황(시범사업).....	82
〈표 3. 3〉 1990년 이후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발전과정.....	84
〈표 3. 4〉 유형별 사회적기업 현황.....	94
〈표 3. 5〉 유형별 마을기업 현황.....	96
〈표 3. 6〉 업종별 협동조합 현황(단위: 개).....	97
〈표 3. 7〉 자치구별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단위: 개).....	98
〈표 3. 8〉 한발생협의 초기 연혁.....	100
〈표 3. 9〉 사업의 중점방향과 구체적인 사업목적(2001~2008년).....	103
〈표 3. 10〉 주요 교육내용(2005~2008년).....	104
〈표 3. 11〉 식품안전위원회 주요 교육활동(2008년).....	105
〈표 3. 12〉 마을 및 동아리모임 현황(2008년).....	106
〈표 3. 13〉 사업의 중점방향과 구체적인 사업목적(2009~현재).....	108
〈표 3. 14〉 윤리적 소비운동의 7개 중점 과제.....	110
〈표 3. 15〉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	111
〈표 3. 16〉 조합원 규모의 변화(단위: 명).....	114
〈표 3. 17〉 물품판매 매출액의 변화.....	115

<표 3. 18> 물품판매 매출액의 변화.....	116
<표 3. 19> 사업외 수익 및 조합비의 변화(단위: 원, %).....	118
<표 3. 20> 단기순이익의 변화(단위: 원, %).....	119
<표 3. 21> 조합원 가입경로.....	132
<표 3. 22> 조합원 가입 목적.....	132
<표 3. 23> 한살림 신뢰 물품.....	132
<표 3. 24> 살림꾼 참여 계기.....	135
<표 3. 25> 살림꾼 근속년수.....	135
<표 3. 26> 우금치 대학 공연 현황(1995년).....	143

[그림 목차]

[그림 2. 1] 사회운동의 전개과정.....	15
[그림 2. 2] 마을운동, 공동체운동, 그리고 풀뿌리운동의 특성.....	26
[그림 2. 3] 알짬도서관 조직체계(2005년 3월).....	32
[그림 2. 4] 석교동 풀뿌리운동 조직의 전개과정.....	40
[그림 2. 5] 대전여민회 풀뿌리운동센터의 마을사업도(2011년).....	51
[그림 2. 6] 풀뿌리여성 마을숲 조직도(2012년).....	52
[그림 2. 7] 민들레의료생협 조직도(2002).....	57
[그림 2. 8] 연도별 조합원 증가 현황	60
[그림 2. 9]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직체계(2016).....	61
[그림 3. 1] 플라니의 경제 개념의 구분.....	70
[그림 3. 2] 플라니의 사회 속에 배태된 경제.....	73
[그림 3. 3] 한국 생활협동조합의 변천과정.....	80
[그림 3. 4] 연도별 (예비)사회적 기업 현황(단위: 개).....	94
[그림 3. 5] 연도별 마을기업 현황(단위: 개).....	95

[그림 3. 6] 연도별 협동조합 현황(단위: 개).....	96
[그림 3. 7] 조합원 규모의 변화(단위, 명).....	113
[그림 3. 8] 물품판매 매출액의 변화(단위, 원).....	115
[그림 3. 9] 단기순이익의 변화(단위: 원).....	119
[그림 3. 10] 한살림대전 조합원 수.....	131
[그림 3. 11] 살림꾼 수.....	134
[그림 3. 12] 매장 수	136
[그림 3. 13] 매출액과 출자금.....	137
[그림 3. 14] 조직현황.....	137
[그림 3. 15] 우금치의 수입의 변화.....	146

{자료 목차}

{자료 3. 1} 1920년대 대전지역 소비조합 관련 기사	86
{자료 3. 2} 1920년대 공주지역 소비조합 관련 기사	86
{자료 3. 3} 한살림대전 창립문.....	122
{자료 3. 4}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설립취지문.....	124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960년 4·19혁명이후 지속해 온 독재와 민주(혹은 반독재)라는 거대한 대결구도는 87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6월 항쟁으로 정치적 기회구조가 확장되면서 대전지역사회에서도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사이의 1차 분화가 이루어졌고, 이후 계속해서 2차 분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공존하는 양상으로 지역사회운동의 지형도가 재구조화되었다(김도균, 2016). 특히 2차 분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상의 이슈들이 사회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소위 내부(시민사회)지향적 사회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생활세계 개혁적 사회운동은 시민사회 내적인 생활관계의 성숙과 민주적 발전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외부 권력과 사회체계에 대한 도전을 지향하는 외부지향적 사회운동과 구분된다(정태석, 2015; 조희연, 2010). 현재 내부지향적 사회운동은 지역먹거리운동, 마을공동체운동, 협동조합운동, 사회적경제 혹은 공유경제 운동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운동의 쟁점들은 임금 및 노동조건, 분배적 불평등을 넘어 위험, 일자리 불안, 환경, 차별과 인정 등 후기산업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쟁점들을 담고 있다(정태석, 2015). 운동의 방식 또한 지도보다는 자발적 참여, 조직보다는 개인과 네트워크, 전문활동가보다는 시민 등 밑으로부터의 자율성 및 자발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다.

본 연구 작업은 대전지역 사회운동사 3부에 해당하는 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운동과 사회적경제운동을 중심으로 생활세계 개혁적 사회운동 혹은 내부지향적 사회

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5년에 진행된 1부에서는 1960년 4·19혁명부터 1970년대 반유신운동, 87년 6월 항쟁과 80년대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면, 같은 해 작업한 2부에서는 87년 이후 새롭게 성장한 다양한 지역시민운동들의 전개과정을 정리하였다. 여기에는 참여연대, 경실련, 흥사단 등 종합적 시민운동부터 여성운동, 환경운동, 문화운동, 언론운동 그리고 일부 사회적경제운동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사회적경제운동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경제운동과 마을공동체운동을 종합적으로 재정리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운동과 마을공동체운동은 외부권력 및 정치사회체제의 개혁을 지향하는 기존의 외부지향적 사회운동과 운동의 쟁점 및 방식에 있어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전지역 사회운동사 3부에서는 2부에서 일부 진행된 사회적경제운동과 마을공동체운동을 종합적 수준에서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방법

대전지역의 마을공동체운동과 사회적경제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문헌 조사와 함께 관련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함께 진행하였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서는 문헌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마을공동체운동의 경우 문헌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심층면접을 함께 진행하면서 문헌자료의 공백을 메우고 문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운동의 태동 및 참여과정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 심층인터뷰는 총 관련 활동가 9명을 만나 진행하였으며, 녹취록을 만들어 분석에 사용하였다.¹⁾

1) 심층면접자 명단은 참고문헌에 기록해 두었다.

제 2 장

풀뿌리공동체 운동의 형성과 전개

제1절 민주화이후 사회운동 패러다임의 변화

제2절 풀뿌리운동의 사회운동적 성격

제3절 풀뿌리공동체 운동의 사례

제4절 종합

제2장 풀뿌리공동체 운동의 형성과 전개

제1절 민주화이후 사회운동 패러다임의 변화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적 사회적 개방과 함께 시민적 가치를 기반으로 민주적인 사회개혁을 담당할 새로운 시민운동단체들이 조직되고 진보적인 민중공동체들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경제정의, 권력감시, 여성, 인권, 그리고 환경 등의 영역에서 형성된 시민운동은 민주화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형성된 차이의 운동들의 구체적인 발현이었다. 그렇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노태우 정권이나 김영삼 정권과 같이 여전히 군부세력이나 그와 연합한 세력이 정권을 잡음으로 해서 민주주의 공고화는 지체되었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등장한 다양한 영역의 시민운동이 서구에서와 같은 신사회운동과 완전히 일치하는 특성을 갖지는 못하고 여전히 국가와 정권을 상대로 탈권위주의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특성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97년 민주화 운동세력으로서의 정권교체 이후 시민사회운동도 변화를 맞게 된다.

2000년 이후 시민사회운동은 분화되고 전문화되기 시작하면서 생활세계 전환의 도구로서 협동조합 운동을 비롯한 풀뿌리공동체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시를 중심으로 빈민운동, 생활여건 개선운동, 도시화에 따른 생활공동체 운동 등 기존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같은 거대한 운동에서 생활세계의 전환을 위한 운동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부활은 이러한 운동이 마을 수준에서 공동체운동을 통해 지방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촉진했다.

어떤 의미에서 기존의 시민사회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이나 마을단위의 풀뿌리공동체운동은 담론의 형성자로서 그리고 실천자로서 교차되고 공유하는 지점을 가지며, 자율적 시민사회와 시민의 자유 및 권리, 그리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박해광, 2010: 36).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은 민주화 운동 이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적 성격과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공동체 형성을 향한 자발적 움직임으로 풀뿌리운동을 형성하고 있다(정선기·이정림 외, 2013: 15).

<표 2. 1> 지배적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교

새로운 생태 패러다임	지배적 사회 패러다임
1. 자연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 a. 고유한 목적을 지닌 자연 - 자연에 대한 경건한 사랑 b. 인간과 자연간의 전체적인 관계 c. 경제성장보다는 환경보호 우선	1. 자연에 대한 낮은 가치부여 a. 상품생산을 위한 자연의 이용 b.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 c. 환경보호보다는 경제성장 우선
2. 동정심을 보편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로 표현한다. a. 다른 종들 b. 다른 사람들 c. 다른 세대들에게로 향한다.	2. 가까운 사람 혹은 존경하는 사람들에게만 동정심을 표현한다. a. 인간의 필요를 위해 다른 종들을 이용 b.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의 결여 c. 지금 세대에만 관심을 부여
3. 위험을 피하기 위한 신중한 계획과 행동 a. 과학과 기술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b. 더 이상의 핵발전 개발의 중지 c. 소프트 테크놀로지의 개발과 사용 d. 자연과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3. 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험을 수용 a. 과학과 기술은 인간에게 엄청난 혜택을 줌 b. 핵발전의 신속한 개발 c. 하드 테크놀로지의 강조 d. 통제에 대한 비판-시장기능의 이용 위험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
4.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a. 자원의 부족 b. 인구폭발에 따른 육구의 증대 c. 절약	4. 성장에는 한계가 없다. a. 자원부족은 없다. b. 인구증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c. 생산과 소비
5. 완전히 새로운 사회 a. 자신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심각한 손상 b. 개방성과 참여 c. 공공재에 대한 강조 d. 협력 e. 단순한 생활양식 f. 노동자의 만족을 강조	5. 현 사회에 문제가 없다. a. 인간은 자연에 어떠한 손상도 주지 않는다. b. 위계와 효율성 c. 시장의 강조 d. 경쟁 e. 복잡하고 빠른 생활양식 f. 경제적 필요에 의한 직업의 강조
6. 새로운 정치 a. 협의와 참여 b. 예견과 계획의 강조 c. 기꺼이 직접행동으로 나감 d. 새로운 축에 따른 새로운 정당구조	6. 낡은 정치 a. 전문가에 의한 결정 b. 시장통제를 강조 c. 직접행동을 반대하고 정당통로를 이용 d. 좌-우의 구도에 따른 정당 - 생산수단의 소유를 둘러싼 논쟁

출처: 밀브래스, 이태건·박지운·노병철 역(2001: 219).

이러한 공동체운동의 전개는 산업사회의 지배적 패러다임이 생태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거시사회적 변화의 흐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1과 같이 산업사회의 지배적 패러다임은 인간중심, 성장, 부의 확대를 위한 위험의 감수, 전통적 좌-우 구조의 경직된 정치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생태적 가치에 기반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은 자연과 다른 종이 갖는 가치에 대한 고려, 과학기술 발전의 한계와 위험성 인지, 성장의 한계, 현 사회의 변화 필요성, 그리고 협의와 직접행동에 바탕을 둔 새로운 정치로 구성된다. 이러한 거시적 패러다임 전환의 흐름에 따른 사회운동의 전개는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 간 특성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이와 동시에 한국에서 사회운동적 공동체 운동이 형성되고 전개, 변화되어 온 과정에 대한 설명배경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차원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대전지역에서 나타난 풀뿌리공동체운동의 그 형성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절에서는 마을, 공동체, 풀뿌리운동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파악해 본다. 제3절에서 대전지역의 풀뿌리운동의 사례를 마을단위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마을은 석교동, 중촌동, 그리고 법·중리동으로 한정했는데, 이들 마을은 주민중심, 사회운동에서 주민으로 주체의 이동, 공공의료와 대안경제의 접목이라는 각각의 특성을 갖는다.

제2절 풀뿌리운동의 사회운동적 성격

제2절에서는 풀뿌리운동이 갖는 사회운동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 그리고 풀뿌리운동 각각의 의미와 사회운동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일반적 논의를 살펴본다. 마을공동체운동 혹은 공동체운동 혹은 풀뿌리운동은 유사한 수준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특성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해가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을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운동의 특성과 유형

1) 사회운동의 개념과 전개과정

서구에서 사회운동은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사회혁명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학술적 연구의 주요한 대상이 되었다. 이 시기의 운동들의 특징은 이전의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서 폭동, 반란, 도피 등과 같이 일시적이고 불연속적인 집단행동들과는 달리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고 정치적인 목적을 갖기 시작했다(Arrighi 1986: 송철순·천지현 역, 1994: 43~44).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에서 사회운동은 대체로 노동운동 혹은 민족주의 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한정되었다. 그런데 유럽에서 파시즘의 등장과 그 파장, 그리고 전(前) 자본주의 사회와 그 기간 동안의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어졌다(Heberle, 1951: 6~7). 나아가, 1968년의 이른바 68혁명을 기점으로 기존의 노동운동과는 다른 차원의 신사회운동의 등장은 거시구조적이고 문화적인 변화에 관한 연구의 바탕이 되었다.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는 학생운동과 흑인의 시민권 운동, 그리고 여성운동들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들 운동들에 대해 유럽의 경향들과는 달리, 집합행동이론에서 자원동원이론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행태주의에 기반을 둔 미시적 혹은 중범위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술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기존의 연구방법들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접근과 틀구성 과정(framing processes) 분석에 이르기까지 사회운동의 다양한 연구방법이 등장했다.²⁾

한국에서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는 1980대 후반 이후, 즉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다가 1990년대 들어 사회의 민주화와 개방화의 확대와 함께 시민사회가 확립되어가는 상황에서 시민운동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의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서구에서의 의미와 다소 차이를 있어 NGO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운동과 노동운동, 통일운동, 그리고 농민운동 등을 민중운동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서구적 의미의 시민사회의 형성과 한국 사회의 특성을 서구와 같은 후기산업사회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에 중심을 둔 것으로, 민주화 과정의 결과로 형성된 사회운동의 특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개되어 온 사회운동 연구방법에 따라 사회운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각 연구경향들의 대표적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사회운동의 일반적 정의를 정리해 본다.

우선, 사회운동 발생의 원인분석에 더 중심을 두는 집합행위론의 측면에서 터너와 킬리안은(Ralph Turner and Lewis M. Killian)은 사회변동을 달성하거나 혹은 그것을 저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다중에 의한 운동으로 정의한다(1972: 246). 이들에 있어서 집합체로서 운동은 불명확하고 유동적인 소속원과 권위를 정당화하는 공식적 절차보다 비공식적 지지자의 반응에 더 많이 지위가 결정되어지는 리더십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된다. 이들과 같이 집합행위론의 경향으로 분류되지만, 기능주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스멜서(Neil J. Smelser)는 사람들이 일반화된 신념의 이름으로 그들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2) 서유럽과 미국에서의 사회운동 연구의 전개에 관한 세부적인 과정은 다음의 자료들에서 그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Sidney Tarrow, "National Politics and Collective Action: Recent Theory and Research in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14(1988), pp.421-440.; Friedhelm Neidhardt and Dieter Rucht, "The Analysis of Social Movements: The State of the Art and Some Perspectives for Further Research," pp. 421-464, in Dieter Rucht (ed.), Research on Social Movements: The State of the Art in Western Europe and the USA(Frankfurt am Main: Campus Verlag, 1991); 임희섭,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목적 지향적이며 사회적으로 지향된 비제도화된 활동으로 집합행동을 정의하고 사회저항운동을 집행행동의 한 사례로 설명한다(박영신 편역, 1981: 87; 98~99).

두 번째로, 잘드와 맥카시(Mayer N. Zald and John D. McCarthy)는 자원동원자들로서, 이들에 따르면 사회운동은 사회적 구조의 어떤 요인의 변화에 관한 선호를 주장하거나 혹은 사회의 분배에 보답하는 일련의 의견과 신념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들은 이전의 집합행위론자들에 비해 조직적 요인들의 역할에 관심을 두지만 사회운동을 대표하는 기능이 아닌 사회운동을 이행하기 위한 도구적 의미로 파악한다(1977: 1217~1218). 그리고 자원동원론의 입장에서 이들은 자원의 유용성, 선호 구조에 관한 기존 조직, 선호 요구에 응하기 위한 사업적 시도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Zald & McCarthy, 1977: 1236). 나아가, 이들은 사회운동 영역(SMS; Social Movement Sector) 내에서 사회운동단체(SMOs; Social Movement Organisations)들 간의 경쟁적 상호관계에 관한 초기연구에서 구별되어지는 정치적 장, SMOs 간의 운동 지형, 적대 혹은 경쟁과 협력과 같은 더 큰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SMS에 관한 연구로 확대했다(Diani, 1992: 5). 이들이 사회운동 조직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은 사회운동이 전개되어 가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정치과정론자인 톨리(Charles Tilly)는 사회운동을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그 형성과 전개의 역사적 과정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불만과 그 성격을 결정하는 전반적인 동학을 강조한다. 즉 그는 사회운동을 하나의 집단(a group)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복합적 형태로 이해한다(1993: 5). 이에 따라, 그는 사회운동을 권력의 재분배에 관한 기득권 세력과 이를 요구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조직되고, 지속되며,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정체성을 포함하는 자아 의식적 도전으로 정의하면서 기존의 자원동원론자에 비해 조직의 행위에 중심을 더 두고 있다(Tilly, 1984: 303~306). 톨리와 같이 사회운동을 정치과정에 중심을 두어 정의하는 한국의 연구자로는 조희연과 김동춘을 들 수 있다. 조희연은 사회운동을 사회 내에 존재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개혁 의제화하고 나아가 그러한 의제해결을 국가 및 정당에 강제하는 집단적 힘을 조직화하는 노력으로 정의한다(2004: 19). 김동춘은 사회관계의 변화, 정치권력의 담당 주체의 변화, 사회 구성원의 이익과 권리의 분배체계의 변화를 지향하는 집합적인 행동의 묶음으로 정의한 바 있다(2001: 81).

네 번째로, 신사회운동론 측면에서의 정의를 살펴볼 수 있다. 신사회운동론은 자원동원이론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운동에서의 사회적 불만이나 집합적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연대와 이데올로기 및 문화적 지향의 중요성 등을 발견함으로써 사회운동연구의 새 지평을 열고 구성주의이론이라는 신사회운동이론이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임희섭, 2009: 130). 대표적으로 뚜렌(Alain Touraine)은 주요 문화적 양식의 사회적 통제를 둘러싼 갈등에 주목하면서(1985), “하나의 구체적인 공동체 내에서 역사성(historicity)에 대한 사회적 지배를 위해 자기 계급의 적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계급행위자의 조직된 집합적 행동”으로 사회운동을 정의한다(1981: 81). 이 때 역사성은 문화적 양식을 통해 역사적 경험을 생산할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Touraine, 1985: 26), 사회적 지속성과 전환의 과정에서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정의와 같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에 있어서 탈산업사회에서 사회운동의 주요 대상은 더 이상 제조업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와 통제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의 주요 자원을 형성하는 지식생산의 소유와 통제를 중심 갈등으로 하는 기술관료적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Scott, 1990: 66). 이런 차원에서 신사회운동은 덜 사회정치적(sociopolitical)이면서 더 사회문화적(sociocultural)이다(Touraine, 1985: 27). 다시 말해, 그에 있어 사회운동은 문화적 가치의 실현에 더 큰 목표를 두지만, 권력관계의 불평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회운동의 특성으로 인해 문화적 가치와 사회갈등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조합으로 구성된다(Touraine, 1992: 301~306; 1980: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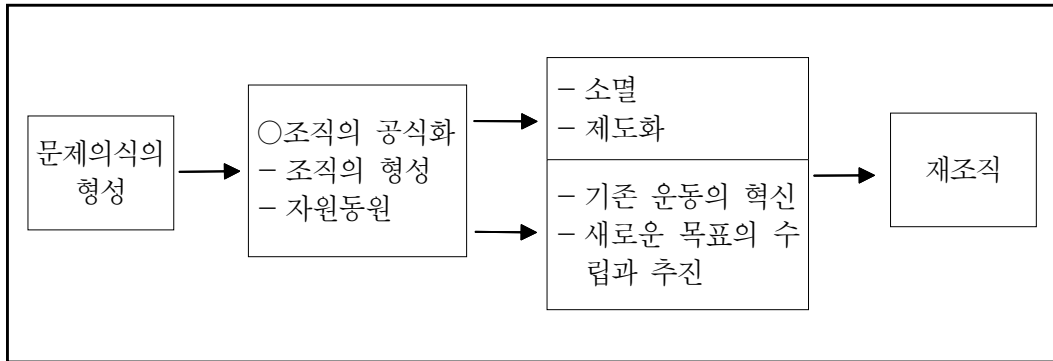
멜루치(Alberto Melucci) 역시 신사회운동의 측면에서 사회운동을 연대, 갈등에의 참여, 한계 구조의 파괴라는 측면에서 집합적 현상의 특수한 유형으로 정의한다. 즉, 그에 있어서 사회운동은 갈등에 기반을 둔 집합 행동과 기존 체계의 한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분석적 구성물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운동은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연결망들(networks)과 다양성으로 인해 운동의 영역을 확장하지만 명백히 정치적인 갈등과 겹치지 않는 상태에서 문화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1980).

이와 같이 연구경향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사회운동에 관해, 디아니(Mario Diani)는 각 연구경향별 대표적 연구자들의 사회운동 정의를 체계적 비교

(systematic comparison) 분석을 통해 통합적 정의의 구성을 시도한 바 있다. 그는 이를 위해 각 연구경향들에서 대표적 연구자들의 정의를 분석하면서 비공식적 상호작용의 네트워크, 공유된 신념과 연대, 갈등적 쟁점에 대한 집합행동, 그리고 제도적 영역과 사회적 생활의 반복적 과정의 외부에서 넓게 드러나는 행동 등 네 개의 기준을 세웠다. 디아니는 분석의 결과로 사회운동을 “공유되는 집합정체성의 기반 위에서, 정치적 또는 문화적 갈등에 관여하는 개인들, 집단 간 혹은 조직들의 다원성 간의 비공식적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로 정의한다(Diani, 1992: 13). 그는 이러한 사회운동의 정의과정에서 행위자들의 다원성 간 관계의 네트워크, 집합적 정체성, 그리고 갈등적 쟁점을 기본 구성요소로 파악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의 구성요소로 인식되어온 정치참여의 반제도적 형태나 반체제적 태도에 대해서는 앞의 세 요소와 같은 필수 요소가 아니고, 긴 역사적 전망과 운동이 다양한 이유로 교착상태에 직면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차원이라고 분석한다(Diani, 1992: 19).

이상의 사회운동 연구경향들이 계급대립의 상황을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주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이 문제에 중심을 두어 파악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포스와 라킨(Daniel A. Foss and Ralph Larkin)은 계급적 행위를 강조하면서, 다른 사회범주의 사람들과 그들의 소유물 또는 제도화된 기구들에 대항하여 계획된 것이건 의도치 않은 결과이건 간에 물리적 힘이나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재생산을 적어도 일시적으로라도 방해하는 주요 사회범주의 상당 부분의 성원들에 의해 전개되는 집단행동으로 사회운동을 규정한 바 있다(1986: 26). 장상환과 정진상의 경우도 사회운동을 계급운동의 측면에서 특정한 사회제도의 변동을 초래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자 하는 집단적 움직임으로 정의하면서 ‘지속적, 조직적, 집단적, 목적의식’을 그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비록 참여자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할 것을 명시적인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의미를 지니므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회운동은 없다고 보았다. 이들은 사회운동이 사회변화라는 주요 목적이외에도 운동의 성장에 따른 부차적 혹은 잠재적 기능으로 사회적 문제에 관한 여론 형성과 정치엘리트 충원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제시한다(장상환·정진상, 2001: 20~25).

사회운동을 그 특성의 측면에서 집합행동이나 정당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검토할 수도 있다. 집합행동과의 차이에 관해 구드(Erich Goode)는 사회운동이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갖는다고 보았는데, 즉 보다 조직적인 경향, 참여자들의 보다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인 경향, 보다 오래되는 지속성, 그리고 실제적인 사회변화를 추구하거나 저지한다는 것이다(1992: 335).



[그림 2. 1] 사회운동의 전개과정

출처 : 민병기(2016: 30)에서 수정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운동이 발생하고 전개되는 과정은 그림 2.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사회운동은 주체들이 자신의 둘러싼 환경 즉 제도적, 사회적 관습, 혹은 타자와의 관계 등에서 부당함을 인식하고 그 상태의 변화 필요성을 인식하는 문제의식의 형성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비조직적 집합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고 조직의 공식화를 통해 나타날 수도 있다. 앞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운동은 지속적, 조직적, 집단적, 그리고 목적의식이 갖추어진 상태라고 할 때 조직의 공식화를 사회운동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비조직적 집합행위는 문제의식이 형성된 후 공식화 이전의 단계로 형성기로 볼 수 있다.

조직의 공식화는 내부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 재정의 마련, 성원 간 역할 분업, 조직의 안정된 운영을 위한 지도부의 정례화된 회의 진행 등 운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조직의 공식화 이후 운동의 성

공과 실패에 따라 운동의 지속성 여부 혹은 지향의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운동의 실패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목표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거나, 운동의 정당성이 불신당할 때로 볼 수 있다. 운동의 성공은 이들의 요구가 제도화될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운동의 성공은 오히려 참여의 욕구불만이라는 열정의 하락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 경우 운동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운동의 위기는 실패의 상황뿐만 아니라 성공의 상황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운동의 위기는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거나 기존 운동을 강화 혹은 촉진하는 것을 통해 해소되어 질 수 있다(민병기, 2016: 29~31).

성공이나 실패 경우 모두 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재조직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재조직은 다른 운동조직과의 연대강화, 조직원의 충원, 운동의 지향에 대한 재검토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2)사회운동의 유형

이상과 같이 사회운동에 관한 다양한 연구방법과 그에 따른 정의의 다양함, 그리고 여러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회운동의 실제로 인해 연구자에 따라 그 유형의 분류에 있어서도 조금씩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 사회운동은 혁명적 관점에서 노동운동과 민족운동으로 단순히 구분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운동론의 맥락에서, 장상환과 정진상은 지배계급의 입장, 즉 제도권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집합행동과 피지배계급의 입장에서 해방론적으로 접근하는 사회혁명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집합행동은 사회변동의 원인 또는 결과로서 생기는 사회적 모순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구조의 특정 부분을 재구성함으로써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행동하는 미조직적 또는 조직적 동원을 의미한다. 반면, 사회혁명으로서는 사회운동은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피지배계급의 권리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집단적 행동,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나 노동과 소유관계를 변화시키고자 대안적인 제도형성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다(장상환·정진상, 2001: 21~23).

이러한 전통적 구분과는 달리, 블루머(Herbert Blumer)는 일반적 사회운동, 특수한 사회운동, 표출적 사회운동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한다(김영정 편저, 1988: 62~80). 그의 분류에 따르면 일반적 사회운동은 노동운동, 청소년 운동, 여성운동 및 평화운동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 운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자신에 대한 개념화 및 자신의 권리·특권에 따라 변해가는 점진적 이동현상으로, 새로운 가치관의 출현과 관련된 “문화적 경향(drifts)”의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특수한 사회운동에는 목적과 방침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개혁운동과 혁명이 포함된다. 이 운동에서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이 중요한데 운동의 방향, 정당화, 공격과 방어에 무기, 영감과 희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세 번째, 표출적 사회운동은 종교적 운동과 유행(fashion)운동을 들 수 있다. 종교적 운동은 새로운 생활양식을 위한 프로그램과 세상의 도덕적 갱생을 위한 일종의 공동체 운동의 형태로, 사회 제도 또는 그것의 객관적 성격을 변화시키려 하지는 않는다. 유행(fashion)운동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자기표출적 특성을 가지며, 이를 통해 시대정신 또는 공통적 주관적 삶의 구성을 통해 새로운 사회의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나 자율적 참여라는 요소를 제외하면 다른 사회운동이 갖는 조직적, 문화적, 목적 지향적 특성을 갖지 않는다.

블루머의 분류보다 좀 더 세분화한 분류로 캐머론(William Bruce Cameron), 로젠탈과 슈워츠(Naomi Rosenthal & Michael Schwartz) 등이 운동의 지향성과 변화의 정도, 그리고 지리적 범위에 따라 제시한 바 있다. 지향성과 변화의 정도와 관련해서는 반동적, 보수적, 개혁적 또는 수정주의적, 혁명적, 도피주의적 또는 표출적 운동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중 표출적 운동의 경우, 비록 앞서 블루머도 사회운동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조직이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운동으로 인정함에 있어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박형신·정현주 역, 2006: 336~337).

나이드하르트와 루흐트(Friedhelm Neidhardt and Dieter Rucht)는 사회운동을 두 가지 유형, 즉 사회정치적 운동과 사회문화적 운동으로 구분했다. 사회정치적 운동은 권력 분배와 행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의한 사회변화를 시도하며, 따라서 도구적 행위와 정치엘리트와 구조에 대한 도전에 직접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운동은 양적 동원, 광범한 동맹 형성, 그리고 외부 지향적 경향을 나타낸다. 사회문화적 운동은 사람들의 의식과 실제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표출적 행동과 개별 행동의 집합적이고 장기 효과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간접적으로 이루려 한다. 이러한 운동 경향은 신념체계, 가치, 사회적 역할, 문화적 규범 등에 기원을 두고, 질적 동원과 내부지향적 특성을 나타낸다(1991: 450~451).

신사회운동론자인 뚜렌은 사회운동을 직접적 의미에서의 사회운동, 역사적 운동, 문화운동으로 구분한다. 직접적 의미에서의 사회운동은 기존 사회 유형 내에서 문화적 형식을 통제하기 위한 갈등적 노력을 대표한다. 역사적 운동은 어떤 사회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의 경과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된 행위이지만 순수하게 사회적 의미가 아닌 국가와의 관계에서 역사적 전환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이는 계급 차원을 공산주의 운동과 민족적-대중적 통치(regime)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민족적이고 현대화하는 운동을 조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앞의 사회운동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문화적 가치의 전환이 중심역할을 하는 사회운동의 유형으로서 문화운동 역시 역사적 운동과 같이 복잡성을 갖는다. 즉, 단순히 구체제와 현대 사이의 다툼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갈등이 가치 전환의 과정 내에서 발생한다. 여성운동이 좋은 사례가 된다(Touraine, 1985: 25).

이와 함께, 68혁명 이후 여성, 기존의 조직된 노동운동과 달리 반핵과 환경 영역에서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운동들이 다양한 계급, 특히 신중단계급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노동운동, 사회주의 운동과 구별하여 신사회운동으로 규정되어졌다. 신사회운동은 구사회운동과는 다른 이데올로기, 참여 주체와 동기, 조직구조의 특성을 가한다고 보았다. 특히, 주체의 측면에서 고유한 이데올로기적 속성과 전통적 노동조직들과의 갈등을 볼 때 신중단계급 운동의 특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Hirsch, 1990: 이병천 외, 1992: 151). 새롭게 등장한 이러한 운동에 관한 이론적 분석 역시 사회운동에 관한 접근과 같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는데, 그 특성을 구사회운동과 비교하여 표. 2.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2〉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의 특성

	구사회운동	신사회운동
이데올로기	물질적 행복, 부(富), 유토피아, 권리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 문화적인 것, 삶의 질, 더 많은 정치적 참여; 사적인 것의 정치화,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 기반	계급 기반의 정치적 분열; 사회적 집합체의 특수이익표출, 조직네트워크를 통한 통합	신중간계급, 유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가치 및 이슈에 기초한 분열, 유동적 소속감, 이데올로기적 연대
참여 동기	도구적 사회운동: 정치적 통합과 경제적 권리를 위한 합리적 선택	가치와 생활형식의 변화, 공공선의 추구를 통한 시민사회의 방어
조직 특성	중앙집권적 위계구조: 효율적 동원과 자원관리, 배타적/응집적/수혜자 중심의 결사체	분권적: 네트워크와 풀뿌리조직 반권위주의: 개방적이고 민주적
정치스타일	정치적 동원, 제도정치와의 연대 혹은 참여	정부의 제도적 틀 외부: 영향력의 정치, 자율성/무당파성 비관례적 정치행동: 비타협적 급진성/직접행동

출처: Dalton & Kuechler(1990): 박형신·한상필 역(1996: 28~36); Calhoun(1993: 173~215); Scott(1990: 16~35).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

이상에서 살펴본 사회운동의 개념과 전개과정, 그리고 유형은 한국의 풀뿌리공동체 운동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배경적 논의가 될 것이다. 이제 한국에서 풀뿌리운동이 형성되고 전개되어 온 과정을 통해 그 접목의 가능성을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한국에서 풀뿌리운동의 형성과 전개과정

한국에서 풀뿌리 운동의 형성과 전개과정에 관해서는 생태주의적 입장에서 분석한 이근행과 도시공동체의 전개과정을 분석한 정규호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다. 이근행의 논의는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서 생태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거시사회적 변화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공동체운동의 전개를 한국전쟁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정규호는 제도와 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196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논의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시기적 그리고 내용적 차원에서 상호보완을 통해 종합적으로 공동체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먼저, 이근행은 전후부터 1987년까지를 공동체운동의 모색과 형성기로 보았다(이근행, 2006: 61~64). 이 시기 동안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촌공동체가 와해되고 도시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 주변부로 이동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구적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한 특성을 갖는다. 이때 종교단체 등의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시기는 공동체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한 1988년부터 1997년까지로 지역과 생활세계에 대한 재인식이 시민사회적 욕구 및 역량과 결합되면서 다양한 공동체 운동으로 확산이 이루어졌다(이근행, 2006: 64~66). 민주화 이후 다양한 담론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은 생태담론이 사회운동의 한 흐름으로 자리하기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 정부에 의해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여성, 환경, 소비자,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사회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생활세계를 지키려는 지역공동체들의 실천과 생태담론의 확산, 생활협동조합의 본격화, 그리고 공동체운동의 다양화가 이루어진 특성을 갖는다.

세 번째 시기는 1998년 이후로 공동체운동이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며 발전하는 단계로 외환위기로 인한 IMF 구제금융 체제와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본격화가 이루어지면서 공동체운동은 위기와 위협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라는 특성을 갖는다(이근행, 2006: 66~72). 이 기간 동안 생활협동조합과 교육공동체 운동과 공동체간 연대활동이 활성화 되었다. 그리고 공동체 운동을 지원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문 기관과 단체가 형성되기도 했다. 다시 말해, 공동체 운동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산되었고, 다양한 실천들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지역과 부문을 중심으로 여러 형태의 운동이 분화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규호는 196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기간을 10년 단위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도시공동체운동의 전개를 분석한다. 1960년에서 1970년대는 도시공동체운동의 형성기로 이른바 달동네로 불렸던 도시 빈민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의 필요를 해결하며 적응하기 위한 자구적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 기간 동안 사회운동가, 종교인, 예술가 등이 교육, 복지, 문화, 예술 등의 활동을 통해 공동체 형성에 기여했으며, 주로 생산공동체와 신탁운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때 형

성된 공동체는 이후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저항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정규호, 2012: 13~14). 1980년대는 수도권 특히 서울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도시재개발이 진행된 시기였다.³⁾ 이 시기는 도시 빈민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공간을 지키려는 저항형 공동체운동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어서 1990년대는 방어형 공동체운동의 특성을 갖는 시기로 민주화 이후 다양한 생활세계의 문제로 관심의 확장이 이루지고 주체도 도시 중산층으로 확장되었다. 도시의 중산층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나타난 생활 주변의 환경오염이나 주거조건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정규호, 2012: 14~16).

이렇게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적응형-저항형-방어형으로 전개되었던 도시 공동체운동은 1990년대 후반에 IMF 관리체제로 전환되면서 시민사회는 경제적 위기와 이로 인한 사회적 위협의 증가에 대한 대안모형을 모색하는 창조형 공동체운동의 시기가 시작하게 된다(정규호, 2012: 16~17). 이 시기에는 자활공동체와 생활협동조합 운동이 확산되고 대안화폐운동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운동이 소개되고 일부 지역에서 시도되기도 했다. 이러한 운동은 지역, 마을, 혹은 동네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와 같은 OO만들기를 통한 공동체운동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정부 차원에서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은 2000년대 후반에 민-관-운동조직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협력형 공동체운동으로 나타났다(정규호, 2012: 17~19).

2000년대 후반의 공동체 운동은 그간의 활동을 통해 구성원 간 관계형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된 시민사회가 시민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정부를 포함하는 정치영역과의 협치(governance)의 형성을 통해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의 제도화를 이끌었다. 그 결과로 사회적기업육성법(2007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0년),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2011년) 등이 제정되는 성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이근행과 정규호의 공동체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논의는 비록 그 준거의 차이는 있지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자구적 공동체가 제도로부터의 지속적인 억압에 대한 한계에 직면하여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의 성격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위기라는 경제적 사회적 충격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은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

3) 이 시기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도시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러다임으로의 전환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공동체운동의 흐름은 크게 세 차례의 변화기가 있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변화는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의 기간으로 민주화 이행기의 기간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민주화 운동의 지역화, 그리고 환경, 여성, 인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이 형성되고 분화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변화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의 기간으로 IMF 구제금융 체제라는 경제적 사회적 혼란의 시기임과 동시에 민주화 이후 확장되어온 시민운동 전반에 대한 성찰의 시기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시민운동의 제도화 논란과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둘러싼 정치세력화 논쟁은 시민운동이 생활세계 강화를 위한 운동성 강화 기조로 전환하는 전환적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변화의 시기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을 중심으로 전후 1~2년의 기간 즉 2005년부터 2008년의 기간으로 2000년 이후 시민운동이 생활세계 강화를 위한 운동으로서 공동체운동이 제도화되기 시작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이 기간의 제도화는 1990년대 중반 기존 정치제도로의 정책적 흡수나 활동가의 포섭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운동 조직-주민-정부 간 협치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라는 특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마을, 공동체, 그리고 풀뿌리운동의 의미

1) 마을공동체

마을은 ‘곳’이라는 장소개념과 함께 생산, 생활, 놀이 등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마을과 마을공동체는 동일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전통적인 마을공동체는 성원(혹은 주민)들 간에 뚜렷한 목적의식을 공유하지 않지만, 높은 지역성에 기반을 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역성이란 오랜 기간 누적된 역사적 경험의 산물로서 전통이 지속되고 성원간의 전인격적 관계가 자리 잡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이재열, 2006).

〈표 2. 3〉 지역성과 목적에 따른 공동체의 유형

구분		목적성	
		낮음	높음
지역성	높음	마을공동체	코윈 야마기시 공동체 신양촌
	낮음	협동조합 직능단체	이념적 결사체 시민단체

출처: 이재열(2006)

전통적인 마을공동체와 달리 도시 공동체는 다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동성과 익명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의 삶은 농촌과 달리 일과 가정이 분리되어 있으며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문화와 행정단위인 ‘동(洞)’도 인구규모가 크고 행정 편의에 의해 조직되거나 재조직되었기 때문에 주민 간 결속감이 매우 약한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박재복 외, 2014: 12).

마을공동체의 형성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김찬동 외, 2012; 여관연, 2013). 1단계는 참여활성화 단계로 주민들이 공동체에 대한 이성적·감정적 결합을 통해 소속감을 갖게 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2단계는 공동체성 구비단계로 이동이 빈번하지 않는 구성원들이 동일한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공동체성을 갖게 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공동체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구체적인 사업과 연계시키게 된다. 3단계는 준주민자치적 단계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식적·비공식적 형태로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상호작용을 함과 동시에, 구성원들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4단계에서는 준단체자치적 단계로 대의 기능까지 구비한 공동체로 성장하여 공식적인 행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표 2. 4〉 마을공동체의 성장단계

성장단계	키워드	사업주체별 내용
1단계 (참여활성화단계)	공동체에 대한 애착	공동체에 대한 감성적 결합으로 소속감 및 편안함 등의 느낌을 가지게 됨
2단계 (공동체성구비 단계)	유대감, 호혜성, 응집력	공동체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구체적인 사업과 연계시키며,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짐
3단계 (준주민자치적 단계)	운영체제, 자원, 서비스 공급	구성원들의 복리증진이나 생존권을 확보하고 지역가치의 재발견이나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단계
4단계 (준단체자치적 단계)	준대의성, 시설공급, 행정권한 이관	구성원들만으로 자치가 가능하며, 행정은 지원자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단계

출처: 김찬동 외(2012: 13~14)·여관연(2013)

따라서 마을공동체의 성장단계는 구성원들의 참여정도에 따라 서로가 소속감을 느끼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공동체를 지속하려는 작은 실천, 구성원들의 복리증진, 이후 대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공동체운동

마을의 의미와 마을을 단위로 하는 공동체의 형성에 관해 이상과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공동체는 무엇인가에 관해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동체라는 단어는 사회의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같은 좁게는 취미를 갖는 동호회나 직장 문화를 설명하는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와 달리 민족공동체 혹은 문화공동체와 같이 넓은 수준에서도 종종 사용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을은 공간의 의미와 함께 행동의 동일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동체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서구에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퇴니스는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1887)에서 유럽 사회가 공동체(Community)에서 사회(Society)로 이행하는 과정을 이념형적 분석틀을 동원해 분석한 바 있다(이근행, 2006: 9). 이

후 힐러리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공동체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로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통의 연대를 공동체가 갖는 특성으로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어떤 지리적 영역 내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부가적인 공동의 유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그의 정의는 이후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지지되어 이러한 세 요인을 공동체의 특성으로 이해하는 견해로 자리를 잡았다. 예를 들어, 토크빌은 공동체를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 바깥에서 개인들과 집단 간의 사적 또는 자발적 묶음으로 조직되는 사회생활”로 보아,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공적 시민덕목의 고취를 통해 무임승차자(free rider)를 배격하는 시민운리를 배양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버마스의 경우 사회적 행위자들의 공론 장으로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적 의사소통구조에의 참여를 통해 사회의 공공성 증대와 민주주의의 신장을 가져온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사회적 자본의 정치적 효과에 관해 연구한 퍼트남은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간 상호 신뢰와 자발적 협조를 통해 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퍼트남은 민주주의 정착과 제도적 수월성의 확보는 공동체의 문화와 사회적 신뢰 형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한다(이근행, 2006: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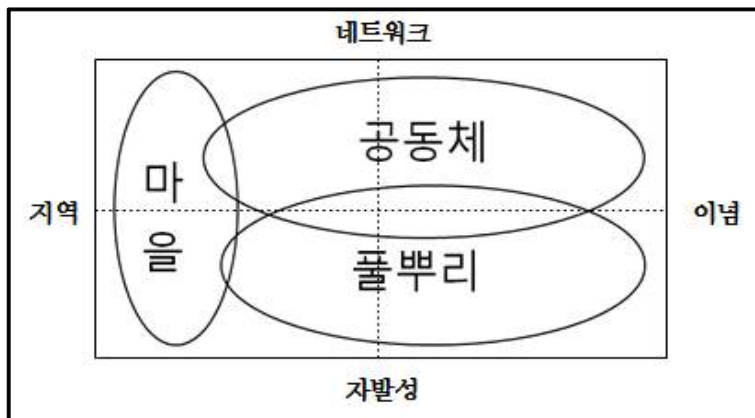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기업 등은 구성원 간 친밀감을 바탕으로 형성된 마을공동체의 성격을 갖고 공동체의식의 형성과 공공성 증대의 메커니즘을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김상돈, 2014: 20~21).

3) 풀뿌리운동

풀뿌리(grassroots)는 서구사회에서 분권자치운동 혹은 국가권력이나 기득권에 대항하는 시민운동의 행위자를 지칭하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민초(民草) 혹은 때에 따라서 민중(民衆)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풀뿌리는 ‘특별히 권력을 지니지 않은 일반 대중’을 의미한다(박홍순, 2013: 73). 따라서 풀뿌리운동이라는 것은 이들에 의해 행해지는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에서 풀뿌리운동의 의미와 전개에 관해서 박홍순(2013: 72~92)의 논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민주화 이후 풀뿌리운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민주화 이행기를 거치면서 시민사회는 경제 정의, 환경, 여성, 권력감시 등 전국 수준에서 사회변화 방향의 거대담론 형성과 국가 수준에서 기존 질서와 권력에 대한 감시활동과 같은 거대한 운동을 중심으로 전개해 갔다. 그러나 1990년 후반부터 정체되기 시작한 시민운동 확장의 문제와 경제위기 상황 등으로 인해 전환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1991년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민주화 운동 참여 활동가나 운동단체들 중 일부가 지역 수준에서 여성, 환경, 먹거리, 그리고 교육 등과 같은 담론을 배경으로 지역 권력감시와 직접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으로 전개된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풀뿌리운동은 생활문제를 중심으로 자발성에 기초하여 언론을 통한 쟁점화나 법제도의 변화와 같은 이른바 중앙으로 인식되었던 전국수준 운동이 보였던 중앙집중적이고 가시적 성과위주의 운동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나 생활의 만족도와 같은 운동의 과정에서 의미를 찾으며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다(박순홍, 2013: 74).

한국에서 협동조합 운동이나 마을공동체 운동 등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지역공동체 내에서 상호 신뢰, 공감, 자율성, 연대, 공공성, 안전 등의 가치를 통해 시민사회 내적인 생활관계의 성숙과 민주적 발전을 지향하는 “내부지향(시민사회)의 성격”이다. 다른 하나는, “외부(체계) 지향적 성격”으로 기존의 권력과 제도정치, 그리고 경제관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성격을 갖는다(정태석, 2015: 45). 이와 같은 성격은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도시지역의 풀뿌리 공동체 운동을 사회운동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2] 마을운동, 공동체운동, 그리고 풀뿌리운동의 특성

이상의 살펴본 바와 같이 풀뿌리운동, 마을운동, 그리고 공동체운동은 그 의미나 내용에서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미시적 차원에서 운동의 중심 특성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림 2. 2는 이들의 특성을 통해 위치를 개념화한 것이다. 마을운동은 자발성과 지역, 그리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이념성은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다르게 풀뿌리운동과 공동체운동은 지역성은 마을운동에 비해 약하지만 여전히 지역적 특성을 갖는 가운데 이념성과 네트워크성이 더 큰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공동체운동의 경우 때에 따라서는 자발성보다는 동원기제를 통해 작동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단계적 공동체의 형성은 그 내에서 공통된 관심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호관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감성적 집단성만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동시에 공동체화는 영역화(領域化)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적인 집합상태에서 유기적 결사체로 전환되고, 참여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구성원 간 관계의 형성을 통해 지속성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이신행, 2006: 51~52). 따라서 풀뿌리운동으로서 마을공동체의 형성은 기존 질서의 변동을 목적으로 공통된 정체성을 가진 행위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된 행동이라는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Goode, 1992: 335).

제3절 풀뿌리공동체 운동의 사례

1. 석교동: 마을어린이도서관 기반

석교동은 대전의 구도심으로 1990년대부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없어 전체 가구의 80%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특성을 갖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풀뿌리운동은 일상적 만남을 이어가던 주부들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일상적 만남을 통해 일상생활과 자녀교육 등과 관련한 고민을 나누고 수다모임을 하거나 찬거리를 나누기도 하는 일상의 모임을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외부로부터 주어진 우연한 계기를 통해 시작한 어린이도서관 사업에서 시작해 사회적협동조합 결성에 이르기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도시의 확장에 따른 구도심 지역에서의 풀뿌리공동체 운동이 갖는 특성을 도출해 본다.

1)마을의 사회경제적 환경

석교동은 대전의 남동쪽에 위치하면서 대전천과 보문산 사이에 위치해 있고, 구도심 중 하나이다.⁴⁾ 석교동의 인구는 1980년에 20,625명에서 1990년에 28,313명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5년에는 17,527명까지 감소했다(국가통계포털; 임병호·지만석, 2015: 34). 1990년부터 시작된 인구감소는 대전 둔산동 등 서부지역 개발에서 영향을 받은 바 크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는 인접한 동구 가오지구 개발의 영향도 큰 것으로 파악된다(임병호·지만석, 2015: 34). 이러한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인구의 증가도 진행되었다. 석교동의 65세 이상 고령자비율은 1998년 5.4%로 중구 전체 6.1%, 대전시 전체 5.0%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2014년에는 15.6%로 중구 전체 13.0% 및 대전시 전체 9.8%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임병호·지만석, 2015: 35).

4) 행정동으로서 석교동은 석교동, 호동, 옥계동 등 3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교동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라는 특성과 함께 주거형태에서도 독특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의 가구 수는 2015년을 기준으로 5,829호인데, 이 중 단독주택이 2,553호로 44%, 다세대주택이 2,095호로 36%를 차지해 두 유형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반면, 아파트는 513호로 9%에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중 60% 정도가 아파트인 사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국가통계포털 자료 재구성).

이와 같은 마을의 특성으로 인해 도시의 팽창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서구나 유성 지역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이나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에 대한 욕구는 주부들이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졌다.

2)운동의 형성 계기

석교동에서 풀뿌리운동은 교육의 문제를 공공도서관운동으로 해결해 보고자하는 평범한 주부들의 의지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의 의지는 2005년 3월 석교동 알짬마을 어린이도서관(이하 알짬도서관)의 개관으로 현실화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을 내 몇몇 주부들의 욕구와 대전지역 시민사회운동단체의 지원이 결합한 결과였다. 이를 주체요인과 외부환경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주체요인의 차원에서 알짬도서관의 개관은 마을의 열악한 교육조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집단의 존재와 교육과 어린이 책에 관심이 있었던 인물의 역할이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집단적 수준에서 석교동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도심으로서 인구가 축소되고 사회복지관과 같은 사회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좋은 학군을 찾아 마을을 떠나기도 했다. 알짬도서관이 개관되는데 핵심집단이 되었던 이들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또래의 아이들을 두고 같은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주부들이었고 같은 연립주택에 거주하면서 일종의 품앗이 공동육아를 하고 있었다. 이들 역시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마을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집합적 행위를 통한 해결방안의 모색에 이르지 못하고 개별 수준에서 해소하고 있었다. 강영희와의 인터뷰는 그 한 사례를 보여준다.⁵⁾

5) 강영희는 마을어린이도서관 사업을 제안하고 알짬도서관 초대 관장을 지낸 인물로, 도서관운동 이전에 대전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기도 했고 어린이 책과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계기라고 하면 14채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에 살았는데, 그 중 7가구의 아이들이 또래아이였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공동육아를 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한 집에 키우고 엄마들이 무언가를 배우러 다녔다. 맡겨 놓은 집에 4시 정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반찬을 한 가지씩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 한 가정에서 2주에 한 번 정도 아이를 보게 되었다. (중략) 동네에서 저를 잘 챙겨주는 언니의 아이를 공부시키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의 성적이 오르게 되니 다른 집에서도 아이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해 왔다. 과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친구들이 같이 오기도 했다. 그런데 집이 너무 좁아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한계가 있었다⁶⁾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환경의 작용은 도서관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외부환경은 세 가지의 요인이 있었다. 하나는 범골어린이도서관이라는 사설 어린이문고를 운영하던 관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문고의 책을 가장 잘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강영희에게 책을 기증한 것이다.⁷⁾ 두 번째는 작은도서관 만들기 운동이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세 번째는 대전지역 시민사회운동의 제안과 지원이 있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인이 동네의 주부들로 하여금 도서관운동으로 나서게 한 것은 강영희라는 매개자의 역할이 있었다. 강영희는 출산을 계기로 노동운동을 그만 두었지만 교육과 어린이 책읽기에 관심을 두고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의 도서관을 견학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범골어린이도서관과 모퉁이도서관 등 지역의 사설어린이도서관 관계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정리하면 마을 내 형성되어 있던 문제의식을 가진 집단이 있었고, 외부환경의 조건을 이들에 전달할 수 있는 매개자가 이들의 연계를 조직함으로써 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석교동에서 풀뿌리운동의 전개과정을 형성기, 확산기, 재조직기로 나누어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6) 강영희의 인터뷰(2016.9.23.)중에서

7) 이 책 기증이 있기 이전에 강영희는 범골도서관장과 공공마을도서관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함께 하자는 제안도 한 바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3)전개과정

(1)형성기: 2004년~2009년⁸⁾

알뜰도서관의 형성기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주체의 형성과 이념이 구체화되는 시기로 2004년부터 2005년 3월 도서관 개관까지로 볼 수 있다.⁹⁾ 이 기간 동안 주체들의 정체성 형성, 자원의 마련, 연대관계의 형성,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 마련 등이 이루어졌다. 먼저, 주체의 정체성 형성은 6명의 평범한 학부모로서 주부들이 도서관의 마을교사로서 정체성을 수립해 가는 과정이었다. 이들의 정체성은 공공성과 도서관 등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2004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도서관에 관해 학습을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다. 자원의 마련은 공간과 재정, 그리고 자원봉사자 모집 등이었다. 공간은 동사무소 등에서 운영하고 있던 마을문고나 빈 집 등의 사용 가능성을 알아보았지만 거절을 당했다. 그러던 중 중구자활후견기관이 동네로 이전해 왔다. 이에 지인을 통해 일부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고 이후 중구자활후견기관이 이전을 하면서 전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 도서관 환경조성은 건축노동자인 동네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필요한 재정은 초기에 참여했던 주부들이 아이들의 학원을 하나씩 끊으면서 그 비용을 매월 도서관 기금으로 기부를 하고 후원회원도 조직을 했다. 이와 함께 2004년 5월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중심으로 결성된 어린이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와 연대관계가 형성되면서 대전의제21로부터 500만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운영 프로그램은 어린이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와 함께 대전지역 공·사립문고 실태 조사와 토론회, 자원봉사자 교육, 지역 대학교수 등으로부터 자문 등을 바탕으로 마련을 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2004년 12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2005년 3월에 정식으로 개관을 하기에 이른다. 당시의 도서관운영과 관련 조직은 그림 2. 3과 같이 구성했고, 개관 후 2005년 8월까지 프로그램은 6개 범주로 나누어 표 2. 5와 같이 다양하게 진행하거나 계획되었다.

8) 이하 형성기는 지희숙·양병찬(2011: 185~192)의 글과 강영희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종합하여 요약하였음을 밝힌다.

9) 비록 강영희는 2001년경부터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심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대전 지역 몇몇 도서관에서의 봉사활동, 전국의 사례를 둘러보는 등 활동을 했지만 석교동에서 본격적인 도서관운동의 시작은 2004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석교동에서 도서관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풀뿌리운동의 시작을 이 시기로 본다.



[그림 2. 3] 알짬도서관 조직체계(2005년 3월)

출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2005: 17)

<표 2. 5> 알짬도서관 활동 내용(2004년 12월~2005년 8월)

능동적 독서활동 프로그램	즐거워 글쓰기 교실	- 매주 목요일 / 초등 3-4학년 15명 참석 - 끝말잇기의 모둠별 글쓰기, 사진보고 기사문쓰기 등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 글쓰기에 흥미를 갖게 함 - 오랫동안 지역에서 글쓰기강사로 일하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함
	동화표현놀이	- 매주 월요일 / 초등 1-2학년 14명 참석 - 연극적 요소를 도입하여 책의 내용을 역할극의 형태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
	놀토 읽기,쓰기교실	- 매주 4째 주 토요일 / 1-2. 3-4. 5-6 모둠별 각 15명 참석 - 주5일제로 인해 매월4째주 토요일이 자율학습기간으로 지정 -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우리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지역에 있는 현직중학교교사, 대학교강사들로 이루어진 4명의 교사가 자원봉사
	책읽어주기, 빛그림상영	- 수시로 자원봉사자들이 책읽어주는 일과 빛그림을 상영 - 하반기에 책읽어주는 부모를 모집하고 모임활동으로 진행예정
문화체험 교실	알짬 테마기행	- 1차 : 영동국악박물관(4월23일) / 2차 : 청주고인쇄박물관(7월9일) - 역사와 문화를 박물관에서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 숙제에 밀려 설명판에 있는 내용을 베끼는 행동을 제지하고 모둠별 과제를 통해 하나만 가슴에 담아오기를 함 - 알짬열매기행도우미6명이 함께 진행 - 박물관 주변에 대체로 숲이 있어 자연물 놀이를 함께 병행
	놀면서 배우는 우리문화	- 1월 24-27일 / 25명 참석 - 방학동안 전통문양, 탈춤, 염색, 연만들기 등 전통문화를 배움 - 알짬열매강사단이 진행
	엄마 어렸을 적에	- 8월 8일-10일 / 15인 참석 - 버들피리만들기, 자연물이용공예품만들기, 짚으로 달걀꾸러미만들기 등 엄마들이 어렸을 적 했던 놀이문화 - 알짬열매강사단이 진행
	가족놀이교실	- 매월 둘째주 토요일 / 누구나 - 쌍옷놀이, 고누놀이등 전통놀이 중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함께 익혀보는 시간 - 가족놀이연구소장이 자원봉사

부모교육과 먼저 배워 남기기	우리아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2월 21일 / 부모25명 - 현직교사와 초등1학년에 입학하는 엄마들의 만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잘 못된 인식을 없애고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 지에 대한 교육
	먼저배우기: 칼라믹스	- 6월 ~ 8월 : 매주 목요일 / 13명 참석 - 낮은 학력으로 인해 아이의 교육을 학원에만 의지하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해소하고자 엄마가 먼저 배우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도서관 교실	- 6월 22일부터 매주 수요일 6강 진행 - 어린이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과제 등에 대한 교육과 토론
소외지역 유치원 도서관 견학프 로그램	동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동산유치원은 3명의 자폐를 앓고 있는 장애우 - 자원봉사자들이 한명씩 책을 읽어주고 호일과 풍선을 이용한 오감놀이를 진행
	동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동명유치원의 경우 행정구역상 대전이나 도시와 떨어진 시골유치원으로 도서관이나 서점등 문화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 함 - 빛그림상영과 함께 가족놀이를 진행하고 도서관의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
타단체와 의 연대 프로그램	문화매개자 워크샵	- 2월 19~20일 대전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교육에 대한 각 분야의 체험교육 / 5명 참석
	연극아 놀자	- 전국연극제 워크샵 / 4월 16일-5월 28일(7강) - 6월6일 : 대전예술의 전당 공연 / 30명 참석
	어린이날 행사 여름방학 캠프	- 참여자치시민연대 + 생명의 숲 / 40명 참석 - 생명의 숲 : 8월 11-12일 / 숲 속 놀이 학교 : 32명 참석
	재미있는 책놀이 워크샵	- 대전충남민예총 : 8월 16일 / 15명 참석
자원봉사 모임 및 기타활동	열매기행도우미	- 6명 활동 / 격주 모임 / 박물관 사전답사와 박물관견학관련 학습
	알짹 씨앗지기단	- 어린이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모임 / 10명 / 청소, 대출업무 등
	알짹 열매지기단	-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도우미 : 4명 - 청소와 도서정리 등 도우미 : 4명
	제주나누기	- 닥종이 공예 : 4회 / 10명 참가 - 비즈공예 : 4회 / 12명 참석 - 숲놀이 진행 : 7명 참석 / 3회 진행 - 벽화그림그리기 - 엄마들이 취미로 배운 제주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활동 - 제주나누기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은 하반기 제주권 자원봉사자모임을 결성할 예정
	나눔장터	- 5월 27일 / 알짹 앞마당에서 - 회원들이 버리기는 아까운 물건들을 기증한 수익금은 모두 도서구입에 사용/ 아이들의 경우 수익금의10%기증을 원칙으로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사는 경제교실 운영

출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2005: 14~15)

두 번째 시기는 도서관을 설립한 후부터 2008년까지 약 3년의 기간으로 도서관 운영의 안정화와 지역과의 연대를 강화해 갔다. 운영의 안정화는 재정의 확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3,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07년에 대전시민사회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반딧불터사업으로 노동부로부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되

었다.¹⁰⁾ 이외에도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와 시민사회연대회의에서 지원한 풀뿌리 시민운동 사례공모에 2007년에 당선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에 활동가들이 외부 강의에서 받은 강사료의 일부를 운영비로 기부하고 마을주민들로부터 후원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엄마들의 십시일반 기부가 가장 크고 중요했다.¹¹⁾

지역 사회와의 연대는 알짬도서관을 일 년 정도 운영하면서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시 전역에 마을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해 2006년 7월에 마을어린이도서관 추진단 결성을 제안하면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 제안은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 만들기모임으로 구체화되어 2006년 9월부터 자원활동가 교육과 모금 등 활동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2008년까지 8개의 마을도서관이 설립되는 성과로 나타났고,¹²⁾ 이 기간 동안 알짬도서관은 점차 지역에서 마을어린이도서관 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참여자들의 대외활동이 늘어났다. 반면, 규모와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재정수요도 증가했고, 관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외부활동 증가와 회원 수의 증가 등은 내부의 연대감이나 공동체성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일부 활동가들이 지역 내 협동조합 등으로 이직을 하는 등 이탈이 발생하면서 특정 활동가에게 업무가 집중되거나 가정생활과 도서관 활동 간의 갈등, 그리고 아이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활동이 위축되는 등 복합적인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부의 위기상황에 대해 한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기도 했다.

사실, 내 애들이 알짬도서관을 이용할 때는 괜찮은데, 애들이 중학교 가고 나니까 아무래도 좀 소극적으로 되죠.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리? 마을 애들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남아 활동해요. 그런 면에서 애들 활동도 좋지만, 마을 엄마들의 활동과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활동가로서의 전문성을 더 높이고 싶은 생각,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직업과 관계된 것들..... 이런저런 고민이 많죠. 또 우리 동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활동을 어쩔 수 없이 접은 경우도 있어요.¹³⁾

10) 2007년 반딧불터사업사업단의 결성은 마을어린이도서관을 기반으로 지역통화운동, 공동육아, 사회적소기업 등에 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주민운동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대전시민사회연구소, 2007: 4).

11) 강영희님의 인터뷰(2016.9.23.)중에서

12) 당시 설립된 도서관은 꿈터(월평동), 달팽이(도마동), 작은 나무(내동), 마루(법동), 꾸러기(비래동), 어깨동무(홍도동), 땅콩(갈마동), 그리고 대청 호숫가 마을도서관(추동) 등이었다.: 지희숙·양병찬(2011: 189).

13) 지희숙·양병찬(2011: 190)에서 재인용

조직의 위기는 이와 같은 내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석교동 내에 지역아동센터의 설립과 석교초등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교육환경의 변화도 원인이 되었다. 이상의 복합적인 현상들로 인해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지 않고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짐에 따라 조직을 재정비하고 정체성의 재정립을 모색하는 세 번째 시기로 전환하게 된다.

세 번째 시기는 조직의 재조직과 새로운 사업이 모색된 시기로 2009년을 중심으로 볼 수 있다. 재조직의 중심은 마을도서관의 비전과 정체성에 대한 재검토에 있었고,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점검하면서 마을의 복합적인 교육과 문화, 돌봄과 보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주민소통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네 가지로 구체화 되었다. 하나는 알짬도서관 내부 소통방식의 변화로 설립 초기 공공성의 강화에 중심으로 두어 아이들과 활동가들 간 혹은 활동가들 사이의 사적 관계를 배제하려 했던 것에서 다양한 사적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즉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과 자원봉사자 간의 관계를 이모 혹은 이웃 아줌마의 차원에서 친숙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학생 중심에서 주민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세 번째는 교육품앗이 활동으로 마을성장학교를 개설했다. 이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활동가, 학부모, 그리고 아이들이 공동체를 통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네 번째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주민들로부터 “개미모금” 통해 후원자를 늘려 운영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했다. 그 결과 2011년 5월을 기준으로 알짬도서관 재정의 70%가 후원금으로 충당되기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교동에서 풀뿌리운동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형성기 동안 문제의식의 도출, 조직의 공식화, 공식화 이후 직면한 위기 상황에 대한 재조직의 과정을 모두 경험했다. 즉 사회운동 전개의 한 주기를 모두 경험한 것이다. 한편, 조직의 위기 상황에서 재조직은 이후 알짬도서관의 사업이 학생 중심에서 주민을 포괄하는 마을운동의 수준으로 확산되는 바탕이 되었다.

(2)확장기: 2010년~2014년

석교동에서 풀뿌리운동은 알짬도서관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었지만, 그 시작부터 마을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전개과정에서 마을의 새마을부녀회 등과 같은 기존의 관변 혹은 반관변 단체들이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도 했다.¹⁴⁾ 이러한 태도는 공동체운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동체성의 과도화 혹은 과소화 편향으로 설명되어지기도 한다.¹⁵⁾ 공동체 운동이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 운영이 아무리 성공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과와 결실은 참여자들에게 한정되고 세상의 변화와는 관계를 갖지 않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신명호, 2003: 151). 이러한 결과는 신념체계, 가치, 사회적 역할, 문화적 규범 등에 기원을 둔 풀뿌리운동이 질적동원과 내부지향적 특특성을 가질 때 두드러질 수 있다(Neidhardt and Rucht, 1991: 450~451).

석교동의 경우 시작단계에서 도서관의 공공성에 관한 고민을 했음에도 마을운동이라기보다는 도서관운동의 수준에서 인식되었던 경향이 있었다. 다시 말해, 시작단계에서 “동네를 살펴볼 여력이 없었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지 마을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도서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참여확대와 스스로 프로그램의 확장을 시도하지 못했다. 이로부터 발생한 “마을과의 턱”을 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여 조직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¹⁶⁾ 이러한 위기는 정체성 재정립과 조직 방향의 재설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2010년부터 확장기로 접어든다. 확장기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로 볼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교육공동체 한뼘더, 석교마을신문, 한발두발공정여행, 그리고 청소년문화카페 등 다양한 사업들로 확장해 갔다.

교육공동체한뼘더는 확장기 동안 알짬도서관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2009년 재조직을 통해 진행되었던 품앗이마을성장학교의 성과를

14) 강영희의 인터뷰(2016.9.23.)중에서

15) 박홍순은 이러한 편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2013: 78).

“풀뿌리운동이 갖는 공동체성의 현실적 근거로부터 두 방향의 서로 다른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하나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절대화와 ‘소박한 일상에의 집착,’ ‘사람 관계에만 집중’과 같은 공동체성의 과소화 편향이다. 다른 하나는 ‘이념적 순결성,’ ‘의도되지 않은 배타성,’ ‘근대문명이 이룩한 성과에 대한 부정 내지는 도피’와 같은 공동체성의 과도화 편향이다. 두 방향 다 결과적으로 ‘그들만의 리그’로 귀결될 수 있다.”

16) 강영희의 인터뷰(2016.9.23.)중에서

이어서 설립되었다. 알짜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부모 중 다수가 맞벌이를 하는 가정으로 운영시간 이후 방치되기 일쑤였기에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방과 후 대안마을학교로 운영된다. 또한 마을의 장기실업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 마을교사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012년과 2013년에는 대전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임병호·지남석, 2015: 51-52).

석교마을신문은 2012년 12월에 창간준비호를 발행한 후 32호(2016년 4월)까지 발행을 지속해 오고 있다. 석교마을신문은 마을성장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 간 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마을 속 보물찾기를 해서 마을을 다니면서 우리 마을의 잘 알지 못했던 작은 것들부터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을 했어요. (중략) 두 번째가 마을에서 사람을 만나다였어요. 우리가 찾은 이런 소중한 마을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상처를 줌 받았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인사도 안하고 뭐도 안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막상 마을에서 사람을 만나다를 하면서 어른들을 찾아가는 인터뷰 과정들을 했는데 어른들이 잘 맞아 주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물론 바쁘셔서 일수도 있지만 (중략) 근데 이게 딱 어른들만의 문제일까 또 아니면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일까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마을을 또 다시 살펴보니, (중략) 작은 마을임에도 정말 바쁜 생활에 마을에 소통이 정말 없는, 가족 간의 소통도 많이 없는 상황인데 마을에서는 그게 더 크구나 생각이 들었어요.¹⁷⁾

즉 스스로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마을 주민들 간 소통이 많지 않았던 것이다. 마을신문을 만들기 위해 2012년 4월과 6월에 기자단 교육을 통해 초등학교에서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마을기자단을 결성했고, 2013년 5월에 창간호를 발행했다. 처음에는 마을기자단으로 시작했지만 인터넷방송 진행 등 규모가 커지면서 석교마을미디어센터로 발전했다. 그리고 2013년과 2014년에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대전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도 했다(석교마을신문 홈페이지). 대전시의 재정지원이 중단된 2015년부터는 유료광고와 자발적 구

17) 박재복·김도균 외(2014: 95~96)에서 재인용

독료를 받고 2014년 9월에 구성된 주민 자문위원회의 후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정을 마련하고 있다.

2013년에 시작된 한밭두밭마을공정여행은 석교마을신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을 내에 문화재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보자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5: 46). 이후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공동체의식 제고와 시니어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 사업은 2013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2014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으로 지정을 받아 석교마을여행지도, 생태사랑지도, 마을여행상품 개발을 진행했다. 2014년 12월에는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갖고 법인으로 전환을 했다(석교마을신문, 2014.12.: 5면).

청소년 문화카페 24/7은 알짜도서관에서 초등학생 시기를 마치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청소년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기 위해 2년여의 노력과 고민 끝에 2013년 7월에 문을 열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놀이 공간 마련을 위한 시도는 2012년에 아름다운 재단의 ‘청소년 자발적 사회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실행되었다. 비록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놀이공간을 원하는 7명의 청소년들이 다시 모여 문화카페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어른들이 청소년의 놀거리를 컴퓨터, 핸드폰 게임으로 만들어 놓고 이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다른 놀거리를 주지 않는 어른들은 조금 닳하기도 하면서 잘 놀고 잘 즐길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기존의 청소년 문화카페들 대부분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청소년은 소비의 주체일 뿐이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이 공간에서 마을도서관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안전마을위크숍과 마을미디어기자단 활동 등도 함께 하고 있다(임병호·지남석, 2015: 55). 24/7은 24시간 7일 내내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석교마을신문, 2013. 6.: 7면).

이상과 같이 확장기 동안 많은 조직들이 알짜도서관의 경험으로부터 설립되었고, 그간의 경험과 연대관계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시끌벅적 석교동마을축제 등 공동체협력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지남석·임병호·이시영, 2015: 343) 마을대학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과 조직으로의 확산은 마을 내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조직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2015년에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석교마을N사람이 출범을 하여 다시 한 번 재조직기를 맞게 된다.

(3)재조직기: 2015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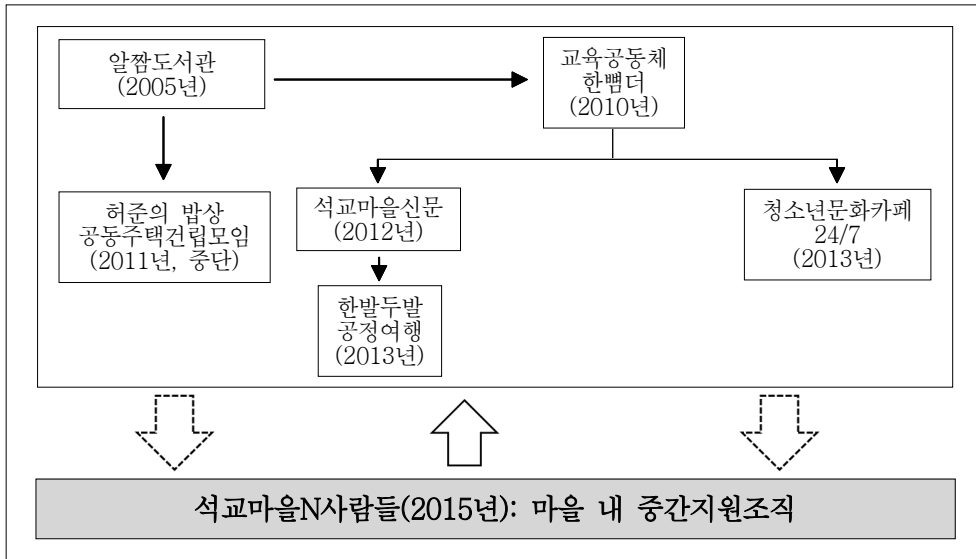
도서관에서 출발한 풀뿌리운동은 10여년의 활동을 통해 기반을 운동공동체 내에서 마을 전체로 확장되어 갔고 다양한 조직과 사업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소규모 운동체간 그리고 운동체와 마을 주민 간 연계를 확대하고 지원할 조직이 필요해졌다. 사회서비스협동조합에 관한 논의는 2014년 12월 주민이 주민을 돕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회의를 통해 시작되었고, 2015년 4월에 행정자치부의 인가를 받아 2015년 7월에 설립총회를 개최했다. 석교마을N사람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서비스협동조합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사회서비스 분야 협동조합 모델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었고 실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석교마을신문, 2015.8: 3면).

<표 2. 6> 석교마을N사람들의 주요 활동 내용

구분	활동명	주요 내용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조사 사업	- 마을의 역사·현황·생태환경 등 조사 - 마을학교 운영
	커뮤니티 매핑 사업	- 커뮤니티 매핑가 마을자원(마을경제) 활성화
	마을포털 구축과 운영사업	- 마을정보 아카이브 구축, 마을포털 구축 - 인적·물적 자원이 망라된 커뮤니티매핑
	마을의제 발굴을 위한 원탁회의	- 안전마을만들기 주민 원탁회의 - 마을의제 발굴사업
마을 평생교육	마을문화사업과 마을동아리 지원 사업	- 마을커뮤니티와 마을문화 동아리 - 마을 문화사업 및 동아리 지원
	청(소)년 창업학교	- 직업 및 창업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마을리더 교육	- 주민, 교육·문화·예술 등 분야별 주민 동아리 활동 및 마을의제 발굴교육
마을순환경제 활성화	마을도서관 운영 사업	-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 북시티 교육과정
	유희공간 공익적 활용 지원사업	- 빈집, 빈사무실 프로젝트 - 마을포털을 통한 공간과 사업의 연계
	마을농업과 마을연계 사업	- 마을장터 개설, 생산자 소득 증대 - 도시마을농업 발전방안 워크숍
	마을공정여행협동조합 운영 지원	- 주택개선 마을공동체기업 창업학교 - 주택개선 마을(공동체)기업 사업 전개
기부금 조성·배분	마을화폐 도입을 위한 실험 사업	- 품앗이의 화폐로의 확대 - 우리마을 화폐 도입 연구 및 실험 사업
	정관에 따른 기부금 조성 및 배분	- 기부금운영위원회 설립 운영 - 마을공동체기업 등의 참여 활성화

출처: 지남석·임병호·이시영(2015: 344)에서 재인용

석교마을N사람들의 사업은 크게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평생교육, 마을순환경제 활성화, 그리고 기부금 조성과 배분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른 활동목표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협동, 주민 스스로 문제해결, 주민 전체 삶의 질 향상과 공익적 마을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향상, 수익과 고용의 창출과 마을경제 생태계 구축 지원으로 수립되었다(임병호·지남석, 2015: 61).



[그림 2. 4] 석교동 풀뿌리운동 조직의 전개과정

시작은 몇몇 평범한 주부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형성기 동안 풀뿌리운동 공동체 내 활동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확장과 재조직을 거치면서 관심의 영역이 외부로 지향하게 되었다. 이는 마을살이를 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의 바탕 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석교동에서 알짚도서관으로부터 시작된 풀뿌리운동은 동네 주부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하고 활동가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장으로서 마을 내부로부터 자원을 동원하는 내발적 성장의 구조를 갖는 특성을 갖는다(양병찬·지희숙·박혜원, 2011: 220).

2. 중촌동: 여성운동에서 마을여성리더의 역할 찾기

중촌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구도심과 신도심의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다른 구도심에 비해 대전 서부지역으로 도심의 확장으로 인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늦게 받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주거형태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급속한 인구감소를 경험해야 했다.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기반환경과 교육여건의 조건은 젊은 층이 신도심으로 이주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지역에 위치해 있던 여성운동단체의 존재와 이들의 활동은 이 지역에서 풀뿌리운동이 시작되는 기반이 되었다. 다시 말해, 사회운동 단체와 주민들이 결합하고 다시 마을 내 여성리더십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운동의 지역화가 나타난 풀뿌리운동 유형으로 볼 수 있다.

1) 마을의 사회경제적 환경

중촌동은 지리적으로 대덕구, 서구와 인접해 있고 대전천과 유등천이 합류하는 지역으로 고종 32년 18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전군 외남면에 편입되어 중촌리라 불렀으며,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에 대전부의 행정동으로 확정되었다가 1948년 중촌동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예전에 중촌동에는 대나무가 많아 죽말이라 불렀다고 한다(중구청 홈페이지; 중구통계연보, 2015: 30). 그리고 일제강점기인 1919년에 5월에 이곳에 설치되 1984년까지 운영되었던 대전형무소 터가 있고,¹⁸⁾ 패션맞춤특화거리로 조성되어 있기도 하다. 이 특화거리는 1980년대 초반에 원단자투리 천을 팔던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의상실이 늘어나면서 형성되었다.¹⁹⁾

18) 현재 대전형무소 자리에는 망루와 우물만 남아 있으며, 망루는 대전광역시가 2001년 6월에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바 있다. 중구통계연보(2015. 12: 324).

19) 중도일보, “[대전 특화거리를 가다]중구 목동·중촌동 맞춤패션거리”, 2013. 7. 9. 인터넷 자료: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307090126.

중촌동의 인구는 2015년 현재 14,903명으로 중구 내 17개 동 중에서 7번째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 2000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85년 8,055명이었던 중촌동의 인구는 2000년에 19,193명까지 증가했지만, 2005년 조사에서는 17,946명으로 줄었고 2010년에 16,882명, 2015년에 14,903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국가통계포털 재구성). 그런데 이러한 인구감소는 중구 전체 인구가 둔산동 등 대전 서부권 개발이 본격화된 1990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것에 비해 약 10년 정도 늦게 시작된 것이다. 이는 중촌동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중구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대전 서부지역 개발의 영향을 늦게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남녀성비는 여성인구가 7,667명으로 남성의 7,236명에 비해 많다. 이러한 성비는 중구 전체 인구 중 여성인구가 남성인구에 비해 많은 것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²⁰⁾

2)운동의 형성 계기

중촌동 지역에서 풀뿌리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은 지역의 대표적인 여성운동단체인 대전여민회의 활동을 기반으로 했다. 대전여민회는 1987년에 결성된 충남여민회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인 여성운동단체들과 연대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민주화 이후 다양한 시민사회운동과 함께 등장한 여성운동단체들은 성폭력방지법 제정(1994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1997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의무조항 신설 등 사회전반에 퍼져 있던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 운동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호주제폐지, 여성할당제 실시 등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운동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제도의 변화가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박노동·김도균 외, 2016: 186).

20) 중구청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 http://www.djunggu.go.kr/_prog/_board/?mode=V&no=qUoxWU4gHvDJxbEFJgYc1A&code=intro_tong&site_dvs_cd=kr&menu_dvs_cd=060804&skey=&sval=&GotoPage=1

제도의 변화가 곧바로 성평등 의식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화의 혜택이 소수의 자원이 많은 특정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다수 평범한 여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장기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은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 시켰다. 정치적으로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부활하면서 지역 수준에서 발생하는 일상의 문제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위기 이후 대안경제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면서 지역 수준에서 생활협동조합운동과 같은 지역공동체로 관심이 모아졌다.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지역의 여성운동도 제도 수준의 논의와 실천에서 풀뿌리운동으로 전환의 필요가 있었다.

대전여민회는 이러한 전국적인 흐름 하에 풀뿌리운동을 마을단위에서 일상의 관계가 회복되고 일상을 나누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옆 마을에도 퍼져나가는 것으로 보았다²¹⁾(민양운, 2016: 인터뷰 자료). 이러한 인식은 대전여민회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침체기를 겪은 후 1998년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위원회를 조직 내에 구성하는 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 조직의 재조직 과정에서 전국적 운동 흐름의 변화를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중촌동 지역에서 풀뿌리운동의 형성은 기존의 사회운동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다음에서 그 전개과정을 주민모임 형성기, 확장기, 그리고 전환기로 나누어 풀뿌리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3)전개과정²²⁾

(1)주민모임 형성기: 1998년~2006년

중촌동에서 풀뿌리운동의 형성은 대전여민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전여민회는 조직 재정비를 통해 1998년부터 서구와 중촌동을 주요 활동지역으로 삼아 여성권 담론과 결합한 생활의 문제에 중심을 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대전여민회는 이를 위해 1998년에 기존의 활동가, 여성학자들, 그리고 진보적인 지역 주민

21) 민양운의 인터뷰(2016.9.19.) 중에서

22) 전개과정은 민양운(2011), 김영남(2012: 49~64), 박재목·김도균 외(2014: 77~82), 박노동·김도균 외(2016: 167~197), 민양운(2016.9.19.) 등을 중심으로 종합하여 재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등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신설하고 풀뿌리여성운동을 체계화하기 시작했다.²³⁾ 1998년에 서구 월평동 지역에서 시작해 2001년에 중촌동으로 확대했는데, 이들 지역을 활동의 거점으로 삼은 것은 활동가들의 거주지이거나 대전여민회 사무실이 입주해 있어 주민들과의 접근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서구 월평동은 1990년대 초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새로운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모델을 제시하기위한 활동과 함께 서구의회 모니터링, 주민자치센터활동 조사와 토론회, 아파트 내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사랑방 운영, 아파트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주부사랑방,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신나는 아파트 문화학교 등을 진행했다. 이 지역에서의 활동은 중심 활동가의 근무지와 거주지가 달라 지속적인 주민조직 활동의 한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005년경에 마무리되었다. 이 지역에서 활동이 중단 것과 달리 2001년부터 대전여민회 사무실이 있던 중촌동에서 시작된 풀뿌리운동은 지속성을 갖게 된다.

중촌동에서의 활동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민을 조직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것과 IMF 경제위기 이후 보건복지부의 위탁사업으로 진행했던 실직여성가장 겨울나기 사업²⁴⁾ 등을 2003년경까지 지속하면서 지역의 주부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 참여했던 마을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자조모임이 형성되었지만 성공회자활사업단과 연결이 되면서 2003년 경 자연스럽게 모임이 해소되었다. 이후 모임은 해소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형성된 주민 간 연대는 지속되었다. 더구나 2001년부터 대전여민회가 다양한 풀뿌리 생활운동을 통해 이들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연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중촌동에서 사업의 시작은 주민들과 만남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마을 내 솔밭공원에서의 솔밭나눔장터와 어린이벼룩시장이었다. 이 사업은 연 4회 진행을 했고, 이후 3년 간 지속하면서 주민들과의 연대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사업을 지켜본 인근 건물주인이 7평 정도의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어 2005년부터 2009년

23) 주민자치위원회는 대전여민회의 조직개편이 있었던 2009년에 풀뿌리여성운동센터로 변경하게 된다.

24) 대전여민회에서는 대전실업극복여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직여성가장 겨울나기, 저소득여성가장 방과후아동지도사 사업, 동구자활후견기관과 함께 진행한 간병인 사업 등을 진행하였고, 이의 성과로 1999년에 여성가장 자조모임인 희망터를 결성하기도 했다. 중촌동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여성들을 중심으로 자활 관련 자조모임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이 자조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성공회자활사업단과 연결되면서 자조모임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었다.

까지 재활용나눔가게인 보물창고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방학에는 동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방학캠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는 2004년에 동화읽는 엄마모임-아름아리라는 주민소모임의 구성으로 나타났다. 이 소모임은 이후 마을어린이도서관을 만드는 주체가 되었고 마을운동의 씨앗모임이 되었다.

동화읽는 엄마모임-아름아리는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마을보육공동체의 성격을 가졌다. 이들은 “학부모강좌-배워서 애들 주자” 등의 마을강좌나 스스로 교사로 참여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공동체모임으로서 특성을 갖추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전여민회 내에 어린이책사랑방 도토리라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주로 20대 ~ 30대 층의 젊은 주부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들은 이 활동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아이들 교육과 보육의 문제를 개별적인 사교육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과 달리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의 고취와 연대의식을 고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모임은 2년 정도 진행된 후 새로운 모색의 시기를 맞게 된다. 그 동안 비교적 잘 진행해 왔지만, 늘 찾아오는 아이들만 오게 되면서 활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을 접근성의 문제에서 찾게 되었다. 즉 대전여민회가 풀뿌리운동을 통해 대중성을 확대해 갔지만 여전히 80년대 운동권에 가까운 강한 이미지가 주민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업의 지속여부에 관한 고민이 참여자들로부터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논의를 통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업을 계속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그 결과 도서관 운동으로 전환을 결정하게 되었다. 도서관운동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첫째, 2000대 들어서 작은도서관운동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었고 대전에서도 모퉁이도서관을 비롯해 마을어린이도서관 운동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대전여민회 차원에서도 기존 활동을 바탕으로 도서관운동을 고민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시기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도 대전을 작은도서관 운동의 기지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 둘째, 기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었다. 처음에 공부방 모임도 고민을 했지만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2006년 하반기부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도서관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른 지역 도서관을 견학하고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도서관운동에 자신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해 2007년 2월 중촌동마을어린이도서관 짜장을 개관하게 되었다. 도서관은 주민자치센터 내 공간을 활용하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마을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 필요한 재원은 마을주민들로부터의 모금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도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다른 민간단체와 행정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은 개관될 수 있었다.

한편, 대전여민회의 활동은 풀뿌리운동과 함께 현실 정치참여를 통한 지역문제의 해결의 필요성과 특정한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정치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 서구와 중구에 무소속으로 기초의원후보를 출마시켰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비록 당선은 되지 못했지만, 선거출마의 경험에서 기존의 여성단체조직과 활동가 중심의 풀뿌리여성운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민조직에 의한 풀뿌리여성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주민밀착형의 풀뿌리여성운동과 일상의 정치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 2. 7> 대전여민회 소속 후보자의 제4회 지방선거 득표결과

후보자	출마 지역구	득표수 득표율)	순위
장현자	서구 마선거구	1,352(4.31%)	8명중 6위
민양운	중구 나선거구	1,359(8.14%)	10명중 6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중촌동은 장터와 엄마들의 모임을 바탕으로 하는 마을운동을 중심으로 2006년 후보를 냈지만 떨어졌다. 기존의 정당들이 일상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비록 떨어졌지만 선거를 준비하면서 이야기했던 논의들, 마을주민들과의 만남들 등의 준비과정이 너무 좋았다. 그 때만 해도 활동가들이 정책, 노동, 풀뿌리로 나누어진 영역으로 이야기만 나누었는데, 우리가 좀 더 주민 밀착해서 마을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역할도 조정하고 조직에서도 집중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²⁵⁾

25) 민양운의 인터뷰(2016.9.19.)중에서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중촌동에서 대전여민회의 풀뿌리운동은 활동가에서 주민으로 주체의 중심이 이동하게 되었고 활동의 내용에 있어서도 주민들, 특히 젊은 주부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보육의 문제로 구체화되었다.

(2)확장기: 2007년 ~ 2008년

중촌동에서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2006년까지 진행된 형성기 동안의 문제의식은 이렇게 2007년 이후 조직의 공식화 단계로 전환되었다. 조직의 공식화는 그간의 준비를 통해 마을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고, 마을축제를 조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생활의 문제를 중심으로 대중성을 확보하며 주민운동을 형성하기 시작한 대전여민회의는 2006년 지방선거 참여경험을 통해 생활의 문제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확장기 동안 대전여민회의의 풀뿌리운동은 2007년 2월에 개설된 중촌동마을어린이도서관 짜장을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 축은 마을 축제를 한 축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부들뿐만 아니라 마을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대면기회를 확대하면서 다양한 사업들로 확대해 갔다.

2007년 2월에 개관을 한 짜장도서관은 운영을 위해 사서자원활동가 모임, 체험강사단모임, 그림책읽는 모임, 동화읽는 모임, 동화읽어주기 소품제작모임, 오카리나모임, 이동도서관진행모임 등 다양한 소모임을 구성했다. 이들 소모임은 6개월 이상 지속하며 각 모임별 팀장과 전문가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서관 운영을 집단책임구조로 구축하여 일찍 정착할 수 있었다. 도서관 프로그램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생태문화유적 해설사 과정, 사회적 경제학습모임, 작가와의 만남, 되살림강좌, 학부모 강좌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성을 통해 마을활동의 중심이 되어 갔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대전여민회의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마을 주체를 형성해 갔다.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보람과 성취감이 있었지만, 반면에 경제적 문제에 대한 욕구와 공동체로서 장기적인 성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참여자들 사이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2008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진행한 풀뿌리여성리더십 프로젝트

는 이러한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마을 활동의 주체로서 다양한 자기 욕구와 마을의 욕구 실현을 결합시키면서 마을의 리더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진행된 토론회(살고 싶은 중촌동 마을만들기를 위한 생각 더하기, 나누기)를 통해 정치와 생활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마을활동의 다른 한축을 담당한 마을축제는 2007년 마을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한 책잔치에서 시작되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책잔치는 이후 주민들과 각종 사설 학원의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 2010년에는 축제추진단이 구성되었고, 상설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고 8월경부터 준비회의를 진행해 10월에 축제를 개최한다. 2012년부터는 마을숲²⁶⁾이 센터의 역할을 하고 참가 단체, 주민 혹은 마을 내 가게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의 역할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축제는 2013년에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에 선정되어 대전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도 했다.

이로써 중촌동에서 짜장도서관은 교육, 평생학습, 문화, 그리고 나눔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운영과 마을축제를 위해 함께 모여서 기획하고, 평가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마을리더그룹이 형성되어 갔다. 마을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풀뿌리활동은 참여자들의 자부심과 사회적 존재를 일깨우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었고, 2년간의 활동을 통해 점차 참여자들의 욕구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3)전환기: 2009년 ~ 2012년

2009년 이후 전환기에서 나타난 특성은 마을 내 관계의 형성에서 경제적 마을공동체 실험으로 구체화되고 재조직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운동이 전개되고 있던 사회적 조건은 새로운 전환을 통한 욕구의 충족으로 확장되는 작용을 했다.

26) 풀뿌리여성 마을숲은 2012년 2월에 대전여민회 풀뿌리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마을사업들을 모아 대전여민회로부터 독립한 조직이다.

2007년 개관 이후 참여자들과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도서관의 공간이 부족해지기 시작하자 어른들을 위한 마을공동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참여자들은 그동안의 교육을 통해 둘러 본 다른 지역의 카페를 생각하게 되었고, 2009년 1월부터 구체적인 준비 모이 시작했다. 카페 개설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는 2009년 12월에 건물주의 공간 기부를 받고 여성재단, 태평양복지재단의 여성휴식 공간 꾸며주기 프로젝트로부터 리모델링비용을 지원받는 전국1호점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외부의 재정지원에 힘입어 대전여민회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 1층에 마을카페 자작나무숲을 개장하게 되었다. 카페에서는 공정무역 커피 판매, 여성자활작업장 너른마당 참여자들이 만든 동전뜨게지갑 등의 생활소품 전시와 판매, 요리교실과 영화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매장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 30%는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는가 하면, 마을화폐인 “줍”²⁷⁾을 사용하면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운영은 20대 청년부터에서 50대 주부까지 10여명의 자원활동 카페매니저들이 맡았다. 마을카페 자작나무숲은 이렇게 마을주민들의 나눔과 소통의 공간임과 동시에 마을활동과 경제활동을 연계하는 첫 걸음으로써 의미를 가졌다. 그리고 카페운영의 경험은 본격적인 공동체경제운동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고, 마을주민리더교육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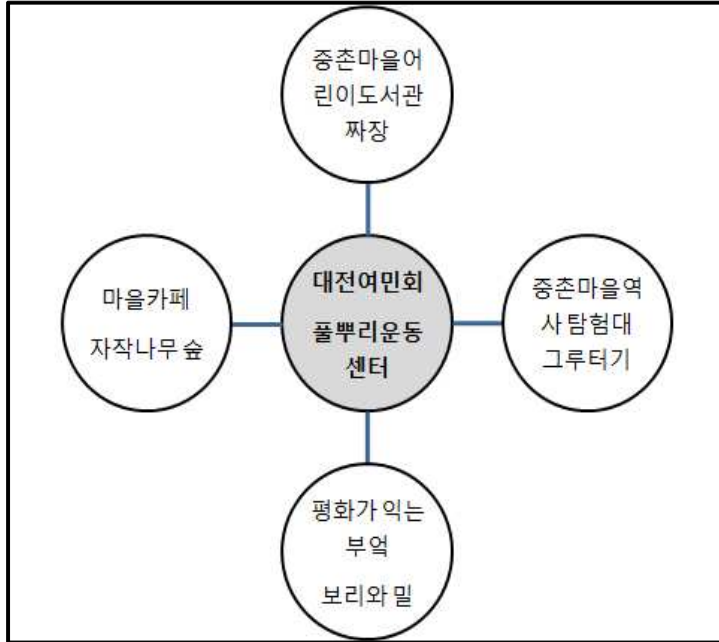
2010년 6월에 짜장도서관 운영위원, 소모임참여주민들, 그리고 카페매니저들이 함께 모여 “마을리더학교-즐거운 리더, 행복한 마을” 주민 워크숍을 통해 마을리더로서의 자기 정체성 확인과 향후 중촌동 5년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워크숍에서는 청소년이 살고 싶은 마을, 공동체 경제가 실험되는 마을이라는 두 가지 의제를 설정했다. 청소년이 살고 싶은 마을은 어린이도서관에서 자란 아이들이 청소년이 됨에 따라 부모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청소년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0대 아이들과 친구하고 싶은 마을어른들을 위한 강좌-통하고 통하고 통하자”를 통해 청소년의 심리와 성, 소통방법, 한구사회의 교육현실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친구하고 싶은 어른모임-통통통”과 같은 소모임이 결성되기도 했다.

27) 줍은 한밭레즈에서 고안한 대안화폐 두루와 같은 것으로, 매니저들에게 급여 중 일부를 이것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회원들이 커피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을 줍으로 결제하도록 했다.

공동체경제가 실험되는 마을은 마을활동에 참여해 오던 전업주부들의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었다. 그간 전업주부였던 마을여성들이 마을활동을 통해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점차 마을을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경력단절 여성들에 주어진 일자리는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였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마을활동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는 마을 안에서의 공동체경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중촌동, 평화가 익는 마을만들기”로 실현되었다. 이 사업은 두 개의 팀으로 구성되었는데, 하나는 지역주민들에게 건강한 떡거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평화가 익는 부엌 보리와 밀이었고, 다른 하나는 마을의 역사를 바탕으로 평화의 의미를 찾아가는 중촌마을역사탐험대 그루터기로 구성되었다. 2010년 11월부터 총괄사업단장 1인과 각 팀 별로 팀장 1인과 참여자 2인씩이 배치되었다. 이 사업은 2010년에 행정안전부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에 지원하여 대전시 중구 마을기업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11년에는 마을만들기지원사업으로 연속 지정되었다.²⁸⁾

이렇게 2001년부터 10여 년간 중촌동에서 진행된 대전여민회의 풀뿌리운동은 거대한 운동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세계로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외부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 진행된 작은도서관운동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관한 지원과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도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실험들이 전개되었고, 그 실험들을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었던 동인은 참여자들의 욕구와 이들의 욕구를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조직화하면서 마을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과 실천의 기회를 제공했던 사회운동단체의 역할이 컸다.

28)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흠어져 있는 각종 유·무형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관주도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주도의 사업을 통해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의미하며, 사업을 통한 지역문제의 해결과 지역거버넌스의 형성을 통한 공동체 발전이라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성격을 갖는다. 이 사업은 2010년에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으로 시작해 2011년에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 마을기업 사업으로 전환되었다(정선기·이정림 외, 2013: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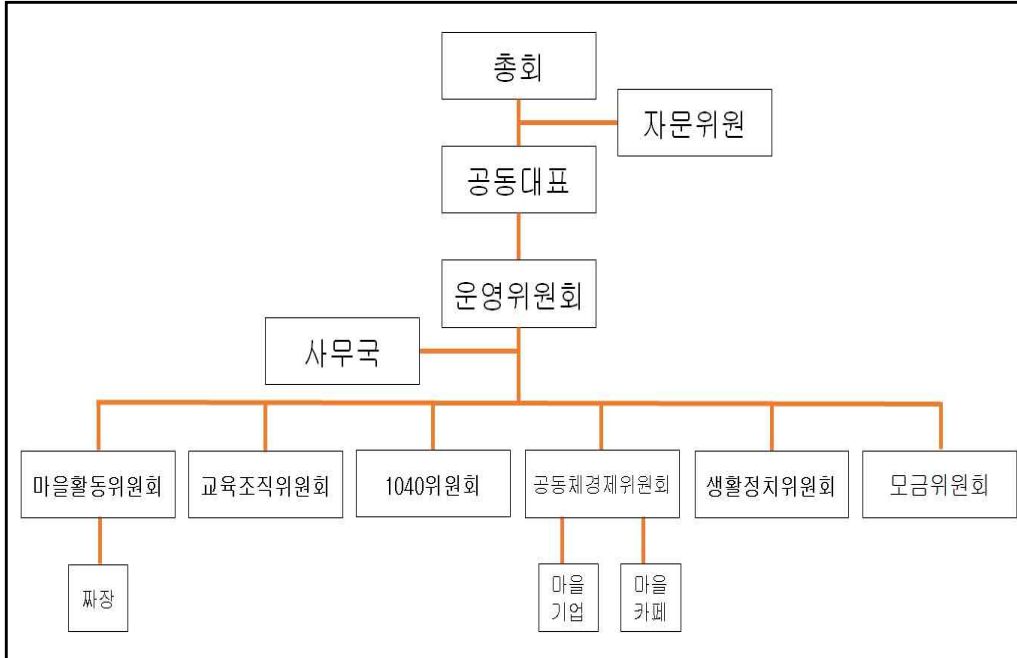


[그림 2. 5] 대전여민회 풀뿌리운동센터의 마을사업도(2011년)

출처: 김영남(2012. 2: 64)에서 수정

한편,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출발한 대전여민회 풀뿌리운동 조직은 2009년에 풀뿌리운동센터로 전환을 한 후 2012년에는 지역으로 더 마을활동에 집중하고 더 다양한 마을의 여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 풀뿌리여성 마을숲으로 독립을 했다. 이로써 기존 사회운동 기반의 활동에서 마을 내 주민 중심의 풀뿌리운동성의 강화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을숲은 대전여민회에서 추진했던 짜장도서관, 자작나무 숲, 보리와 밀, 그리고 그루터기 사업들을 포함하는 마을활동위원회와 공동체경제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로 구성하여 2012년 2월에 창립되었다. 창립 당시 조직 구성은 그림 2. 6과 같다.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마을활동을 발굴하였고, 텃밭가꾸기 사업하고 마을신문인 오마을을 창간, 안전마을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2014년에 전국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그림 2. 6] 풀뿌리여성 마을숲 조직도(2012년)²⁹⁾

3. 법·중리동: 지역화폐운동에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운동으로

법·중리동은 1980년대 중반 주공아파트를 시작으로 1990년대 말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개발된 지역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소형평수의 영구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고령인구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기도 하다. 의료서비스의 확충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많은 이러한 환경은 보건의료운동을 고민하던 활동가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들레)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풀뿌리운동을 살펴본다.

29) 인터넷자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jwomen&logNo=60155542632>

1) 마을의 사회경제적 환경

1991년 9월에 중리동에서 법동 분리되었고, 1996년 1월에 법동이 법1동과 법2동으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대덕구통계연보, 2015: 34). 이 글에서는 하나의 동으로 묶어 살펴본다.

중리동과 법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중리동의 인구는 23,233명, 법동은 33,535명으로 대덕구 전체 인구 201,558명의 17%가 거주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중리동과 법동의 인구가 대덕구 전체 인구 208,580명 중 33%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절반 가까이 그 비중이 줄었고 절대인구수에 있어서도 약 7,000여 명이 줄어든 것이다(대덕구통계연보, 1999. 12: 52~54).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 것은 인접한 송촌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대전 서부권 개발로 인한 인구유출 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남녀 인구 구성비에 있어서도 대덕구 내 12개 법정동 중 법동의 경우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³⁰⁾ 인접한 송촌동의 경우도 남성 인구 15,757명보다 여성 인구가 15,947명으로 근소한 차이로 여성 인구가 많지만, 법동의 경우 남성 인구가 16,234명인데 비해 여성 인구는 17,423명으로 1,189명이나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대덕구통계연보, 2015: 52).

경제적 차원에서 중리동에 소재한 사업체 수는 2,295개로 대덕구 전체의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 수로는 6,240명으로 대덕구 전체의 7%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법동은 사업체 수는 1,157개로 대덕구 전체의 7%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 수에 있어서는 4,139명으로 대덕구 전체의 5%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개인사업의 비중이 두 곳 모두 80% 정도로 제조업종 이외의 개인사업체로 음식업이나 서비스업종의 소비중심 산업의 특성을 보였다(대덕구통계연보, 2015: 76). 이러한 인구의 특성이나 산업구조의 특성은 의료협동조합 사업을 고민하던 주체들이 지역을 선택하는 영향요인들이 되었다. 다시 말해, 운영의 차원에서는 인접한 상권과 유동인구의 규모가 고려되어야 했고 운동의 목적 차원에서는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이 모여 있는 곳이 필요했다.³¹⁾ 법·중리동 지역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었던 것이다.

30) 대덕구 내 12개 법정동 중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은 곳은 송촌동과 법동이 있다.

31) 김성훈의 인터뷰(2016.9.28.) 중에서

2)운동의 형성 계기

민들레가 2002년 5월에 의료생활협동조합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조직, 운동의 지향성에 관한 공유, 연대 가능한 세력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 외부요인이 계기적으로 작용했다.

먼저, 기존의 조직은 한발레츠에서 출발했다.³²⁾ 한발레츠는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가 아닌 공동체 화폐인 두루라고 하는 지역화폐를 통한 대안경제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한발레츠 결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동가들과 의료인들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발행한 발생한 의약분업 사태는 운동의 지향성에 관해 토론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 7월에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사들의 반발로 시작된 의약분업 사태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건강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과 저항중심의 조직이 아닌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대안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유에 이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 의료와 건강권은 돈벌이 대상으로 상품화되지 않아야 하고, 환자의 권리 확보, 적정 진료, 질병 예방활동,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건간증진활동 등 의료를 통한 대안사회운동에 대한 고민이 참가자들 사이에 공유되고 합의되었던 것이다. 창립선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들의 인식은 대전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의 결성으로 현실화되었다.

대전의료생활협은 보살핌과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적은 무리들이 시작하였다. 그 계기는 우리 사회에서 불거져 나온 의약분업사태를 겪으면서 일어났다. 이 사태는 우리의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을 우리 말고 어느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했다. 건강한 삶은 주민 스스로가 나서야 하는 일이었고 그것은 자신과 이웃, 공동체와 더불어 협동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 여기에 참다운 의료생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의료인들이 함께 하였다. 이는 주민과 의료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어깨걸고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것에 더하여 협동하는 삶을 몸소 실천해온 지역주민들은 “건강은 혼자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느껴 의료생활협동조합이 건강권을 실현하는 좋은 방책임을 알게 되었고 동참하였다.³³⁾

32) 이하 운동의 형성의 계기는 김성훈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33) 대전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2002. 8: 4)

이상과 같은 계기와 환경을 바탕으로 대전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이 2002년 5월에 결성되었고, 2007년 사회적기업 등록, 2013년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과정을 형성기, 성장기, 재조직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3)전개과정

(1)형성기: 2000년 ~ 2002년

민들레의 형성기는 의약분업 사태로 의료를 통한 대안사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던 2000년부터 법인을 창립한 2002년까지로 볼 수 있다. 한발레츠 활동가와 의료인 회원 등 8명을 중심으로 한발레츠 내에 대전의료생활협준비모임이 2001년 5월에 결성되었고, 8월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공동 워크숍 통해 의료생활준비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어서 10월에는 지역의 종교인, 시민사회활동가,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이 결합하여 대전의료생활준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준비모임은 이미 의료생활이 운영되고 있던 안성, 안산, 인천, 일본의료생활 등 방문, 내부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준비를 해 나갔다(대전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2002. 8: 6). 의료생활 결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병원개원에 대한 준비도 동시에 이루어져 2002년 4월에 민들레의원과 한의원이 법인설립 이전에 개원하여 진료를 시작했다.

5월부터는 한발레츠의 지역화폐인 두루³⁴⁾를 진료비로 거래를 하게 되었다. 두루의 통용은 운영의 차원에서 다른 지역의 의료생활과 차별성을 갖는 요소인데, 실제 조합원 확보과정에서 두루는 유인요인이 되기도 했다. 한편, 두루는 한의원을 중심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고, 병원 실무자들의 인건비로 두루가 지불되기도 했다(김성훈 2003, 120). 5월 11일에는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14인의 창립준비위원을 선출했다. 이어서 2002년 8월에 300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8월 24일에 법인창립대회를 개최하면서 공식적으로 대전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이 창립되었다(대전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2002. 8: 7).

창립과정에서 기반이 된 주요 집단은 한발레츠 회원들이었다. 300명의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이 회원들이었던 것이다(한발레츠, 2016. 2: 9). 물론 여기에는 인의협, 한

34) 민들레에서는 이를 건강화폐로 부르기도 한다.

발생활협동조합, 친구랑공동육아어린이집, 대전 한살림 등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의 역할도 컸다. 이들은 조합원 가입뿐만 아니라 초기 재정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당한 금액을 출자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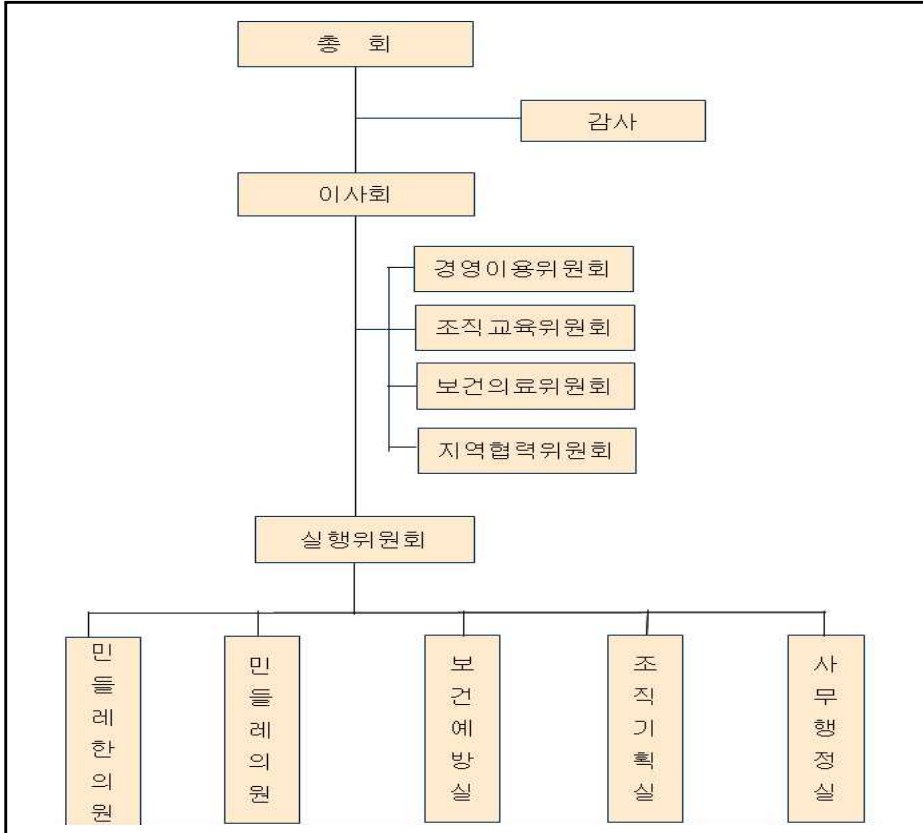
형성기는 준비기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조합활동이 이루어진 기간이 일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풀뿌리운동으로서 다양한 실험을 한 기간이었다. 민들레는 “주민의 참여와 협동으로 만드는 건강한 마을”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3대 기본방향, 7대 중점목표, 10대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했다.

<표 2. 8>2002년 대전민들레의료생협의 과제

1) 3대 기본방향	① 조합의 경영 안정화 ② 조합의 민주적 운영 ③ 조합원 확대 및 활동 주체 형성
2) 7대 중점목표	① 조합원 500세대, 진료권내 100세대 이상 가입 ② 병원진료환자의 걱정선 확보 ③ 진료권내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건강마을 만들기 모델 창출 ④ 다양한 소모임 건설, 건강도우미 배출 등 조합 활동의 주체형성 ⑤ 각종 매체 프로그램을 통한 조합원 교육 ⑥ 환자권리장전의 실천적 수립 ⑦ 지역통화 운용의 정착
3) 10대 중점사업	① 환자 권리장전 지키기 ② 조합원 가족 주치의 사업 ③ 보건학교 ④ 건강교실 ⑤ 방문진료 ⑥ 조합원 교육 ⑦ 소모임 활동 ⑧ 협력의료기관의 실천적 위상정립 ⑨ 협동경제 구축 ⑩ 연대활동

출처: 대전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2002. 8: 39~40)

2002년 12월까지 운영한 결과로 경영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지균형을 이루었고 실무자 간 의사소통과 민주성의 확립, 조합원 교육 토대 마련 등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운동의 차원에서는 아쉬운 측면도 있었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의 조합원 유도 등 주민과의 관계형성, 환자권리장전의 실현 등은 구체적인 목표설정이나 실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대전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2003. 2: 18~24). 이와 같은 평가는 이후 민들레가 중장기 성장계획을 수립하고 실천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그림 2. 7] 민들레의료생협 조직도(2002)

출처: 대전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2002. 8: 41)

(2)성장기: 2003년 ~ 2005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결성기 동안의 실험을 거친 이후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2005년까지 법동 민들레의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성장기를 거쳤다.

이 기간 동안 양적 성장 차원에서는 2002년 368명이었던 조합원이 2005년 12월에 이르러 722명까지 두 배정도 증가했다(대전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2006. 1: 6). 사업의 차원에서는 지역 사회와의 다양한 사업의 진행을 통해 연대관계를 형성하고 주민조직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2003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 지원으로 법동복지관, 중리복지관 등과 함께 공동화폐로 만드는 건강한 마을 사업을 진행해 2004년에 법동품앗이 결성으로 이어졌다. 또한 2004년에 법동레츠를 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경영수지 차원에 있어는 2002년 당기수지결산이 19,393,308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03년과 2004에는 흑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2005년 9월부터 4달 동안 이어진 한의원과 민들레의원에 대한 업무정지와 의사면허정지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05년의 부채율이 약 173%, 그 영향이 이어진 2006년에는 약 293%까지 올라가기도 했다(대전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2012. 2: 94). 즉 업무정지와 의사면허정지는 조직 결성 이후 경영의 차원뿐만 아니라 도덕적 경제적 차원에서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김성훈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한 바 있다.

협동조합의 바이블이라고 일컬어지는 책에 보면 나오는데, 협동조합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 경영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로 크게 나타난다. 첫 번째 신뢰의 위기는 어떤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의심을 하고 잘 믿지 못하는 것에서 온다. 어느 정도 극복이 돼서 운영이 되면, 초기에 가지고 있던 뜻을 중심으로 일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경영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경영의 위기가 온다. 그러면 경영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초기의 이상보다는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경영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다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었나 하는 이야기가 생긴다. 세 가지 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³⁵⁾

2005년의 사건은 앞서 제시한 바 있는 사회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조직의 공식화 이후 직면하게 된 위기상황이다. 조직의 공식화 이후 조직은 소멸 혹은 제도화나 재조직이라는 크게 두 가지의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때 특정의 사건 자체보다 이로 인한 조직 내 갈등의 해결방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민들레는 이러한 갈등의 상황에서 기존 운동의 혁신과 새로운 목표의 수립이라는 수단을 통해 재조

35) 김성훈의 인터뷰(2016.9.28.) 중에서

직의 경로로 전개해 나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영성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의 특성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성의 강조는 경영뿐만 아니라 조직의 운영 전반에 스며들어 영향을 미쳤고, 다른 지역의 의료생협이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략) 조합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반성하는 것은 그대로 하지만 죽어 있지만 앓고 새로운 일을 모색하는데 치과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있었다. 치과개설준비위원회가 꾸려졌다. (중략) 준비과정이 1년 정도 걸렸다. 일이 잘 풀려서 치과개설준비하면서 릴레이 100일 기도를 하기도 했다. 치과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야기하고 돈도 모았다. 치과를 만들고 지나면서 두 번째 시기의 위기를 극복했다.³⁶⁾

이와 같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은 성장기임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위기를 동시에 겪는 시기였고, 조직의 공식화 이후 위기를 극복하면서 재조직의 시기로 전환할 수 있었다. 재조직의 시기는 2006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로 볼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직의 제도적 특성도 변화해 갔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다음에서 살펴본다.

(3)재조직기 : 2006년 ~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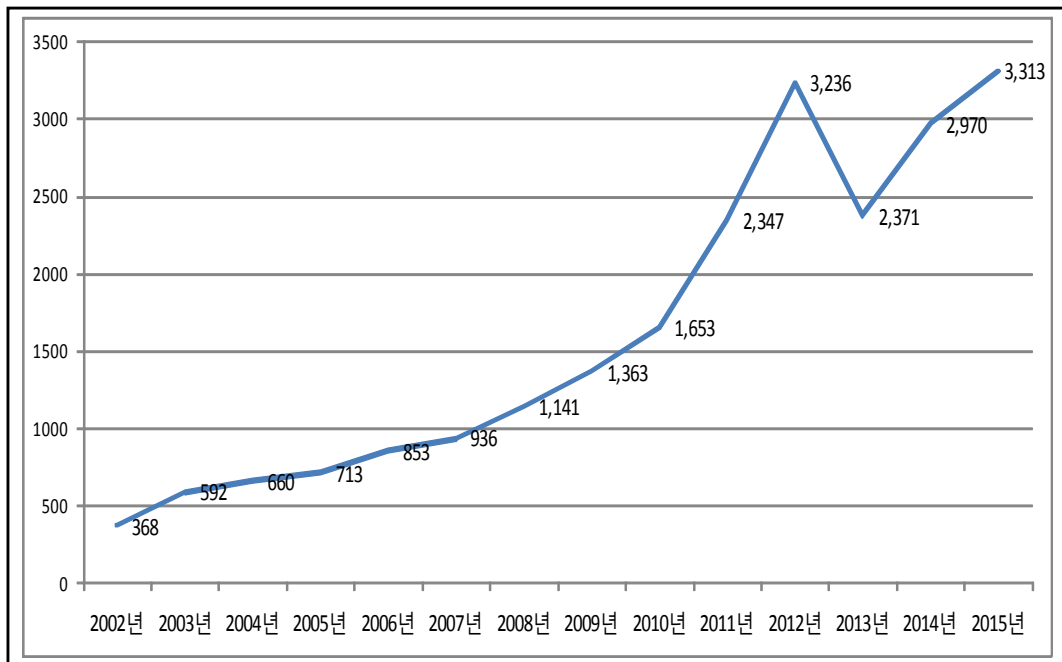
위기를 동반한 성장기를 거치면서 조직 내부의 결속력을 강해질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2006년부터 2013년의 시기는 새로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기존 조직의 재조직을 수반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재조직기에 나타난 조직상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조직규모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2006년에 치과 개설, 2008년에는 노인복지센터 개설과 의원을 확장 이전했다. 2010년에는 건강검진센터와 가정간호센터를 개설하면서 지역 사회에 더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에는 둔산지역에 양방, 한

36) 김성훈의 인터뷰(2016.9.28.) 중에서

방, 그리고 치과를 갖춘 둔산민들레를 결성하면서 조직 규모의 확대와 활동지역의 확장을 이루었다. 이와 함께, 2007년 12월에는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운동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 11월에 사회적협동조합 승인을 받고 법인명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았다.

조합원 수에 있어서도 그림 2.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02년 결성 당시에 비해 10배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2016년 10월에는 3,517명에 이르렀다(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조합원의 증가 중 인근 주민들의 가입이 두드러졌는데, 2011년에는 사업장 반경 1km 이내 즉, 법·중리·대화·송촌동(선비2단지) 지역에 살고 있는 조합원의 비중이 전체 조합원의 43%에 이르러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대전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12. 2: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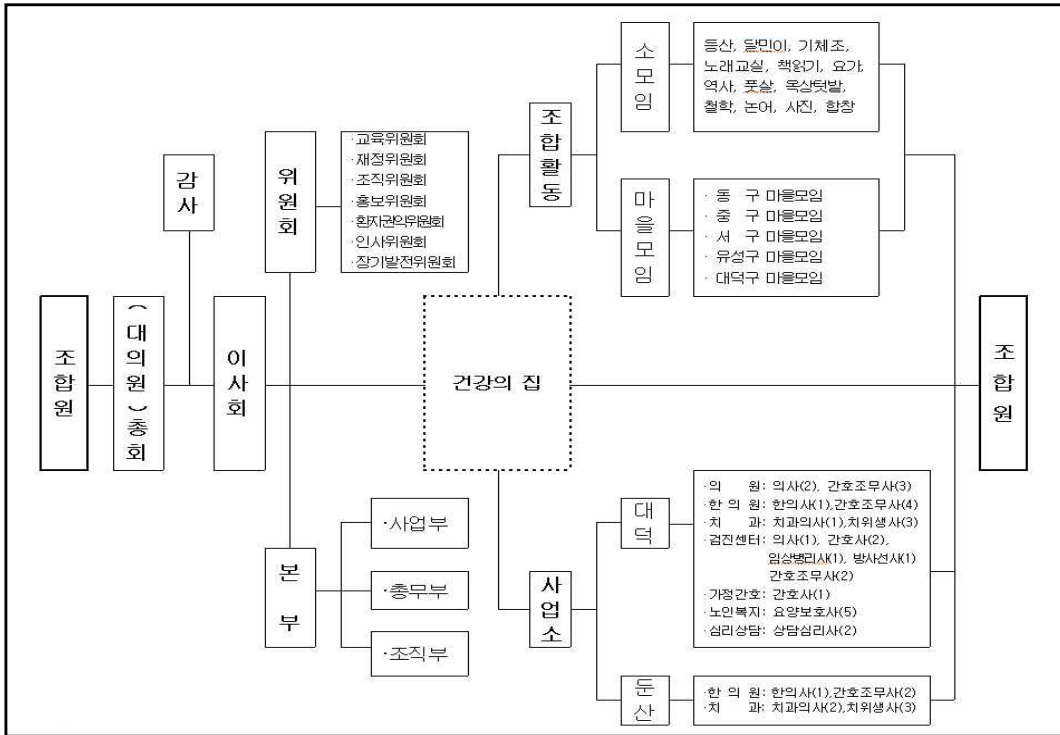
[그림 2. 8] 연도별 조합원 증가 현황

출처: 대전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2016. 2: 70)

주: 2013년의 경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출자금 미납조합원을 제외한 수이고, 이들을 포함할 경우 3,524명임.

이와 같은 변화는 경영상의 안정성 확보에도 영향을 미쳐 2006년 293%에 달하던 부채비율이 2012년에는 162%로 대폭 축소되었다(대전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13. 2: 93). 이러한 경영상의 안정성 확보는 조합원의 증가와 조합원 모듬활동,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조합원 제안사업 등 내부 운영의 다양화와 지역사회와의 연대활동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 결과로 볼 수 있다(대전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13. 2: 56~57). 이와 함께, 생활증자와 같은 조합원들의 자발적 증자운동 유도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이후 2008년부터 전문인력과 인턴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사업개발 등에 대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그림 2. 9와 같이 조직체계의 변화에서도 확인되는데 2002년 창립(그림 2. 7 참고)과 비교할 때 규모와 조직 재편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림 2. 9]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직체계(2016)

출처: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2016. 2: 17)

한편, 이 기간의 활동성과는 2012년에 전국우수사회적기업시상에서 대통령상 수상, 2015년에는 경제기획부장관 표창을 받으면서 조직 내부의 자긍심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신뢰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2002년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래 2012년에 이르는 10년의 과정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성과와 과 극복해야 할 한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긍정적인 성과에 있어서는 애초 설립의 목적이었던 의료의 공공성 실현, 지역화폐의 활용을 통한 공동체 상호부조의 건강증진 시스템 구축, 다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시민운동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협동의 원리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극복해야 할 한계로는 첫째, 제도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소극적이었던 예방활동과 둘째, 의료기관, 환자, 조합원 중심의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각종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조합원은 조합원의 증가에 비례하여 늘어나지 않음으로 자발적 건강 기초공동체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대전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13. 2: 128).

종합적으로는 대안사회를 지향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에서 기반을 확고히 하고, 다른 협동조합 등 대안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도들에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반면에, 풀뿌리운동체로서 중앙과 지방 등의 국가정책과정에서의 개입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식적 참여를 이끄는 등 거시적 차원에서 평가를 할 때 분명히 그간의 활동에 한계는 있다. 이 지점은 다중이해자 조직으로서 갖는 근본적 한계이거나, 기존의 지역 내 다른 유사 관련단체나 정치세력과의 관계에서 오는 한계, 혹은 지역사회에 밀착된 활동을 하기에 부족한 자원의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한계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한계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이념의 편향성을 내세울 경우 신뢰, 경영, 그리고 정체성의 위기에 연쇄적으로 직면할 수도 있기에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제4절 종합

이 장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전지역에서 전개된 풀뿌리운동의 사례를 사회운동의 전개과정을 석교동, 중촌동, 그리고 법·중리동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다.

첫째, 문제의식의 차원이다. 석교동의 경우 교육과 보육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경제영역으로 확장을 보였다. 중촌동은 성평등 문화의 생활세계로의 확산이라는 문제의식에서 경제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법·중리동의 경우 공공의료와 대안경제의 결합이라는 고민이 지속되었다.

둘째, 주체의 차원이다. 석교동은 평범한 학부모이자 주부들이 중심을 이루었고, 이들은 학습과 활동을 통해 풀뿌리운동 활동가로서 정체성을 획득하고 강화해 갔다. 중촌동은 기존의 사회운동 조직과 활동가 중심에서 마을 주민으로 확산된 사례이다. 법·중리동의 경우는 의료기관과 활동가의 비중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의료 부문이 갖는 전문성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체의 특성으로 인해 석교동과 중촌동은 풀뿌리운동 조직의 전개과정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구체적으로 석교동이 알짜도서관에서 석교마을N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병렬적 연계 관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면, 중촌동의 경우는 그림 2.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풀뿌리여성 마을숲이라고 하는 위계적 체계의 특성을 보인다. 중촌동이 이러한 체계를 갖는 것은 기존 사회운동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마을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석교동은 구도심 지역으로 역사·문화 자원을 갖고 있다. 반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촌동도 역시 구도심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석교동과 달리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지만 교육환경이 좋은 서구와 상대적 비교를 하게 된다. 법·중리동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지만 저소득과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의료취약계층이 많다. 이러한 마을의 특성은 각각의 운동이 전개되는 양상과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공동체성의 과도화 경향 현상이다. 세 사례에서 조금씩 다른 정도이지만 제한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활동에 하고 있는 마을 내 자생 조직 혹은 관변단체들이나 정치집단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의도되지 않은 배타성일 수도 있고 기존 질서에 대한 부정의 원인일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들과 개별적 연대의 형성에서는 활동의 확장에 지장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집단 간 거버너스의 구축의 상황에서는 제한요인이 될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같은 차이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생활세계에서 대안체제의 실험이라는 사회운동의 일반적 특성을 보였다. 그리고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제도화의 영향, 사회운동 흐름의 변화, 그리고 주체의 인식확장이라는 요인들이 공통적으로 작용했다.

제 3 장

사회적경제운동의 형성과 전개

제1절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

제2절 사회적경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

제3절 사회적경제운동의 전개과정

제4절 사회적경제운동의 사례

제5절 종합

제3장 사회적경제운동의 형성과 전개

제1절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

비판에서 옹호까지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에 대한 폭 넓은 관점이 존재한다. 사회적 경제의 등장과정을 볼 때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 운동의 전통 속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부정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급진적 혹은 해방적 대안운동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복지 후퇴로 인한 사회적 배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 및 시장 실패에 대한 보완자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신자유주의적 전략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지민영화의 한 수단이라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 또한 존재한다(장원봉, 2006; 유철규, 2014; 165-166에서 재인용). 일부의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정부와 시민사회 양쪽 모두로부터 큰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사회적경제운동의 기원은 일제강점기의 협동조합운동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출발 시점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근로 빈곤층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전개된 자활사업에서 찾고 있다(김성기, 2013; 김신양, 2013). 이렇게 출발한 사회적경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지방정부의 정책적 과제로 수용되는 동시에 지역시민운동의 차원에서도 주요한 실천적 과제로 부각되어왔다.

사회적 경제는 노동과의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을 사회로 통합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돌봄, 문화, 교육, 보육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호혜성과 연대, 신뢰와 협동, 참여와 민주성 등을 강조하는 운영원리로 인해 지역사회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창출하고 증진시킨다. 시장이 제공할 수 없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공적 자원으로써 사회자본 확충은 지방정

부와 지역시민사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 사회적경제의 활동 영역과 자원동원의 공간적 범위는 전지구적일수도 지역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지역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지역사회운동의 성격을 보인다. 즉 사회적경제의 주요한 활동의 무대는 지역사회라 할 수 있다(김성기, 2013). 이러한 관점에서 대전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운동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특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2절 사회적경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³⁷⁾ 첫 번째 논의는 ‘경제란 무엇인가’ 라는 접근이다. 이 접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제에 대한 관점, 즉 시장주의 경제학의 관점이 실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대표하는 것이 칼 폴라니(Karl Polanyi)이다. 경제사학자이면서 경제인류학자인 폴라니는 ‘실체적(substantive) 경제’ 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인간의 경제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경제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시장의 실체를 분석하고, 현재 당연하게 사용하고 인식하는 ‘경제적 인간’ 과 ‘시장주의’ 의 허구성을 폭로하였다. 폴라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사적이윤의 축적 이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동체 경제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 냈다.

사회적경제에 관한 두 번째 논의는 현실사회에서 구현되는 ‘사회적경제조직’ 과 ‘경제활동’ 에 관한 접근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사회적경제 개념의 발전과정과 실체로서의 ‘조직’ 을 중심에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사회적경제는 이론과 실천 사이의 상호작용의 역사 속에서 발전해 왔다.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형성됐고, 1970년대 이후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가 새롭게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접근을 살펴보면 현실에서의 사회적경제의 형태와 이들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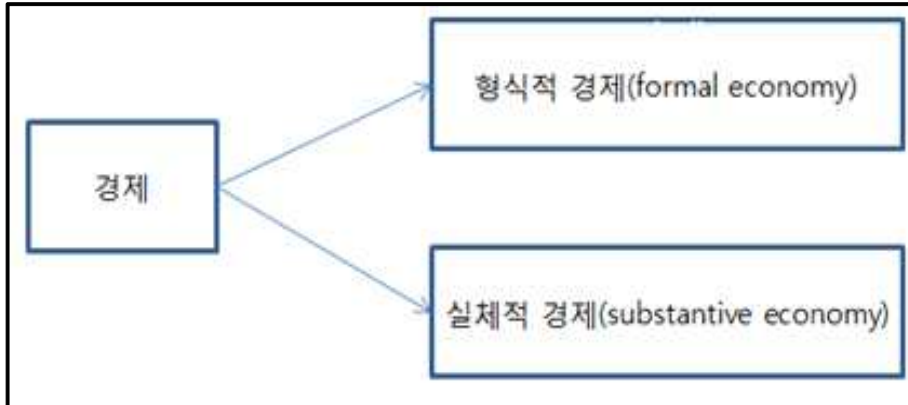
1. 첫 번째 접근: 인간의 경제

폴라니(1983; 2002; 2009)는 주류 경제학이 인간의 현실사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시장중심주의’ 에 치우쳐 있음을 비판하였다.³⁸⁾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

37) 2절의 논의는 이정림(2014: 14-28)의 박사학위논문에 기초하여 수정하고 재구성한 것이다.

38) 이 장은 폴라니의 저서(1983, 2002, 2009)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하고 인식하는 경제(economy)의 개념에는 주류경제학의 관점 즉 시장주의적 관념이 중심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플라니는 경제의 개념을 ‘형식적 경제(formal economy)’와 ‘실체적 경제(substantive economy)’로 구분함으로써 시장중심적 경제관념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림 3. 1] 플라니의 경제 개념의 구분

형식적 경제는 추상적인 이론을 위한 것으로 용어 그대로 형식적(formal)이다. 형식적 경제관념의 하에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가설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합리성을 추구한다. 즉 인간은 부족한 자원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수단을 이용하고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희소성(scarcity)의 개념이 생성된다. 따라서 인간의 경제행위란 부족한 자원과 인간의 무한한 욕망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경제화(economizing) 하는 것, 또는 경제적(economical)으로 최적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플라니는 인간사회에는 형식적 경제 그 이상의 것 즉 실체적 경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체적 경제는 이러한 ‘경제적 합리성’을 넘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현상이다. 플라니가 보기에 인간은 다른 여타의 생물처럼 자연환경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함께 타인에게 의존한다. 즉 인간은 자연환경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인간 사이의 제도화된 상호작용으로 살아가는데, 이 상호작용의 과정이 실체적 경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경제,

형식적 경제와 실체적 경제 사이에는 전혀 공통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류경제학에서는 시장에서만 가능한 현상인 형식적 경제만을 중심으로 인간의 경제를 설명하는 편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폴라니는 이러한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 경제 개념을 분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체적인 의미는 요컨대 인간이 생활을 위해서 자연 및 그의 동료들에게 분명히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과 자연환경 사이의 제도화된 상호작용 덕택에 살아간다. 이 과정이 경제인 것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물질적 욕구를 채울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말을, 채워야 할 욕구가 예를 들어 식량이나 주거와 같이 순전히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인간의 생존에 아무리 기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의미로 한정해버리면 경제의 영역은 터무니없이 제한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욕구가 아니라 수단이 물질인 것이다. 필요한 물건이 허기를 메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교육, 군사 또는 종교적 목적에 필요한 것인가를 묻는 것은 아무래도 좋다. 인간의 욕구가 그 충족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는 한 나타나는 관계는 경제적이다. ‘경제’란 여기서는 ‘물질적 욕구를 채우는 과정과 관계있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의 생활을 연구하는 것은 이러한 실체적 의미에서의 경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 전체를 통해서 ‘경제’라는 말은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다(폴라니, 1983: 56).

그렇다면 어떻게 이론상의 형식적 경제가 우리의 삶을 대변하게 되었는가. 폴라니에 따르면 이는 19세기에 시장이 확대되면서 그리고 경제이론이 형식적 경제의 의미를 채택하고 실체적 의미의 경제를 제거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인간 경제의 본질적인 내용은 간과되었고 시장 형태만이 인간의 경제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의 생활이 사적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경쟁관계로 인식됐으며 이는 시장에 의해 형성된다는 시장결정주의로 일반화 된 것이다. 즉 모든 것이 시장에 의해 스스로 조정된다는 자기조정 시장체제(self-regulating market system) 관념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폴라니는 “자기조정 시장이라는 아이디어는 한마디로 완전히 유토피아다” 라고 단언하였다. 이런 제도는 현실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 없으며 만약 이런 제도가 실현될 경우에는 인간과 자연 모두가 소멸할 것으로 보았다. 인간은 신체적으로 파괴당할 것이며 삶의 환경은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가 이 책에서 주장하려는 명제는 다음과 같다. 이 자기조정 시장이라는 아이디어는 한마디로 완전히 유토피아다. 그런 제도는 아주 잠시도 존재할 수가 없으며, 만에 하나 실현될 경우 사회를 이루는 인간과 자연이라는 내용물은 아예 씨를 말려버리게 되어 있다...따라서 사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하지만 어떤 보호조치든 취하는 족족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을 망가뜨리고 산업의 일상적 작동을 혼란에 빠뜨렸기에 사회는 또 다른 방향에서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고 말았다. 바로 이러한 딜레마 때문에 시장체제의 발전 과정은 미리 정해진 길을 따라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신이 기반으로 두고 있는 사회 조직마저 무너뜨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폴라니, 2009: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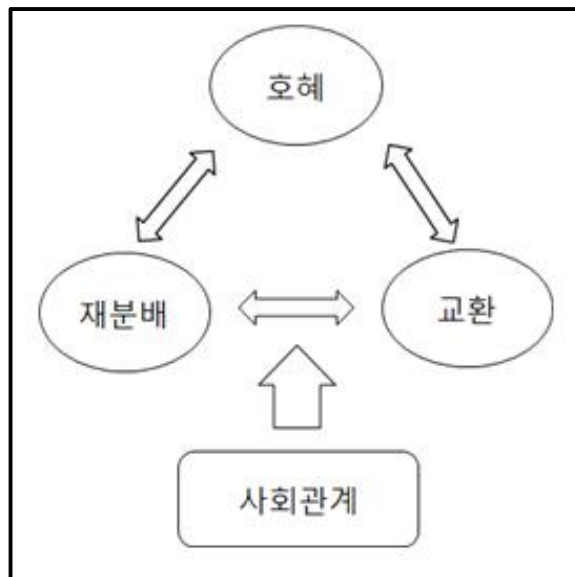
폴라니는 역사학과 인류학의 수많은 경험적 연구를 근거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경제의 위치는 주류 경제학의 주장처럼 시장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 배태(embeddedness)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물질 재화의 생산과 분배는 비경제적인 사회관계 속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19세기에 시장이 확산되고 자기조정 시장체제의 관념이 주장되면서 경제 속으로 사회가 묻어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의 전부분이 경제적 요소에 의해 제한되고 만 것이다.

이전의 사회조직들은 파괴되고 인간과 자연을 새롭게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실패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의 구성원들의 행동의 동기인 ‘생계유지’를 ‘이익추구’라는 단 하나의 목적이 대신한다. 모든 거래는 시장에서의 화폐거래로 변경되었으며 산업사회는 화폐거래를 조건으로 발전하였다. 이제 모든 형태의 소득은 무언가를 판매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제활동이 사회적 기능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동기와 구별되어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만

추구된 결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노동·토지·화폐와 같이 상품이 아닌 것이 상품이 된 것이다.

폴라니에 따르면 토지·노동·화폐는 상품이 아니다. 토지란 자연의 이름일 뿐이며 따라서 자연은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은 인간 활동의 다른 이름이다. 인간의 활동은 인간의 생명과 함께 있는 것으로 판매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이유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또한 화폐는 구매력의 징표일 뿐이다. 구매력이란 은행업과 국가 금융의 메커니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어떤 것도 판매를 위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토지·화폐를 상품으로 묘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허구라는 것이다.

폴라니는 인류학 연구에 기초해 경제적 과정이 사회적 과정에 묻어 들어가 있는 형태를 크게 호혜성(reciprocity), 재분배(redistribution), 교환(exchange)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형태들은 시장 신화에서처럼 개인들의 경제적 교환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며 경제적인 거래에 앞서 사회적 관계, 즉 지지 구조(supportive structure)에서 나오는 것이다(홍기빈, 2008: 168).



[그림 3. 2] 폴라니의 사회 속에 배태된 경제

하지만 19세기의 시장경제체제는 이와 같은 사회관계 안에서의 경제활동을 파괴하였다. 즉 시장경제체제는 자기 파괴적임 메커니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폴라니는 이런 시장의 파괴적인 기능을 저지하려는 노력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한 쪽에서는 시장의 확장이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한 편에서는 시장이 세계로 확산되면서 재화의 양을 증가시키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법과 정책 그리고 제도들로 시장을 규제하고자 한다. 이렇게 볼 때 19세기의 사회사는 시장의 확산과 저지라는 이중운동(double movement)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폴라니는 직접적으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의 바탕이 되는 강력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경제활동 역시 오랜 시간 이러한 사회적 목적 안에서 행해졌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게 하여 인류는 인간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음을 폴라니의 연구가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초기 사회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면, 인간은 한 걸 같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다...인간의 경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회관계 속에 깊숙이 잠겨 있다. 인간은 물질적 재화의 소유라는 개인적 이해를 지켜내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행동하여 지키려는 것은 그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 권리, 사회적 자산이다. 인간이 물질적 재화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오로지 이러한 목적들에 도움이 되는 만큼으로 한정 된다...이러한 사회차원의 이익이라는 것은 작은 수렵어로 공동체나 거대한 전제 왕국이나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어느 쪽이든 경제체제가 비경제적 동기들로 작동한다는 점은 동일하다(폴라니, 2009: 184~185).

2. 두 번째 접근: 현실에서 구현된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조직

사회적경제 개념은 19세기 유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³⁹⁾ 그 당시에는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산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도시로 유입된 많은 사람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으로 고통 받았고 빈곤과 극단적인 사회 불평등은 비인간적인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학문의 장을 중심으로 이전 농업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변동과 현상을 분석하고 그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자유시장경제와는 다른 방식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대응을 주장하는 결사체 사회주의(associationniste socialism), 기독교 사회주의(christian socialism), 연대주의(solidarism), 자유주의(liberalism) 사상들이 유행하였다.

결사체 사회주의는 오웬(Owen), 생시몽(Saint-Simon), 푸리에(Fourier) 등에 의해 유토피아 이념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복지와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는 자발적 조직 또는 공동체를 주장하였다. 기독교 사회주의는 르 플레(Le Play), 라이파이젠(Raiffeisen) 등에 의해 자선주의의 전통 아래 노동자의 해방 보다는 빈곤층의 삶의 조건 개선에 주력하면서 경쟁이 아닌 협동을 강조해 부유층의 자선과 후원을 강조했다(김신양, 2009: 14~15).

그리고 지드(Gide) 등에 의해 주장된 연대주의는 소비자협동조합을 시작으로 경제영역 전체를 협동조합화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이러한 세력들은 협동조합을 사회변혁과 사회통합의 핵심적 수단으로 설정하였다. 왈라스(Walras) 등에 의해 주장된 자유주의는 사회는 별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개인들의 집합일 뿐이라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적 관점들은 개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실용적인 역할과 정치경제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윤리 및 사회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중적인 결사체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엄형식, 2008: 43~45).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대안적 관점들에 기반을 두고 이론적·실천적 수준에서 발전하였다.

39)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는 1830년의 프랑스의 뒤누와이에(C. Dunoyer)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뒤누와이에에는 세이나 스미스와 같은 고전경제학자들이 부의 생산에 대해 제한된 분석을 한다고 비판하면서, 욕구와 바람에 대응하는 모든 유용한 것에까지 정치경제학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엄형식, 2008: 45).

사회적 경제를 학문적 수준으로 체계화 된 것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진행됐던 지드와 왈라스의 연구를 통해서였다. 왈라스는 경제학을 크게 순수경제학, 사회적경제학, 실용경제학이라는 3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왈라스에 따르면 순수경제학은 경제학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제 행위를 지배하는 자연법칙에 대한 추상적인 학문을 의미한다면, 실용경제학은 경제학의 가장 아래 수준으로 구체적인 경제의 문제를 다루며 자연법칙의 적용과 (특히) 생산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학은 순수경제학과 실용경제학의 중간에 있는 수준으로 규범적이고 윤리적 영역으로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왈라스에 따르면 순수경제학에서는 ‘이해’ (interest)의 논리만을 충족시키면 되지만, 사회적경제학에서는 이해의 논리뿐만 아니라 ‘정의’ (justice)의 논리를 포함해 다양한 논리를 다루게 된다고 주장하였다(엄형식, 2008: 46~47).

지드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보고서(1905)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의 세 가지 범주로 고용주(고용주의 사회적 공헌), 결사체(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노동조합 등), 공공규제(사회적 입법 등)를 언급하였다. 이러한 세 개의 범주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지드 또한 왈라스의 영향을 받아 순수경제학과 사회적경제학을 구분하였는데 순수경제학은 왈라스와 같이 개별적 이해에 따른 부의 생산에 대한 과학 또는 인간과 사물간의 관계에 대한 과학을 뜻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학은 부의 분배와 사회적 정의에 관한 과학으로서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과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Demoustier, 2000; 엄형식, 2008: 27에서 재인용). 또한 개별적인 이해관계와 정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통해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지드는 기존 경제학에서는 민중의 고통과 그것을 치료할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측면을 다루는 사회적 경제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왈라스는 영국의 산업혁명에 의해 제기된 사회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 개념을 채택하였으며 사회적경제의 핵심을 ‘이익과 정의의 화해’에 있다고 보았다(김영철, 2011: 26).

이를 종합해서 보면 사회적 경제는 19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본격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져온 빈곤문제, 노동착취 문제 등 비인간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즉 기존의 시장중심주의를 주장하는 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며 대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

은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중반 마르크스주의의 우세와 자본주의 경제성장이라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사회운동세력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사라진 듯 했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위기,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실업 및 사회양극화 그리고 복지 축소, 세계적 금융위기 등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부상하였다. 특히 선진 복지국가들에서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복지재정의 부족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국가가 모든 것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현실과 생각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였다. 사회경제적 변동의 과정 속에서 기존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다양한 사회운동들과 결합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정의가 새롭게 이루어졌다.

현재 사회적경제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사회적경제의 실체를 다음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시장도 국가(정부)도 아닌 민간영역(시민사회)에서 나타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자발적 참여의 목표는 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 셋 번째로는 구성원들 사이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즉 이는 자본(돈)에 대한 인간(노동)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유철규, 2014: 162).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과 관련 기업,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에 의해 실행하는 경제활동을 포함한다. 그 윤리적 구조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표현한다.

- 첫째, 이윤창출보다 회원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목적
- 둘째, 경영의 독립성
- 셋째,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
- 넷째, 수익분배에 있어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의 우월성

출처: 보르자가와 드푸르니(2009: 9)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stakeholder economy)의 일부로서, 중요한 경제 행위자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을 포함한다.

출처: Roelants(2002); 엄형식(2008: 52)에서 재인용

제3절 사회적경제운동의 전개과정

1. 전국적 전개과정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한국의 사회적경제운동의 역사는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전에도 두레, 품앗이, 계, 향약 등 전통적인 상호부조와 연대조직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모순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던 근대적 의미의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근대적 의미의 사회적경제운동의 출발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협동조합운동에서 찾는 것은 관련 학계의 일반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1920년을 전후로 하여 국내에도 서구의 초기 협동조합운동의 대표사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로치데일 공정선구자협동조합(The Equitable Pioneers of Rochdale) 및 덴마크 농촌협동조합운동의 이념과 운영방식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강계공익조합(1919년 4월), 목포소비조합(1920년 5월), 경성소비조합(1920년 6월), 아현소비조합(1920년 7월), 공주소비조합(1921년 6월), 대구소비조합(1922년 2월), 합천소비조합(1922년 3월), 원산소비조합(1922년 5월) 등 소비자 협동조합운동이 지역 곳곳에서 전개되었다(김형미, 2012: 23-24).

1932년 동아일보가 조사한 전조선협동조합조사(全朝鮮協同組合調査)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97개의 협동조합에 존재했으면 조합원 수 4만 여명, 전체 조합자금 규모가 42만원 수준이었다고 한다. 당시 97개의 협동조합들 중에서 73개가 소비자 협동조합일 정도로 초기 국내 협동조합운동은 소비자 중심성이 강했다. 이후 동아일보의 추가적 조사와 천도교 조선농민사가 제공한 자료를 종합하면 1932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90개의 협동조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김형미, 2012: 26).

<표 3. 1> 도별 협동조합분포 현황

지역	조합수	지역	조합수
경기도	4	황해도	9
충청북도	3	평안남도	15
충청남도	3	평안북도	19
전라북도	2	함경남도	11
전라남도	3	함경북도	1
경상북도	10	해외	1
경상남도	13	미상(未詳)	1
강원도	2	합계	97

출처: 동아일보 「전조선협동조합조사(1932년 4월 6일)」(김형미, 2012: 26에서 재인용)

일제강점기 협동조합운동은 민족자립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당시 협동조합의 전국적 분포 현황을 보면 민족자립운동에 적극적이었던 기독교운동과 천도교 운동이 활발했던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에 협동조합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장종익, 2002; 장원봉, 2006: 236~237에서 재인용). 하지만 바로 협동조합운동이 지닌 민족자립운동의 성격으로 인해 1937년 일제에 의해 전시체제가 강화되면서 강제로 해산되었다. 그리고 해방이후 연이어 일어난 1950년 6·25전쟁을 경험하면서 국내 협동조합운동은 극심한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6·25전쟁 이후, 한국의 협동조합운동은 일제강점기부터 협동조합운동에 참여했던 월남자와 무교회주의자들에 의해 운영된 풀무학교(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와 가톨릭교단 관계자들이 주도한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을 중심으로 명맥이 유지되어왔다. 그러던 중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흐름 속에서 협동조합운동이 새롭게 부활하기 시작하였다.⁴⁰⁾ 특히 80년대 생명운동과 친환경농산물 도농직거래운동으로 출발한 생활협동조합운동은 한국의 사회적경제운동의 부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40) 일제에 의해 그리고 해방이후 국가 주도로 건설된 결성된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전신 조직들은 표면상 사회적 경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수탈의 목적으로, 해방이후에는 국가주도의 근대화 혹은 산업화 과정에서 정권의 민중동원 전략의 차원에서 재조직된 측면이 강했다(임형식, 2008: 124~134; 이정립, 2014: 29). 따라서 이러한 조직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경영의 독립성, 의사결정의 민주성,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의 우월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의 기본 원칙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농민운동과 생명운동, 그리고 협동조합운동이 결합하여 탄생한 한살림 생활협동조합(1988)을 들 수 있다(②). 한살림은 화학농업과 저곡가정책으로 폐쇄해진 농업과 농촌, 환경을 살리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운동가들과 유기농업 생산자들이 설립한 한살림농산(1986)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87년 진보적 여성운동을 지향하면서 출범한 여성민우회는 여성운동의 대중화 차원에서 생협운동에 동참하였으며(③), 이외에도 종교단체 및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경험한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각종 지역생협을 창립하였다(④)(정은미, 2006; 아아쿠타협동조합, 2016: 144-14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80년대 새롭게 등장한 한국의 생활협동조합운동은 농민운동, 환경운동, 협동조합운동, 시민운동 등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해방이후 새롭게 부활한 사회적경제운동으로서 생활협동조합운동은 철저하게 시민사회(운동)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생활협동조합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운동과 함께 한국의 사회적경제운동의 또 다른 주요한 흐름은 도시빈민운동에서 태동하고 성장한 자활공동체운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민중에 대한 깊은 애정과 종교적 사명감으로 무장한 소수의 민중교회 지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⁴¹⁾ 자활공동체운동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일꾼 두레’ 또한 민중교회의 목회자가 해당 지역의 건설노동자들과 함께 조직한 일종의 생산공동체였다. 특히 90년대 초반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면서 생산공동체 혹은 생산자(혹은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이 새로운 변혁운동의 대안으로 도시의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이문국, 2010: 11).⁴²⁾

41) 민중교회는 소위 달동네라고 불리던 도시빈민 밀집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민중이 되도록 섬기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주로 선교사업을 실시하는 교회’를 지칭하는 것인 동시에 교회가 자선사업이 관점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이 처해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교육하여 훈련하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도시연구소 편, 1996: 264; 이문국, 2010: 10에서 재인용)

42) 92년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의 진보적 젊은 사제들이 주도한 봉제노동자협동조합 ‘바늘과 실’, 건설노동자협동조합인 ‘나섬건설’, 94년 건설일꾼 두레와 나섬건설이 통합한 ‘나레건설’, 95년 여성노동자회의 출자로 설립된 인천의 봉제노동자협동조합인 ‘웃누리’, 구로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수행했던 여성봉제노동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인 ‘한백’, 행당동 철거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논골의류협동조합’ 등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결성되었다(이문국, 2010: 14).

1993년 김영삼 정부 등장 이후 공동체 활동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려는 노동자 혹은 빈민들의 노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학계는 물론 정부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당시 문민정부로 새롭게 출발한 김영삼 정부는 생산적·예방적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생산공동체 모형을 도입해 소위 ‘자활시범 사업’(1996~1999년)을 실시하게 된다(김승오, 2010: 22-23). 그리고 97년 IMF 구제금융으로 인해 대량실업이 주요한 사회문제가 부상하면서 자활운동은 전국적으로 전개된 실업운동조직과 연계되었다. 대량실업이라는 경제위기 속에서 자활에 대한 정부 및 시민사회의 정책적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여기에 1999년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에 있어 혁신적 전기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자활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더욱 확고해졌다.

자활사업은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간의 민관협력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민간부분 실무자들은 스스로를 사회운동가 혹은 활동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확인했듯이 자활사업이 빈민 및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공동체운동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 자활지원 센터는 일찍이 생산공동체 참여했던 진보적 성향의 비영리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복지단체 및 여타의 민간단체의 참여로까지 확장되었다.

<표 3. 2> 초기(1996~1999) 자활지원센터 지정현황(시범사업)

년도(개소)	지역	운영법인(단체)	유형
95년(5개)	서울관악	대한성공회 봉천동나눔의 집	종교단체
	서울노원	대한성공회 상계동나눔의 집	종교단체
	서울마포	이화학당 성산종합사회복지관	학교법인
	인천동구	대안성공회 송림동나눔의 집	종교단체
	대전동구	대한성공회 성남동나눔의 집	종교단체
96년(5개)	서울성북	대한성공회 성북나눔의 집	종교단체
	부산 사상	청십자두레마을 모라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대전 북구	생명의 전화 산격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광주 남구	인애동산 인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경기 광명	한국복지재단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년도(개소)	지역	운영법인(단체)	유형
98년(7개)	부산 동구	한국복지재단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대구 남구	불교사회복지회	종교단체
	울산 남구	YMCA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시민단체
	울산 북구	참여자치연대	시민단체
	충남 천안	대한성공회 쌍용나눔의 집	종교단체
	전북 전주	대한성공회 전주교회	종교단체
	전남 해남	두성 재단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99년(3개)	경기 성남	한국참사랑복지회	사단법인
	강원 태백	태백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경북 포항	열린가람	종교단체

출처: 김승오(2010: 28)

앞서 살펴본 친환경농산물 도농직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협동조합과 함께 생산공동체운동에서 출발해 정부의 근로연계복지정책으로 수용된 자활사업은 한국 사회적경제의 핵심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자활공동체의 일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였다. 자활사업이 미취업빈곤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이미 사회적 기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노대명, 2010: 57). 자활운동진영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정부에 제안하고 제정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하였기에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정부는 또한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자활사업단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여 조세감면, 인력지원, 컨설팅 제공, 시설운영에 대한 대부 등을 지원하였다(김정원, 2010: 65).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양적 팽창과 사회적 관심의 증대는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경제조직이 더욱 다양화되고, 양적으로도 크게 팽창하였다.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은 80년대 진보적 사회운동세력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민주화운동, 농민·노동·빈민운동, 환경운동세력, 진보적인 종교단체들이 때론 독자적으로 때론 연대하여 생활협동조합운동과 생산공동체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서

구의 사회적 경제운동이 1960~70년대 신사회운동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부활했던 것과 같이 한국의 사회적경제운동 또한 대안사회경제체제를 추구하는 진보적 사회운동세력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태동하고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의 사회적경제 담론은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퇴조의 새로운 대안으로 활성화된 반면, 한국은 IMF경제위기 이후 국가가 복지정책을 확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활성화 되었다는 점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유럽은 국가 및 시장 실패에 대한 새로운 대안 혹은 보완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면, 한국은 근로연계복지라는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 속에서 확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표 3. 3> 1990년 이후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발전과정

시기	주요사건	과정	결과
1988	민주화운동, 시민운동, 생태운동	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에 힘입은 사회운동진영은 민중들과 함께 대안조직을 만들	88년 ‘한살림 공동체 소비자협동조합’ ‘여성 민우회 생활협동조합’ 등 다양한 생활협동조합 등장
1990	노동자운동	빈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 봉제업종의 협동조합 도입	92년 ‘건축일꾼 두레’ 93년 ‘실과 바늘’, ‘협성’ 등 생산공동체 조직
1995	김영삼 정부의 ‘국민복지기획단’	빈곤정책의 일환으로 생산자협동조합 방식 검토	‘자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시범사업 실시 사회적 경제 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됨
1997	실업극복국민위원회	IMF 외환위기로 대규모 실업자와 빈곤층 발생. 이를 위한 사회단체 결집	국민성금으로 모인 예산으로 실직가정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취업알선, 각종 상담 서비스 등 전개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기존의 ‘자활지원센터’를 ‘자활후결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전국으로 확대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설립된 자활지원센터가 기초법 제정 후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 담당기관으로 지정 됨
2003	노동부	외환위기 때 실시한 ‘공공근로’ 사업을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연장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관심 증폭. 사회단체들의 장기적인 고용전략을 정부에 요구.
2006	‘올바른 사회적 기업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단체 연석회의’ 결성	사회적일자리, 사회적서비스 사업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위탁	양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회 서비스를 질적으로 재조직하기 위해 사회단체들이 노력함

시기	주요사건	과정	결과
2007	「사회적기업육성법」 실시	사회적 경제 관련된 제도적 지원과 지지를 위한 법 마련 요구로 제정	사회적 기업의 양적 증가의 계기가 됨
2008	‘사회적경제연대회의’	관주도의 사회적기업의 관리는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의미를 협소화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단체들은 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결성
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협동조합 일반법의 부재로 협동조합 설립의 어려움	사회적 경제의 주류 조직인 협동조합의 확산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

출처: 이정립(2014: 33)

2. 대전지역 사회적경제운동의 전개과정

1) 사회적경제운동의 전사(前史): 일제강점기에서 1988년 이전

대전은 경부선(1905), 호남선(1914) 철도의 개통과 1932년 공주에 있던 충청도청이 대전을 이전해 오면서 일제강점기에 성장한 신흥도시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공주가 충청남도의 중심 도시였다.⁴³⁾ 즉 일제강점기에는 대전과 공주가 충남지역의 중심도시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신문 기사를 보면 대전과 공주지역에서도 소비자협동조합이 결성되어 활동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22년 6월 7일,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대전 본정의 이정목, 박노성, 권용성 등이 발기한 ‘목하소비조합’, 같은 해 8월 23일 기사에서는 대전 대동리의 심상옥, 우창길, 민동두 등이 참여한 ‘대동소비조합’의 결성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공주에서는 한 해 앞서 1921년 6월 ‘공주 소비조합’이 결성되었다. 공주 소비조합은 결성이후에도 자금 증액을 통해 조직을 확대한 것으로 보아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1932년 동아일보가 조사한 ‘전국 협동조합조사’를 보면 충북 3개, 충남 3개로 충청지역에서 총 6개의 협동조합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이 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43) 행정구역으로 보면 대전과 충남이 엄격하게 구분된다. 하지만 이전의 대전은 충남의 중심 도시로 충남이라는 지역적 정체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운동의 전사는 대전 인근 지역까지로 확대하여 파악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도 판단된다.

{자료 3. 1} 1920년대 대전지역 소비조합 관련 기사

大田消費組合計畫(대전소비조합계획)

동아일보 | 1922.06.07 기사(뉴스)

大田消費組合計畫(대전소비조합계획)

大田本町二丁目朴魯成權容成其他諸氏(대전본정이정목박노성권용성기타제씨)의發起(발기)로目下消費組合(목하소비조합)을經營中(경영중)이라는대方法(방법)은每口(매구)에拾圓(십원)으로하야總五千口(총오천구)로한다는바임의募集(모집)된口數(구수)가千餘口以上(천여구이상)에至(지)한好成績(호성적)이라더라(大田(대전))

大東消費組合新設(대동소비조합신설)

동아일보 | 1922.08.23 기사(뉴스)

大東消費組合新設(대동소비조합신설)

大田大東里沈相玉禹昌吉閔泳斗外諸氏(대전대동리심상옥우창길민영두외제씨)는大田消費組合(대전소비조합)을發論(발론)하야每口(매구)에壹圓式納入(일원식납입)하기로하고會員(회원)을募集(모집)한結果現在四十餘人(결과현재사십여인)에達(달)하며 方今米穀柴炭(방금미곡시탄)等(등)을販賣(판매)하는대발서十五日(십오일)동안에二割五分(이할오분)의利益(이익)이生(생)하였다는바同里諸氏(동리제씨)의贊同(찬동)으로二十二日總會開催(이십이일총회개회)(大田(대전))

{자료 3. 2} 1920년대 공주지역 소비조합 관련 기사

公州消費組合組織(공주소비조합조직)

동아일보 | 1921.06.15 기사(뉴스)

公州消費組合組織(공주소비조합조직)

忠清南道公州(충청남도공주)는道廳所在都會地(도청소재도회지)로되地方發展上善良(지방발전상선량)한規模(규모)와經濟上眞實(경제상진실)한意味(의미)가有(유)한機關(기관)이無(무)하야遺憾不堪(유감불감)이던바今般公州南鮮興業株式會社專務取締役沈相久氏(금반공주남선흥업주식회사전무취체역심상구씨)와當地青年商會經營者金英培氏外某(당지청년상회경영자김영배씨외모)々諸氏(제씨)의發起(발기)로消費組合(소비조합)을組織(조직)하야方今株金(방금주금)을募集中(모집중)인바其目的(기목적)은組合員(조합원)의界限(한)하야는消費品(소비품)을廉價(엄가)로販賣(판매)하야며販賣物品(판매물품)은外地(외지)에서輸入(수입)하는日用雜貨(일용잡화)이라하며組合員(조합원)은組合(조합)에서承認(승인)한商店以外(상점미외)에는物品(물품)을購買(구매)함을不得(부득)하리라더라(公州(공주))

公州消組擴張(공주소조합장)

동아일보 | 1923.06.29 기사(뉴스)

公州消組擴張(공주소조합장)

公州消費組合(공주소비조합)은當地有志諸氏(당지유지제씨)의發起(발기)로設立(설립)된者(자)인大同組合(동조합)에서는今般當地(금반당지)에最有力(최유력)한李顯周氏(미현주씨)를理事(이사)로하고資金(자금)을增額(증액)하는同時(동시)에業務(업무)를一層擴張(일층확장)할計劃(계획)이라더라(公州(공주))

1920년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비조합인 목포소비조합(1920년 5월)이 결성된 것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소비조합운동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 시기는 로치데일 공정선구자협동조합과 덴마크 농촌협동조합 등 서구 선구적인 협동조합운동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시점이기도 하다. 대전과 공주지역에서 전개된 소비조합운동 또한 이러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전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30년대 이후 일제의 전시동원체제 강화, 1950년대 초반 6·25전쟁, 이후 남북분단의 고착화 등으로 인해 한국 협동조합운동은 본격적인 활동을 해 보기도 전에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장기적인 침체에 일제강점기의 협동조합운동의 맥을 미력하나마 이어왔던 곳이 충청남도 홍성의 ‘풀무학교’였다. 일제강점기 평안북도 오산학교(정주군)에서 오산소비조합을 운영했던 이찬갑(1904~1974년)이 해방 이후 남하하여 무교회 모임에서 만난 주옥로 등과 함께 1958년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풀무학교(현재,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를 세우고, 이듬해 학교 내에 소비조합 구관장을 개설하였다(김형미, 2012: 19). 이후 풀무학교 구관장은 ‘풀무생협’으로까지 발전하였다.

특히 이찬갑의 소비조합운동은 오산학교 시절 교류한 민족운동가 이승훈(1864~1930년)과 조만식(1883~1950)의 이상촌 건설운동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운동사적으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특이한 점은 충남 홍성에서 명망 있는 독립운동가에 의해 소비조합운동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움직임이 충남의 중심 도시인 대전지역에까지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이찬갑을 포함해 풀무학교 참여했던 초기의 주요한 인사들이 덴마크의 농촌협동조합 모델에 따라 농촌중심의 이상촌 건설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운동의 중심이 농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도시지역인 대전과의 교류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전 소비조합운동은 1980년 중반 신협에 의해 일부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신협은 1970~80년대 한국 협동조합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신협은 협동조합 관련 교육뿐 아니라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점포형 소비자협동조합을 운영했다. 1980년대 중반 대전에서도 신협이 점포형 소비자협동조합을 운영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984년 12월 서대전 신협의 임원 및 조합원을 중심으로 공판장을 운영했었다. 공판장을 열어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조합원들에게 일반 소매점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했다고 한다(김명준, 1988; 이미연, 2012: 258에서 재인용)

2) 사회적경제운동의 형성기(1988~2006년): 시민사회로부터 출발

대전지역에서 신탁이 지역개발사업으로 진행한 점포형 소비자협동조합 활동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사회적경제운동은 87년 민주화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0년 6월 28일, 친환경로컬푸드운동 차원에서 ‘한밭살림소비자협동조합’ (현재, 한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하, 한밭생협)이 결성되었으며, 이후 97년 7월에는 ‘한살림청주 대전점’ 형태로 대전에서도 한살림 활동이 시작되었다.

생협운동과 구분되는 ‘자활공동체운동’은 90년 중후반을 전후로 하여 대전지역에서도 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상호 신뢰와 호혜성에 기반을 둔 지역화폐운동 및 의료생협운동 등도 2000년대 초반을 경과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즉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주요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생협운동과 자활공동체운동이 대전지역의 사회적경제운동 형성에 있어서도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대전지역 최초의 생협은 한밭생협으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운동 차원에서 결성되었다. 87년 민주화 이후 각 지역의 여성운동 및 여타의 사회운동세력들을 중심으로 여러 생협이 결성되었는데, 한밭생협 또한 그러한 운동사적 맥락 속에서 결성되었다. 80년대 후반에는 오랜 시간 유기농업을 해왔던 농민과 생명운동세력을 중심으로 한살림이 결성되었고, 진보적 여성운동단체인 여성민우회는 여성운동의 대중화 차원에서 여성민우회생협을 결성하였다. 이외에도 종교 및 지역의 사회운동가들을 참여하는 각종 지역생협들이 활발하게 조직되었다.

한밭생협 또한 87년 민주화 이후 팽창한 지역시민사회로부터 출발하였다. 한밭생협이 출발하는데 있어 필요한 초기 인적 자원은 강원용 목사가 주관했던 ‘대전주부아카데미’라는 여성리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다. 당시 주부아카데미에서는 정치·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공해 및 환경문제 등에 관한 다양한 강좌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환경 관련 강좌는 참여했던 여성들의 환경의식을 깨우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은 시기적으로도 환경문제 및 먹을거리 오염 등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모순들이 사회운동으로 전환되던 시점이기도 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부아카데미에 참여했던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밭생협의 모태가 된 ‘살림의 집’ (1988년 6월 25일)이 창립되었다.

초기 살림의 집 창립과정과 운영에 참여했던 한 여성의 구술이 이러한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지금은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같은 기관이 많은데, 그때는 그런게 없었잖아요. 여성들이 대학을 나오면 그걸로 끝이었던 말이야. 그런데 강원용 목사님 주관으로 주부아카데미라는 걸 한다는 거야. 그 커리큘럼 중에 환경이라는 부분이 있었지. ...그때는 농업이 오염의 중심에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오염이라고 하면 폐수가 환경오염이고 농약에 의한 오염, 그리고 그게 내 입으로 들어오는 먹거리에 대한 오염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야. 강의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차린 밥상이 '살림의 밥상'이 아니라 '죽음의 밥상'이었다는 데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럼 교육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럼 한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하고 시작한 거예요.⁴⁴⁾

중구 선화동 호수돈여고 앞에 문을 연 살림의 집은 유기농 쌀과 계란을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점포형 매장으로 출발하였으며, 2년 후 1990년 6월 한밭생협을 창립하는데 있어 살림의 집의 인적자원과 운영 경험이 핵심적인 동력이 되었다.

한밭생협과 성격이 비슷한 한살림대전은 10년이 지난 2001년 12월 19일에 가서야 창립되었는데, 대전에서 가까운 한살림청주가 1990년도에 창립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늦게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한밭생협을 창립하는 과정에서 한살림 형태로 창립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지역생협으로 창립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이채민, 2010: 24). 하지만 논의 결과 독자적인 지역생협 즉 한밭생협으로 창립이 결정되면서 한살림대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대전에서 한살림은 1997년이 되어서야 한살림청주의 분점형태로 한살림 매장이 서구 둔산동에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되었다. 97년 대전 매장 개장이후 대전의 한살림 소비자 회원들을 중심으로 청주와 별도의 독립지부에 대한 필요성이 밀려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1999년 1월 창립준비 모임을 결성하고 대전과

44) 진경희의 인터뷰 중에서(이채민, 2010: 23에서 재인용)

인근 지역의 소비자와 생산자들을 조직하여 2001년 12월, 한살림 대전을 창립하기에 이른다(박노동 외, 2015: 210-211).

8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된 한살림운동은 농민운동 및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특성이 매우 강했다. 반면에 대전지역 한살림운동은 안전한 먹을거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소비자회원들이 주도한 측면이 강했다. 앞서 살펴본 한밭생협이 지역사회운동세력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출발했다면, 한살림 대전의 출발은 지역사회에서 웰빙(well-being), 삶의 질과 탈물질주의적 가치(post-materialism)를 추구하는 고학력·중산층 소비자 집단의 욕구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김도균, 2016). 대전을 대표하는 두 생협은 이러한 창립과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생활상의 의제가 사회운동으로 전환되는 대안생활세계운동의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대안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지역화폐운동단체인 ‘한밭레츠’ (2000년 2월)와 의료생협인 ‘민들레의료생협’ (2002년 8월 24일)이 2000년대 초반 결성되었다. 지역화폐운동은 한정된 지역사회에서만 통용되는 대안화폐를 통해 지역경제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일종의 대안경제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여러 지역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운동으로 도입되는 흐름 속에서 한밭레츠라는 지역화폐운동단체가 대전에서도 결성되었다(김성훈, 2005; 김도균, 2016). 지역화폐운동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가 만든 지역화폐를 매개로 노동과 물품의 교환한다는 측면에서(김도균, 2016), 이윤보다 회원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운동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지역화폐운동이 IMF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활동이 침체된 것과 다르게, 한밭레츠는 운동의 영역을 확장하여 대전지역 의료생활협동조합인 민들레의료생협의 창립을 주도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김도균, 2016). 의료생협 또한 사적 이윤 추구가 의료 행위의 중심이 아니라 공공성과 시민참여에 바탕을 두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한밭레츠의 활성화에는 의사의 참여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진료과정을 통해 쌓인 의사와 환자사이의 신뢰관계가 의료생협이라는 대안적 의료시스템으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김도균, 2016). 한발레츠에서 발행한 지역화폐가 의료생협에서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었고, 의료생협은 한발레츠를 통해 핵심 활동가와 조합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김도균, 2016). 이러한 상호협력의 결과 의료생협과 한발레츠 모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사회적경제운동의 또 다른 중요한 한 축은 자활공동체운동이다.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자활운동을 해왔던 한 활동가의 구술에 따르면, 대전에서도 자활공동체운동은 정부에 의해 자활사업이 제도화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자활공동체운동이 출발이 종교와 깊은 연관 속에서 출발하고 전개되었듯이 대전지역에서도 이러한 경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대전지역에서도 90년대 초·중반부터 빈민선교와 빈민운동이 결합된 형태의 자활공동체운동이 존재했다.

원래 초기 시작은 성공회인데 성공회 신부님들하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도시 빈민 지역에 사실은 선교를 하러 갔던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선교가 급한 게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환경이라던가, 빈민지역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고 나중에 방관되고 있는 거죠. 부모님들은 일 하러 나가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 하여튼 뭔가 [...] 그 다음에 먹는 문제, 주거문제, 이런 문제들이 훨씬 급하다 보니까 이제 선교 쪽은 뒤로 제쳐놓고, 음식, 그래서 그때 했던 게 성공회 푸드뱅크하고, 급해서 먼저 음식 후원받아서 나눠주는 사업, 그 다음에 아이들 돌봐주는, 흔히 얘기하는 방과후학교 같은 개념이죠. 아이들 데리고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뭔가 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게 취업이나 일반적인 창업 말고 이 빈민지역에 있는 우리끼리 뭔가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 해보자[...].⁴⁵⁾

따라서 정부의 시범사업(1996~99년)으로 지정된 대전동구 자활지원센터(1996년) 또한 ‘대한 성공회 성남동 나눔의 집’ (대전 동구)이라는 종교단체였다. 1996년 동구 자활센터를 시작으로 2000년 대덕구자활센터, 2001년 서구자활센터, 2002년 중구자활센터, 2010년 유성자활센터를 지정으로 현재 5개 기초자치단체별로 각 1개씩의 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장창수, 2014: 12).

45) 고철영의 인터뷰(2016. 10. 28) 중에서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자활운동이 제도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자활은 사회운동적 성향을 강하게 지녔는데, 대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초기 자활사업의 실무자들은 대전지역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으로부터 충원되는 구조였으며, 상대적으로 정부의 간섭도 느슨한 편이었다. 따라서 실무자들 사회복지사가 아닌 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으며, 자활을 복지가 아닌 주민운동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따라서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자활공동체의 운영 또한 협동조합 방식을 강력하게 지향하였다.

2001년도(201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부터는 제도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자활사업이 시작된 기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전까지는 각 자활센터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운동성이 강했죠.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제한도 없었고, 그때는 이것을 복지라기보다는 주민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운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무자들은 봉제 사업가면 거기서 같이 일하고, 간병인 사업하면 같이 병원 다니고, 푸드뱅크 사업 같은 경우 같이 다니면서 음식물 받아서 같이 배급[...]. 46)

자활센터장이 특히 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 했던 사람들,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채용해서 같이 일을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 시설로 분류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였고. 시범사업 기간이었고. 초기 시작 자체가 어떤 도시지역 지역운동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복지라는 생각을 안했었죠. 47)

자활사업은 201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급속하게 제도화 되어갔지만, 출발은 지역의 빈민운동으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한 축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및 대안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생협운동이 태동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면, 또 다른 한 편에서는 빈민운동에서 출발한 자활운동이 태동하고 제도화 되어가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시민사회로부터 혹은 밑으로부터 사회적경제운동이 형성되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가던 시기다.

46) 고철영의 인터뷰(2016. 10. 28) 중에서

47) 고철영의 인터뷰(2016. 10. 28)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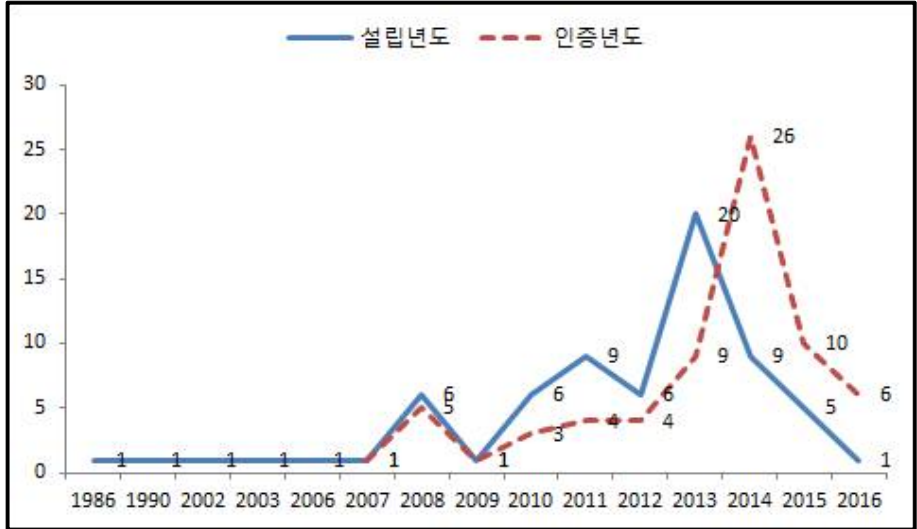
3) 사회적경제운동의 확산기(2007년 이후): 제도화를 통한 확산

이 시기는 사회적기업육성법(2007년 1월) 및 협동조합기본법(2012년 12월) 등이 제정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사회적경제영역이 양적으로 팽창한 점을 뚜렷한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대전지역에서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다. 앞서 언급한 자활공동체는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적기업육성정책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였으며, 마을문제와 주민들의 경제적 필요를 해결하려는 마을단위의 마을기업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⁴⁸⁾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로부터 출발한 사회적경제운동이 국가의 제도영역으로 본격적으로 포섭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민관협력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제도화 과정을 국가에 의한 포섭으로 보든 아니면 민관협력으로 보든 분명한 사실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양적으로 팽창했을 뿐 아니라 지역시민사회(혹은 시민운동)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먼저 대전지역 (예비)사회적 기업의 양적인 성장 궤적을 보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활동했던 조직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4] 참조). 이러한 조직들은 주로 활동의 역사가 오래된 자활기업 및 생협 조직들이다. 현재 총 69개의 (예비)사회적 기업들이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48) 본 보고서에 사용한 대전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관련 통계자료는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에서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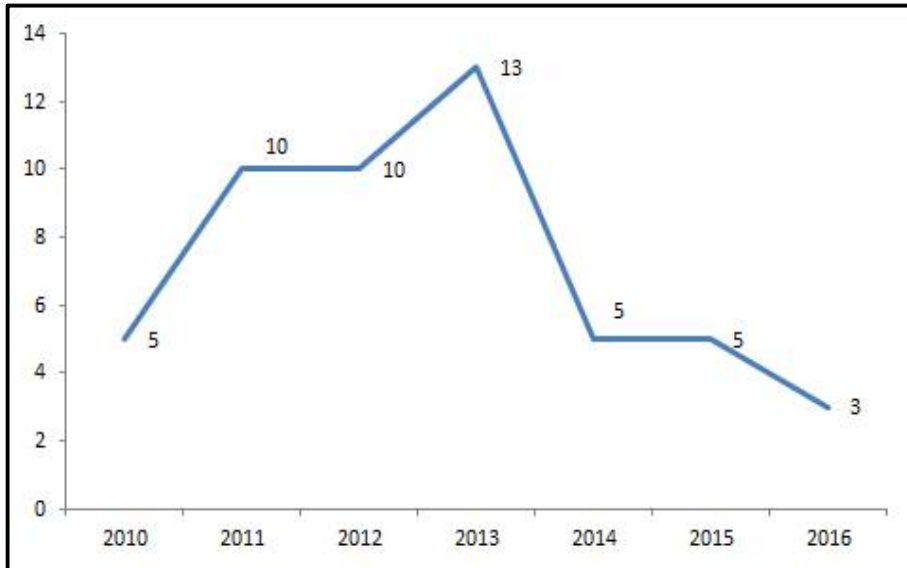
[그림 3. 4] 연도별 (예비)사회적 기업 현황(단위: 개)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보면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63.8%)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았다(<표 3. 4> 참조). 이는 대전지역의 사회적기업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힘든 한계 노동자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기업의 가장 일반적 형태다.

<표 3. 4> 유형별 사회적기업 현황

유형	개수(%)
사회서비스형	4(5.8)
일자리제공형	44(63.8)
지역사회공헌형	6(8.7)
혼합형	11(15.9)
기타형	4(5.8)
합계	69(100.0)

다음으로 마을기업의 성장 궤적을 보면 2011년에서 2013년까지 2년 동안 급격히 성장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2014년부터 둔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다(그림 3. 5) 참조). 마을기업은 역사가 짧아 이러한 둔화과정이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내부 동력의 소진에 따른 침체인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최근 들어 양적 성장이 둔화된 것은 분명해 본 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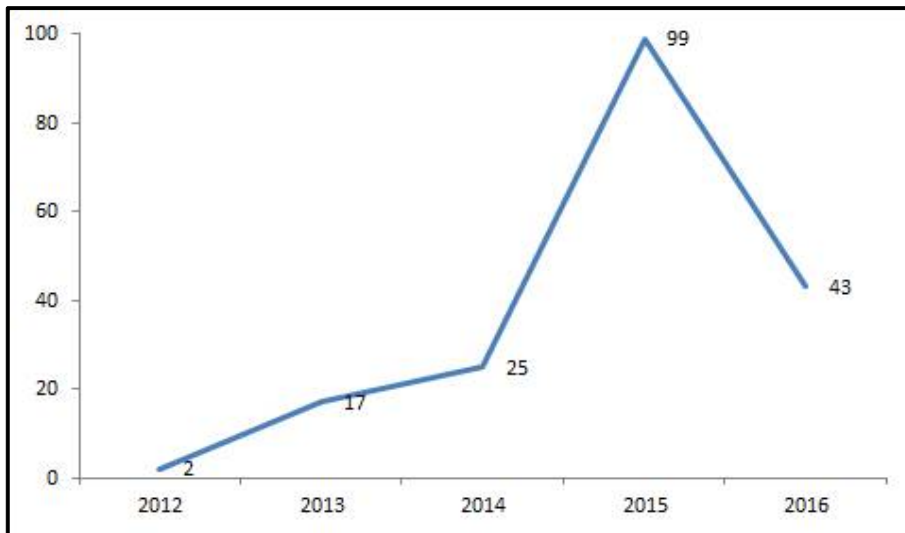
[그림 3. 5] 연도별 마을기업 현황(단위: 개)

유형별로 마을기업의 현황을 보면 물건을 만드는 제조형(47.1%)과 도시마을공동체형(23.5%)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표 3. 5〉 참조). 제조형 마을기업은 상당수 식품제조와 연관된 것으로 주민들의 일상적 필요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도시마을공동체형은 마을카페가 주류를 이룬다. 즉 주민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장소로 카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을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은 다르지만, 모두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마을기업이 마을공동체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5> 유형별 마을기업 현황

유형	개(%)
도시마을공동체형	12(23.5)
생태농업형	7(13.7)
여가와 문화형	8(15.7)
제조형	24(47.1)
합계	51(100.0)

연도별 협동조합의 성장을 보면 협동조합기본법(2012년 12월)이 시행된 2년 후인 2015년에 정점에 이르렀다(그림 3. 6] 참조). 법 시행의 역사가 짧아 장기적 궤적을 확인할 수 없으나, 관련 법 제정이 협동조합 결성을 유인한 측면은 분명해 보인다.



[그림 3. 6] 연도별 협동조합 현황(단위: 개)

업종별 협동조합 현황을 보면 매우 다양한 업종에서 협동조합이 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표 3. 6) 참조). 제조업(12.7%) 및 도소매업(28.9%), 교육 서비스업(15.7%) 분야의 비중이 여타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협동조합이라는 조직 형태가 폭 넓은 업종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표 3. 6> 업종별 협동조합 현황(단위: 개)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개수	계(%)
제조업	제조업	50	50(12.7)
도매 및 소매업	도소매업	113	114(28.9)
	소매업	1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18	18(4.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4	4(1.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21	21(15.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1	18(4.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7	
교육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55	62(15.7)
	교육, 상담사업	1	
	교육사업	4	
	심리상담서비스업 ※임의분류	1	
	청소년, 가족, 경영자 등 코칭사업※임의분류	1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	8(2.0)
	사회복지 서비스업	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	37(9.4)
	문화예술사업	6	
	문화체험사업	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 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및기타서비스지원	25	25
농업, 임업 및 어업	농업	1	13(3.3)
	농업, 임업, 축산업	12	
건설업	건설 건축업	6	7(1.8)
	건설업	1	
운수업	운송업	1	11(2.8)
	운송사업	1	
	운수업	8	
	택송사업, 물류사업	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4	4(1.0)
기타	기타	1	2(0.5)
	서비스업	1	
합계		394	394

제도화 이후 확장된 사회적경제조직의 양적 현황을 비교해 보면 규모면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76.7%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협동조합의 설립기준과 절차가 그만큼 간편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경우 정부로부터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인증되는 구조인 반면에 협동조합은 당사자 신고로 간편하게 설립할 수 있다. 자치구별 분포를 보면 사회적기업은 중구(27.5%)와 유성구(27.5%), 마을기업은 중구(23.7%), 협동조합은 서구(29.3%)와 유성구(27.8)에 많이 위치하고 있었다(<표. 3. 7> 참조). 즉 다른 자치구에 비해 동구의 사회적경제조직의 비중이 뚜렷하게 낮게 나타났다.

<표 3. 7> 자치구별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단위: 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합계	
	개	%	개	%	개	%	개	%
동구	10	14.5	8	15.7	44	11.1	62	12.0
중구	19	27.5	14	27.5	94	23.7	127	24.6
서구	12	17.4	11	21.6	116	29.3	139	26.9
유성구	19	27.5	12	23.5	110	27.8	141	27.3
대덕구	9	13.0	6	11.8	32	8.1	47	9.1
합계	69	13.4	51	9.9	396	76.7	516	100.0

대전지역의 사회적경제운동은 일제감정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출발과 활동은 87년 민주화 이후 지역의 시민사회로부터 결성된 한밭생협, 한살림대전, 지역화폐운동, 의료생협운동이 정착한 2000년대 중반까지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등이 제정되면서 사회적경제의 제도화 과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제도화 과정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정부에 의한 사회적경제의 포섭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민관협력의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어떤 관점을 취하든 제도화 과정은 대전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양적이 성장을 가져온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제4절 사회적경제운동의 사례

1. 한밭생활협동조합

1) 한밭생협의 태동과 전개과정

(1) 정착 단계(1988~2000년): 독자적인 지역생협에서 21세기생협연대로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지역에 기반을 둔 생협의 창립은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독재 대 민주라는 거대한 갈등이 해체되면서, 다양한 사회운동들로 한국 사회운동의 지형도가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운동의 재구조화 과정 속에서 대안사회운동 또는 환경운동으로 관점에서 생협운동이 새롭게 부상한 것이다. 대전의 한밭생협 또한 이러한 한국 사회운동의 새로운 재편 과정 속에서 등장한 것이다.

앞서 확인했듯이 1988년 점포형 매장으로 출발한 살림의 집은 한밭생협을 창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1990년대 초반 독자적인 지역생협으로 창립할 것인지 아니면 한살림대전의 형태로 창립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일부 있었지만, 결론은 한밭 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의 독자적인 지역생협으로 창립(1990년 6월 28일)되었다.

한밭생협은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직접적 도전과 개혁을 지향하기보다는 안전한 먹을거리라는 생활의제를 중심으로 한 생활세계 개혁적 사회운동이었기 때문에 지역여성들이 운동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초기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의욕적인 출발에도 불구하고 생협운동은 물품구매와 판매, 물류, 마케팅, 회계 등 높은 전문화 수준을 요구하는 업무의 연속이었다. 즉 출범 초기 여러 경영상의 문제와 함께 만성적인 적자상태가 계속되었다.

창립이후 경험하는 경영의 비효율성과 만성적인 적자는 한밭생협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는 당시 소규모 지역생협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평(인천), 부천, 별내(강서, 양천), 수원, 안산 등 수도권 지역생협을 중심으로 ‘물류사업통합’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1세기생협연대’를 결성하기에 이르는데, 이 과정에 한밭생협 또한 참여하였다. 당시 21세기생협연대(현재, iCOOP생협)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왜냐하면 비록 한밭생협이 적자상태에 놓

여있기 했지만, 지역생협 중에서는 독자적인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직도 잘 갖추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생협과는 지리적 거리로 인해 이전에 공동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었다.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버티고 있었던 곳은 한발생협 밖에 없었어요. 그때 두레생협연합회는 그래도 협동조합으로서 최소한의 이사회라든가 경영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었는데 21세기생협연대는 그런 상황이 못됐거든요. 그래서 한발생협 이사들의 반등이 좀 나뉘어졌어요. 우리가 적자이긴 하지만 독자적인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연대에 들어가냐는 거지⁴⁹⁾

그러나 한정된 지역 자원에만 의지해서는 경영의 비효율성과 만성적인 적자를 극복할 수 있는 뚜렷한 해법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이사진과 생산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걸쳐 21세기생협연대에 결합하였다. 한발생협은 21세기생협연대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된다. 특히 물류통합과 조합비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영의 합리화뿐 아니라 만성적인 적자상태에서 벗어날 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경영에 대한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생협운동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원과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여력 또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표 3. 8> 한발생협의 초기 연혁

일지	내용
1988년 6월 25일	살림의 집 개관
1990년 3월 27일	살림의 집 운영위원회와 대전한살림 생활공동체 준비위원회와 간담회
1990년 4월 30일	한발살림소비자협동조합 발기인회 구성
1990년 6월 28일	한발살림소비자협동조합 창립
1993년 3월	한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1994년 4월 2일	중구 중촌동에서 서구 월평동으로 조합이전
1997년 9월	부평(인천), 부천, 별내(강서, 양천), 수원, 안산 등 수도권 지역생협과 함께 21세기생협연대(현재, icoop생협)조직
1998년 8월	조합비 제도 실시
1999년 11월 22일	한발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2000년 1월	21세기생협연대 중부센터 개소(한발생협 물류사업 위탁)

출처, 「icoop한발생협 16차 대의원 총회 자료집」 p. 9

49) 조정민의 인터뷰 중에서(이채민, 2010: 26에서 재인용).

그간 지역별로 분산적으로 운영되던 물류사업을 연대차원으로 일괄 통합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취급물량의 규모화를 가능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유통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정은미, 2007; 아이쿱협동조합 연구소 엮, 2016: 225-6). 물류통합은 직접적인 비용절감의 효과뿐 아니라 지역생협이 과도한 물류업무로부터 벗어나 경영안정화를 이루고 작은 규모로도 생협 설립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아이쿱협동조합 연구소 엮, 2016: 226).

조합원 조합비제도는 물류통합과 함께 생협의 재정상태를 안정화시킨 혁신적 전환점이었다. 생협에서 판매하는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생산원가가 높다고 해서 조합원들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한다면 이 또한 생협운동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이다. 즉 생협은 우리의 농업을 보전하고 조합원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는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했다. 따라서 조합원들에게 낮은 마진율에 물건을 판매해야 했기 때문에 매출이익을 통해 생협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버거운 일이었다. 즉 이러한 판매구조로 인해 한발생협은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조합비제도는 이러한 운영자금의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해 주었다.

조합비제도는 물품가격은 원가대로 낮은 마진율로 판매하는 대신 생협 운영에 필요 운영자금을 조합원이 $1/n$ 로 나누어 분담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하면 시민단체 회원들이 내는 월 회비와 유사한 것이다. 즉 생협의 운영자금(조합비)을 내는 조합원들에게는 운영자금을 내는 것을 대신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생협의 입장에서는 물품 판매와 별도로 안정적인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조합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합비제도는 생협과 조합원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이 둘 사이의 파트너십 형성에도 기여하였다.

(2) 안정화 단계(2001~2008년): 조합원 역량강화와 전문위원회체계 정비

이전 시기가 한발생협이 21세기생협연대에 참여하면서 생협의 조직적 틀이 체계화된 단계라고 할 수 있다면, 이후의 시기는 정비된 조직적 틀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이면서도 공고하게 정착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발생협은 물류통합을 통해 과중한 물류업무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조합비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자금 또한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생협운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원 확대와 역량강화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

아무래도 물류통합 및 조합비제도 도입을 통한 조직재정비 과정은 업무의 특성상 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의 핵심적인 리더와 상근활동가의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소수에게 영향력이 집중되었던 이유가 조직재정비라는 업무의 특성도 있었지만, 협동조합 운영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원 규모와 역량 부족 또한 동시에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한발생협의 핵심적인 사업과제는 조합원 확대와 조합원 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었다.

한발생협의 대의원대회 자료집에 수록된 사업방향과 사업목적에 보면, 조합원 확대, 조합원 자치역량강화, 위원회 활성화 등이 핵심적 키워드로 등장한다(〈표 3. 9 참조). 조합원은 생협의 인적·물적자원의 토대라는 측면에서 조합원의 양적 확대는 생협의 매우 주요한 사업목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협의 모든 사업들은 조합원 확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하지만 조합원 확대는 생협 자체의 노력만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한발생협의 조합원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결정적 계기는 2008년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였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뒷받침해 준다.

<표 3. 9> 사업의 중점방향과 구체적인 사업목적(2001~2008년)

연도	사업의 중점방향	주요 사업목적
2003	-조합원 확대 -조합원 자치역량강화 -공급 서비스 향상, 품질관리, 생필품 가격 안정화 -적자해소 -지역사회 식품안전활동 참여	-조합원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생협 -조합원이 전문가로 활동하도록 돕는 생협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협 -사업의 집중화, 다각화
2004	-조합원 조직활동 안정화 -사무업무의 표준화 -조합원 관리 체계화 -조합원을 위한 정착	-조합원 확대 -운영위원회 활성화 -마을모임 활성화
2005	-조합원 교육활성화 -한밭생협 17년 역사자료 정리 -신규 조합원 교육과 관리강화 -조합원을 위한 조직활동 강화	-조합원 확대 -운영위원회 활성화 -마을모임 활성화 -조합원 교육 -산지견학 -사무업무 안정화
2006	-조합원 확대와 사업에 대한 책임성 정착 -활동가의 체계적인 육성 -우리농업을 지키는 소비자운동체 생협	-조합원 확대 -조합원 활동 참여 확대와 관리력 배양 -활동가의 체계적인 육성 -조합사업이 다양성 개발 -운영위원회별 세부계획 수립
2007	-조합원 확대 -식품안전생활 시스템 구축 -조합원 관계 맺기	-이웃에게 조합원 소개하기 -소비자 거리 캠페인 -조합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구조 확립 -친환경 급식운동 정착 -신규조합원 관계 맺기 -마을모임 단위의 조합원 관계 맺기 확대 -운영위원회별 세부 계획 수립 -활동가 배양
2008	-icoop 한밭생협 정체성 확정과 공유 -조합원 관계 맺기를 통한 조합원 확대 -지역 내 식품안전시스템 준비 -식품안전지수 평가활동 전개	-지역 내 베이커리 및 복합매장 마련 -친환경급식운동 -운영위원회별 세부 계획수립

자료: 한밭생협 「대의원총회자료집」 각 년도에서 재구성

생협이 협동조합이라는 측면에서 의사결정의 민주성은 생협운영의 핵심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참여 이전 생협의 의미와 사회적 목표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합리적 혹은 이기적 소비자로서 참여가 아니라 생태적 감수성과 공적 안목을 지닌 시민으로서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 시기 한밭생협은 조합원들의 자치역량 강화의 수단으로 교육을 강조하였다.

당시 한밭생협에서 직접 진행했거나 참여했던 조합원 및 임원들의 교육 내용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체계화되고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인다.⁵⁰⁾ 아래 표는 당시 진행됐던 주요한 교육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교육 내용은 건강, 식품안전,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는데, 특히 식품안전 관련 교육이 두드러진다(<표3. 10> 참조). 식품안전교육이 강조된 이유는 생협의 출발자체가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욕구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생협의 물품관리를 위해서라도 관련 전문지식을 필요로 했던 측면도 영향을 미친 것을 보인다.

<표 3. 10> 주요 교육내용(2005~2008년)

	2005	2006	2007	2008
건강	- 녹색건강강좌	- 아토피강좌	-	- 건강한 요리강좌
식품 안전	- 어린이식품 안전 교육	- 식품영양학 강좌	- 광우병 못다 한 이야기	- 식품안전교육 - 식품안전강사교육 - 광우병 위험 미국쇠고기 수입의 진실
체험	-	-	- 천연비누 만들기 - 어린이 도자기 체험 - 양초만들기	- 어린이 목공체험 - 일본어배우기 - 천연화장품 배우기 - 우리밀빵 만들기

자료: 한밭생협 「대의원총회자료집」 각 년도에서 재구성

각종 전문위원회는 조합원들이 한밭생협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적 통로인 동시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논의되고 실현하는 단위였다. 따라서 위원회의 활성화는 생협의 민주적 운영뿐 아니라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무척 중요한 과제였다. 2008년을 기준을 보면 위원회는 물품위원회, 식품안전위원회, 급식위원회, 마을모임위원회, 동아리 등 5개 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물품위원회는 물품 심의, 생산지 점검, 생산지와 교류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생협의 핵심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회의도 자주 열리고 교육을 통한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도 중요했다. 특히 1차 농산물 중심의 판매에

50) 한밭생협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다른 단체와의 연합교육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한밭생협의 대의원총회자료집에서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기록해 두었다.

서 조합원들의 요구로 단순 조리가 가능한 가공식품이 늘어나면서 심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게 되었다. 식품안전위원회는 유해첨가물식품, 유전자조작식품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식품 섭취와 확산을 차단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교육 활동의 주로 진행하였다. 2008년 식품안전위원회가 진행한 교육 활동을 보면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표 3. 11> 참조).

<표 3. 11> 식품안전위원회 주요 교육활동(2008년)

주제	내용	대상	장소
자녀와 함께 당도실험	설탕이야기와 당도실험	어은동 마을모임 조합원과 자녀들	어은동
엄마가 차려주는 우리 아이 밥상	어릴 적 입맛을 전통식단에 길들이자	도서관 이용 학부모와 자녀들	비래동 꾸러기 도서관
왜 잘 먹야 하나요	똥이야기 앞치마와 색소실험	도서관 이용 학부모와 자녀들	갈마동 땅콩도서관
왜 잘 먹야 하나요	똥이야기 앞치마와 색소실험	도서관 이용 학부모와 자녀들	내동 작은나무 도서관
환경호르몬이란	환경호르몬의 정의와 예방법	용전초등학생	용전초등학교
엄마가 차려주는 우리아이 밥상	현미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와 색소실험	원생과 학부모	관평동 푸르지오 어린이집
식품첨가물의 위해성	식품첨가물의 위해성과 색소실험	성인대상	민들레 의료생협
엄마가 차려주는 우리아이 밥상	왜 전통식단으로 밥상을 차려야 하는가	성인대상	중촌동 짜장도서관

자료: 한발생협 「대의원총회자료집」 각 년도에서 재구성

2008년 새롭게 만들어진 급식위원회는 개별 가구 중심의 안전한 먹을거리 소비를 넘어 식품안전시스템을 지역사회에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측면에서, 생협운동의 확장성을 잘 보여준다. 위원회 활동 초기에는 급식모니터링 수준에서 출발하였지만 이후 지속해서 관련 사업들을 발전시켜 나갔다. 마을모임위원회 및 동아리는 조합원들이 가장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이자 공동학습과 체험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모임과 동아리 참여를 통해 조합원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이는 다시 생협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을모임과 동아리 활성화는 조합원들의 자율적이고 주체적 참여를 강조하는 생협운동의 근간이라고 할 수도 있다.

임원 및 활동가들의 오랜 노력 끝에 이 시기 마을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2008년 기준 총 18개의 마을모임과 5개의 동아리 모임이 만들어졌다. 특히 마을모임을 중심으로 윤리적 소비, 광우병 소고기, 학교급식, 식품안전, 한반도 대운하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논의되었을 뿐 아니라 공동의 체험활동들이 진행되면서 마을모임은 지역사회의 풀뿌리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8년 한 해 동안 146번의 마을모임이 진행되었으며 총 951명이 참여하였다(〈표 3. 12〉 참조). 당시 기록을 확인해 보면 마을모임에는 평균 5~10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마을모임의 구별 분포를 보면 유성구(66.7%)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아리는 2008년 한 해 동안 32번의 모임에 425명이 참여하였다. 2008년부터 본격화된 마을모임과 동아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15년 기준 61개 마을모임과 51개 동아리가 한밭생협의 울타리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표 3. 12〉 마을 및 동아리모임 현황(2008년)

구분	모임장소/주제	연간모임 횟수	총참여인원	평균참여인원 (1회)
중구	태평동	11	72	6.5
	문화동	10	49	4.9
서구	둔산동	9	79	8.8
	삼천동	1	5	5.0
	내동	10	53	5.3
대덕구	송촌동	10	68	6.8
유성	갈마동	11	84	7.6
	하기동	10	80	8.0
	전민동	12	95	7.9
	반석동	12	60	5.0
	장대동	7	41	5.9
	관평동	6	27	4.5
	어은동	11	69	6.3
	지족동	2	9	4.5
	관저동	12	63	5.3
	둔산동	9	79	8.8
	신성동	1	7	7.0
	궁동	2	11	5.5
합계		146	951	6.5

구분	모임장소/주제	연간모임 횟수	총참여인원	평균참여인원 (1회)
동아리모임	도자기동아리	12	85	7.1
	국악동아리	12	273	22.8
	일본어	3	13	4.3
	우리말빵만들기	2	19	9.5
	천연화장품만들기	3	35	11.7
합계		32	425	13.3

자료: 한발생협 「대의원총회자료집」(2018)

(3) 대중화 단계(2009~현재): 지역기반 확대와 생협운동의 가치 확산

앞선 시기가 조합비제도 도입과 물류통합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조합원 역량 강화와 전문위원회체계를 통해 조직을 안정화한 단계였다면 2009년부터는 급격한 조합원의 양적 성장과 생협적 가치를 지역사회 전역으로 확산하는 대중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시기에도 조합원과 활동가의 역량강화, 민주성 강화, 전문위원회 활성화 또한 여전히 주요한 사업 목표였다. 하지만 이전 시기에 비교해서 매장사업을 통한 생협의 지역적 기반 확대, 윤리적 소비, 공정무역, 각종 사회정치적 사안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시민운동과의 연대 등이 새로운 키워드들로 새롭게 부상하였다(〈표 3. 13〉 참조)

2000년대를 경과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가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를 계기로 식품안전이 전국가적·사회적 이슈로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확대는 자연스럽게 영리기업들의 친환경유기농시장 진출을 유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생협이 영리기업과 경쟁해하는 새로운 국면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생협연대(아이쿱) 차원에서 독자물품 브랜드인 'The only 자연드림' 만들고, 조합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사업(자연드림)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아이쿱 전국단위의 발전계획에 맞춰 대전지역에서도 둔산점(2009년 5월, 2011년 10월 확장이전), 서대전(2010년 6월), 월평점(2010년 11월), 송촌점(2013년 5월) 등 4개 직영 매장을 개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장 구매는 온라인 구매와 다르게 상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문 후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물건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매장 구매의 이러한 장점은 한발생협의 전체 매출액을 성장시킨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지역 매장은 조합원들 간의 교류와 지역활동, 생협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자연드림이라는 매장 개설은 한발생협의 지역적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영향력을 확장하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표 3. 13> 사업의 중점방향과 구체적인 사업목적(2009~현재)

연도	사업의 중점방향	구체적인 사업목적
2009	-조합원 확대를 통한 생협의 대중화 -지역 내 식품안전 시스템마련 -조합 내부 역량강화 및 활동가 육성과 비전제시	-협동조합 가치공유와 지역사회 내에서의 인지도 고취 -복합매장을 통한 대중성 확보 및 식품안전지대 형성 -조합내부 역량강화 -생협 전문활동가 육성 -생협 활동 범위의 다양화
2010	-생협운동의 대중적 토대 만들기 -윤리적 소비운동의 확산을 통한 사회적 과제해결 -조합원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생협활동	-조직활동과 매장사업 활성화 -매장사업 확대와 경영안정화 -윤리적 소비운동 7대 중점과제 추진 -조합원교육강화 -물품선정권한 이관에 따른 조합원 의견수렴 활성화 -마을모임 조직을 위한 활동가 육성
2011	-조합원이 참여하는 생협활동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민운동 -생활속의 환경실천을 하는 조합원 운동전개 -윤리적 소비운동 확대 -공정무역운동 확대	-마을모임 활성화 -조합원 활동가 육성 -매장사업은 물품 구매 공간을 넘어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 -사회적 실천과 연대활동
2012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소비자와 한발살림 -조합원 중심의 조직활동 -조합원의 일상적인 참여 활동 강화로 조직 안정화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진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조합원 역할 활성화 -조합원 활동가 육성 -활동력을 높이고 조직 안정화 -사회적 과제 실현과 윤리적 소비운동 확산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진 -매장사업 안정화
2013	-조합원의 참주인 되기 -조합원의 요구를 실현하는 활동 -사회공공성인식 증대와 실천운동의 확산 -지역사회 연대와 기여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	-조합원이 주체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교육 및 훈련강화 -조합운영이 훈련과 참여로 민주시민의식 찾기 -마을모임, 동아리 등의 기초 활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모델 개발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간마련 -나눔 프로그램의 개발과 조합원 참여 유도 -조합원 삶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과제 실현 -지역사회 연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연도	사업의 중점방향	구체적인 사업목적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원의 라이프 스타일과 함께 하는 활동강화 -사회적 과제를 실천하는 사회비자운동 모델 창출 -조합원 활동가의 역량강화와 복지증진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인문운동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장을 중심으로 한 조합원 말차 활동 -인문학 소모임 및 강좌개설 -윤리적 소비실천 -활동가로서의 긍지 향상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원 참주인 되기 -조합원에게 다가가는 조합활동 -지역사회 연대와 기여 -사회 공공성 인식 증대와 실천운동의 확산 -협동조합 가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과 활동의 분리와 집중 -중구, 동구 조합 설립을 위한 지원 -지역별 활동 기반 마련 -매장 물품 강화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강화(수매선수금 및 책임출자금 참여) -활동가 복지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는 재미있게 활동은 활기차게 -물품과 함께 조합원 속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건강한 먹거리 운동 -지역과 함께하는 한발생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활동의 활성화 -지역활동기반 마련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강화 -조합원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

자료: 한발생협 「대의원총회자료집」 각 년도에서 재구성

또한 이 시기 한발생협은 생협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윤리적 소비운동’을 지역 사회로 확산시키려는 활동을 주요하게 전개하였다. 윤리적 소비는 환경, 평화, 인권, 정의 등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고려한 소비이면서 소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담고 있다. 윤리적 소비운동은 이 시기 아이쿱 전체의 발전전략으로 채택되었는데, 한발생협 또한 이를 수용하여 지역사회에서 윤리적 소비운동을 진행하였다.

2010년 한발생협은 아래와 같이 윤리적 소비의 7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표 3. 14>참조). 이후 구체적 내용에서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윤리적 소비운동은 생협의 가치를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주요한 사업이 되었다. 동시에 한발생협은 친환경무상급식운동, 국립공원지킴이운동 등과 같은 지역의제를 중심으로 지역시민운동세력과의 활발한 연대활동을 수행하였다.

<표 3. 14> 윤리적 소비운동의 7개 중점 과제

분야	내용
환경분야	물품 포장 용기 재사용 활성화
농업분야	우리밀 대중화 및 소비확산을 통한 밀 자급률 제고
사회적 과제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공정무역	필리핀 파나이, 동티모르 공정무역 생산지 개발협력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사회적 약자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물품 확대
조합원 실권	일상적인 생활실천운동의 전개
지역사회의 기여	남눔활동,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기여활동 활성화

자료: 한발생협 「대의원총회자료집」(2010)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조합원의 급속한 성장, 매장운영, 윤리적 소비운동 등은 한발생협을 지역사회에서 대중화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데 조직의 규모와 업무가 확장되면서 조직의 내부 민주주의 문제가 부상하였다. 생협(혹은 협동조합)이 민주적 운영원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내부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2008년을 기점으로 하여 조합원들의 원활한 의견수렴과 참여에 바탕을 둔 민주적 조직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당시 한발생협의 이사장이었던 최공숙은 14차 대의원총회 자료집(2013년 2월)에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한발생협은 2004년 위원회 체제를 갖추면서 그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위원회 활동은 조합원들을 활동가로 훈련시켜냈으며 지역생협의 리더로 발돋움시켰다. 다양해진 위원회 활동은 조합원 요구에 부합되었으며 이는 지역조합이 한단계 위로 뛰어오를 수 있는 디딤판의 역할을 해왔다. 현재에도 위원회의 활동은 한발생협활동의 중심축이며 활동력의 집합체이다. 이러한 긍정적 역할이 있는 반면 그 한계 또한 명확하다.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조합원은 집중된 활동보다는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요구하며 이런 요구를 담아내는 조직은 지금의 위원회 조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자면 2012년 초기부터 몇 위원회는 늘어나는 위원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겼다. 많은 조합원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자 위원회는 동아

리를 만들어서 위원회 활동으로 미흡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맡기기도 했다. 또한 여러 가지 활동이 조합원들의 의해 요구될 때마다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나? 하며 고민하고 논쟁하기도 했다. 특히 세 개의 매장을 경영하면서 요구되는 활동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이었다. ...현재의 조직으로는 조합원의 요구하는 많은 내용을 채워줄 없는 바로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이다. 폭넓은 내용은 기존의 좁은 틀에는 채울 수 없고 새로운 형식은 낡은 내용만을 담아서 채워질 수 없는 것이다. 내용과 형식의 상호작용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어지는 시점인 것이다(최공숙, 2003: 222)

따라서 조직개편의 핵심적인 방향 또한 “양적으로 확대된 조합원을 어떻게 조합 활동에 참여시킬 것인가” 라는 내부 민주주의 강화로 모아지게 된다. 대중성, 민주성, 일상성, 수평성이라는 조직개편의 4대 원칙을 설정하고, 조직을 크게 조직활동팀과 참여활동팀으로 나누어 재편하였다(<표 3. 15> 참조). 조직활동팀에는 조합원들이 특별한 형식이나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마을모임, 동아리 등이 해당한다면, 참여활동팀은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성장하여 한발생협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합원 활동가들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최공숙, 2013). 따라서 조직활동팀과 참여활동팀은 기존의 전문위원회체제의 변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합원들의 의견수렴 기능을 더 강화하고(조직활동팀),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적 의제에 따라 유연하게 조직이 대응(참여활동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되었다.

<표 3. 15>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조직활동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모임위원회가 하던 역할을 확대해 조직활동의 자체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게 함 · 조직에 관한 정보전달과 공유 · 마을모임, 동아리 등 소모임 활성화 지원 · 지역위원회 조직 및 관리(매장과 떨어져 조합원 참여가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 매장서포터즈 운영, 마을모임을 통한 신규물품 소개 등
참여활동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의 다양한 참여를 발굴하고 기획하며 추진한다 · 조합원 참여활성화를 통한 생협운동 · 의제 중심의 활동(에너지, 환경, 급식, 식품안전, 지역사회연대, 논습지보존운동, 텃밭활동, 식생활네트워크, 마을기업 창업지원, 필요시 서명운동 등 전개) · 기존의 위원회 활동을 집중, 전문화

구분	내용
교육홍보팀	- 교육홍보팀 · 강사단 운영을 통해 각종 교육을 기획하고 집행 · 홍보 관련 업무 총괄

출처: 최공숙(2013)

2) 인적 자원의 변화: 조합원 규모의 변화

한발생협과 같이 공공성과 운동성이 강한 생협조직은 지속가능한 재산을 위해 적정 규모의 조합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조합원은 조직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저장소인 동시에 조직의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핵심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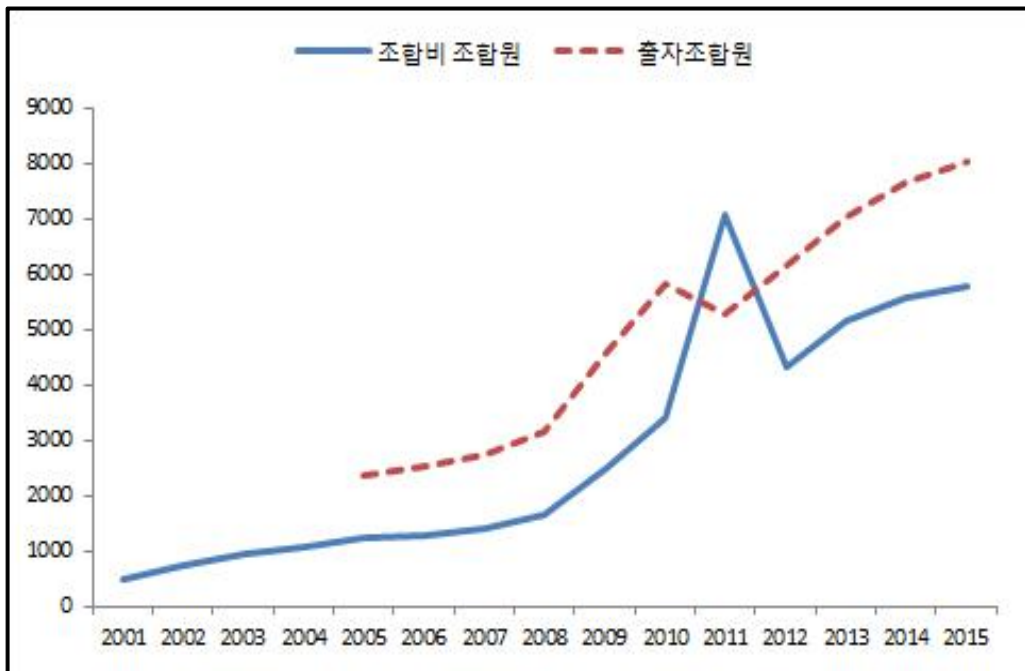
한발생협의 조합원은 크게 출자조합원과 조합비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조합비 조합원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생협에 일정한 운영비(조합비)를 내고 물품으로 구매하는 조합원이라는 측면에서 단순 출자조합원과는 구분된다. 하지만 출자조합원의 상당수가 조합비 조합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확인했듯이 조합비 조합원은 생협의 재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조합비 조합원 규모가 지난 15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다. 지난 시기 연간 평균증가율을 보면 조합비 조합원 20.2%, 출자조합원 15.7%의 증가율을 보였다(그림 3. 7) 및 <표 3. 16> 참조). 시간의 변화에 따른 조합원 증가율을 보면 2002(51.4%), 2003년(28.4%)에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후 안정세로 돌아섰다. 그러던 것이 2008년을 기점으로 출자 및 조합비 조합원 할 것 없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40% 이상의 높은 증가율 보였으며 2011년까지 이러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2008년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운동이 국민적인 호응을 얻었던 시점이다. 다시 말하면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확산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생협 조합원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안전한 식품에 대한 시민의 필요가 한발생협 조합원 증가의 결정적 원인

이었다. 동시에 한밭생협이 오프라인 매장(둔산점 2009년 5월, 서대전점 2010년 6월, 월평점 2010년 11월, 송촌점 2013년 5월)을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던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매장 영업이 확대된 시기가 2010년인 점을 고려할 때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라는 사회적 분위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던 조합원의 양적 상승세는 2012년 기점으로 다시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둔화 추세가 이전의 큰 증가시기 이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조정국면인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한밭생협의 양적 팽창이 한계에 이른 것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지만, 이전과 비교해서 둔화 폭이 무척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출자조합원 대비 조합비 조합원 비중이 늘어난 것은 조직의 재정 안정성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7] 조합원 규모의 변화(단위, 명)

자료: 한밭생협 「대의원총회자료집」 각 년도
 주. 출자조합원은 출자금 3만 원 이상 조합원

<표 3. 16> 조합원 규모의 변화(단위: 명)

구분	조합비 조합원	증가율(%)	출자 조합원	증가율(%)	출자조합원 대비 조합비 조합원(%)
2001	488		1,773		27.5
2002	739	51.4			
2003	949	28.4			
2004	1,092	15.1			
2005	1,263	15.7	2,366	33.4	53.4
2006	1,290	2.1	2,528	6.8	51.0
2007	1,403	8.8	2,736	8.2	51.3
2008	1,679	19.7	3,188	16.5	52.7
2009	2,515	49.8	4,579	43.6	54.9
2010	3,406	35.4	5,842	27.6	58.3
2011	4,106	20.6	7,084	21.3	58.0
2012	4,348	5.9	6,188	-12.6	70.3
2013	5,148	18.4	7,046	13.9	73.1
2014	5,575	8.3	7,674	8.9	72.6
2015	5,796	4.0	8,038	4.7	72.1
평균 증가율(년)	-	20.2	평균 증가율(년)	15.7	-

자료: 「대의원 총회 자료집」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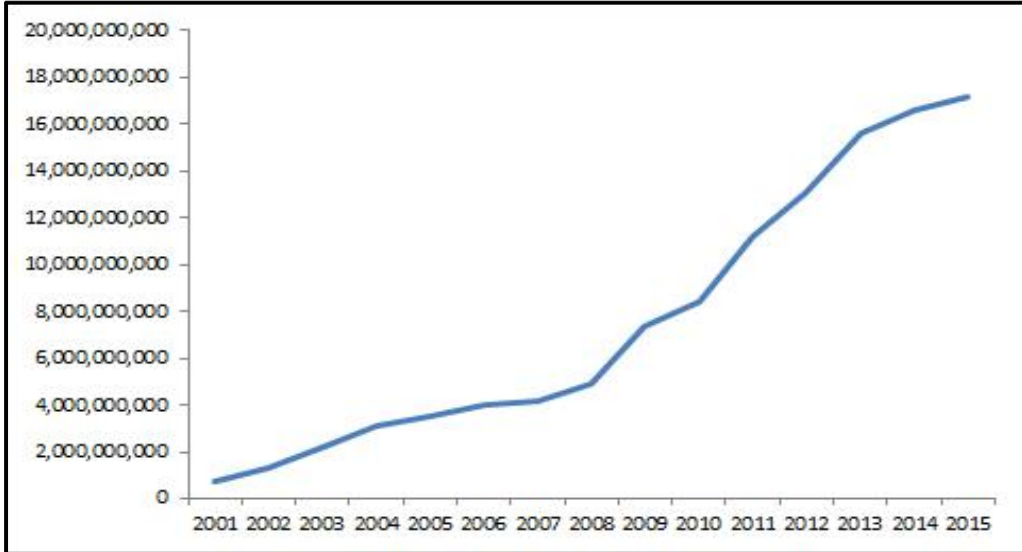
주. 2005년도 증가율은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함

3) 물적 자원의 변화: 수익 및 재정의 변화

(1) 매출액의 변화와 특성

재정은 생협의 지속적인 재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물적 자원이다. 생협은 사무실 확보, 상근활동가의 고용, 사업 및 경영비용, 새로운 정책개발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재정투자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재정을 안정화하고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생협운영의 기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한발생협의 물판판매 매출액을 보면 지난 15년 동안 큰 폭으로 성장해 왔다. 2001년(약 7억 5천만 원)과 2015년(약 171억 원)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15년 사이에 무려 22배가 늘었다(그림 3. 8] 및 <표 3. 17> 참조). 매출액 기준으로 본다면 매년 26.1%라는 큰 성장세를 보였다. 2008년과 2009년 조합원이 크게 성장하면서 이 시기 매출액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하였으며, 조합원 성장세가 둔화된 2014년과 2015년은 매출액 성장세도 둔화되었다. 즉 조합원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생협의 특성때문에 조합원 규모와 매출액 사이에는 강한 정비례 관계를 갖는다.



[그림 3. 8] 물품판매 매출액의 변화(단위, 원)

자료: 한밭생협 「대의원총회자료집」 각 년도

<표 3. 17> 물품판매 매출액의 변화

	매출액(원)	증가율(%)
2001	759,515,673	
2002	1,329,848,556	75.1
2003	2,190,065,887	64.7
2004	3,121,047,001	42.5
2005	3,493,650,877	11.9
2006	3,985,754,668	14.1
2007	4,175,654,086	4.8
2008	4,923,181,059	17.9
2009	7,363,009,239	49.6
2010	8,406,916,344	14.2
2011	11,231,808,814	33.6
2012	13,073,901,232	16.4
2013	15,595,562,743	19.3
2014	16,585,912,813	6.4
2015	17,188,078,901	3.6
평균증가율(년)	-	26.1

자료: 한밭생협 「대의원총회자료집」 각 년도

조합원 증가는 매출액 증대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외에도 4개 직영매장 운영(자연드림)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매장 영업 이후 온라인 매출이 폭이 크게 감소한 반면 오프라인 매장 매출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는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던 조합원들이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동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온라인(-15.2%)과 오프라인 매장(31.0%) 구매의 평균 증감율을 비교해 보면, 온라인의 감소율에 비해 오프라인 매장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매장이 새로운 조합원의 유입과 물품 구매 양을 증가시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볼 수 있다(〈표 3. 18〉 참조).

〈표 3. 18〉 물품판매 매출액의 변화

	온라인 매출	총매출 대비 비율	증감율	매장매출	총매출 대비 비율	증감율	총매출
2010	3,874,752,529	46.1		4,532,163,815	53.9		8,406,916,344
2011	3,246,446,215	27.2	-16.2	8,672,094,609	72.8	91.3	11,918,540,824
2012	2,697,073,654	20.6	-16.9	10,376,827,578	79.4	19.7	13,073,901,232
2013	2,253,483,424	14.4	-16.4	13,342,079,319	85.6	28.6	15,595,562,743
2014	1,831,199,973	11.0	-18.7	14,754,712,834	89.0	10.6	16,585,912,807
2015	1,689,400,943	9.8	-7.7	15,498,677,958	90.2	5.0	17,188,078,901
	평균증감율		-15.2	평균증감율		31.0	

자료: 한밭생협 「대의원총회자료집」(각 년도)

(2) 조합원 조합비의 변화

협동조합인 생협의 특성상 매출액 증대가 곧바로 조직의 재정안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생협은 이윤 창출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 즉 협동조합의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자에게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최소 마진율을 적용하여 물건을 판매한다. 결국 매출액이 높다고 해서 이윤이 많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날수록 운영경비와 상근인력만 증가시켜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도 한밭생협 초기 물품 판매의 낮은 마진율은 만성적인 적자운영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유기농은 농사짓는 데 필요한 자재 자체가 비싸요.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서 생산 원가를 줄일 방법이 없었던 거야. 우리는 20~30% 정도의 마진을 붙여서 생협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턱도 없는 거야. 나중에 전문가한테 상담을 했더니 어떻게 그동안 운영했나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농산물은 보통 도매 시장에서 100%를 훨씬 넘는 마진율을 붙여야 운영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한 농가에서 물품을 사는 즉시 적자로 된 거지⁵¹⁾

그래서 도입된 것이 조합비제도였다. 조합비제도는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대신 생협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합원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내는 제도이다. 조합비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1998년 8월)했을 당시 한밭생협의 핵심 관계자는 이 제도를 “경영적자를 해소해 줄 묘안”으로 생각했다고 한다(이채민, 2010: 27).

1997년 그 어수선했던 어느 날, 그동안은 중앙회 사업부에서만 가끔 보았던 신성식이라는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 물류를 연계하자고 제안하면서 구매 대행제도(현재, 조합비 제도)를 설명해주는데, 이게 경영 적자를 해소해 줄 묘안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⁵²⁾

조합비 제도의 도입과 정착은 한밭생협의 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합비 제도를 통해 물품 판매수익과 상관없이 생협의 운영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생협을 경영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표 3. 19>를 보면 사업외 수익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물품판매금액을 제외한 수입으로 실제로 조합경영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정의 90% 이상이 조합원 조합비에서 충당되고 있다. 조합비 규모를 보면 15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늘었다.

51) 진경희의 인터뷰 중에서(이채민, 2010: 34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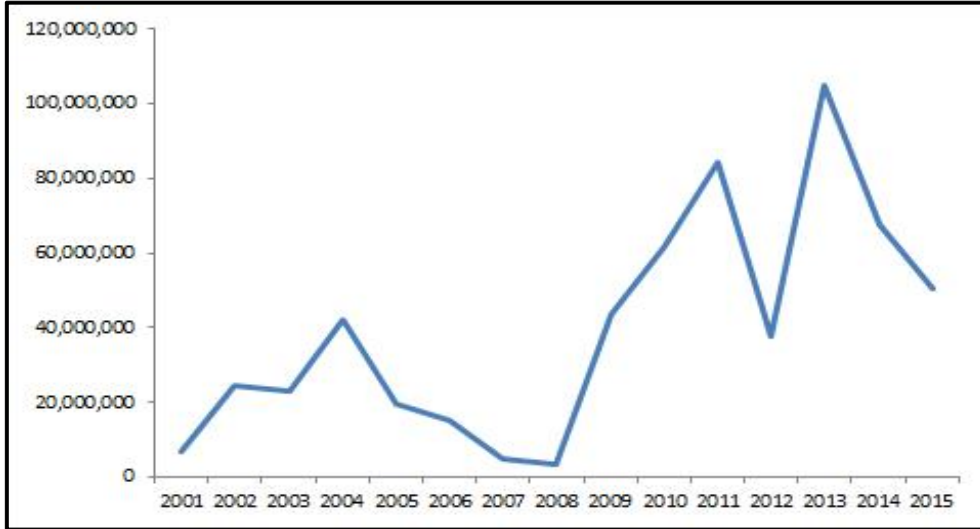
52) 진경희의 인터뷰 중에서(이채민, 2010: 27에서 재인용)

〈표 3. 19〉 사업의 수익 및 조합비의 변화(단위: 원, %)

	사업의 수익	증감율	조합원 조합비	증감율	사업의 수익 대비 조합비 비율
2001	78,178,000	-	77,380,000	-	99.0
2002	133,445,000	70.7	130,445,000	68.6	97.8
2003	173,831,927	30.3	172,965,000	32.6	99.5
2004	235,717,355	35.6	229,016,500	32.4	97.2
2005	279,407,804	18.5	275,571,000	20.3	98.6
2006	312,408,942	11.8	305,219,000	10.8	97.7
2007	328,661,896	5.2	312,484,000	2.4	95.1
2008	379,490,000	15.5	371,640,000	18.9	97.9
2009	444,020,334	17.0	419,834,000	13.0	94.6
2010	485,699,309	9.4	447,599,400	6.6	92.2
2011	869,576,865	79.0	624,666,816	39.6	71.8
2012	715,972,800	-17.7	640,490,000	2.5	89.5
2013	775,816,264	8.4	737,978,100	15.2	95.1
2014	817,357,391	5.4	786,368,000	6.6	96.2
2015	822,570,327	0.6	769,979,800	-2.1	93.6
평균 증가율 (1년 단위)	-	20.7	-	19.1	94.4 (평균)

자료: 한밭생협 「대의원총회자료집」(각 년도)

조합원 조합비 규모가 4억 원을 넘어선 2009년을 기점으로 단기 순이익 규모가 증감은 있지만 평균 64,437,231원(2009~2015년)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1억 원 이상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협동조합인 한밭생협의 특성상 반드시 단기 순이익만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협동조합의 정신에 맞게 활동을 통해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유무형의 서비스로 환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볼 수 있다.



[그림 3. 9] 단기순이익의 변화(단위: 원)

자료: 한밭생협 「대의원총회자료집」(각 년도)

<표 3. 20> 단기순이익의 변화(단위: 원, %)

	단기순이익	증감율
2001	7,086,967	-
2002	24,460,000	245.1
2003	23,018,610	-5.9
2004	42,382,470	84.1
2005	19,726,701	-53.5
2006	15,295,498	-22.5
2007	4,982,644	-67.4
2008	3,589,576	-28.0
2009	43,850,310	1,121.6
2010	61,788,027	40.9
2011	84,194,827	36.3
2012	37,799,226	-55.1
2013	104,929,096	177.6
2014	67,876,224	-35.3
2015	50,622,912	-25.4

자료: 한밭생협 「대의원총회자료집」(각 년도)

2.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1) 한살림대전생활협동운동 15년의 전개과정

(1) 태동과 형성: 1997~2001

한살림운동은 생명사상을 기반으로 한 유기농산물 도농직거래 운동으로 1986년에 설립하여 대전에서는 1997년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됐다.⁵³⁾ 당시 대전에서 처음 개점한 한살림매장은 한살림청주(충북)의 분점으로, 이 같은 형태로 1999년까지 총 3개의 매장이 둔산동, 대덕구, 신성동에 개설됐다. 한살림청주는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중심인 원주(강원도)와의 교류 속에서 농민운동과 연계하여 1990년에 독자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해왔다.⁵⁴⁾ 하지만 90년대 후반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직 확장을 고민했고, 마침 수도권 등을 통해서 한살림운동을 접한 대전시민의 한살림물품 판매 요청이 증가하자 분점을 개설하게 된 것이다. 즉 대전매장은 물품판매를 중심으로 운영했으며, 회원가입과 같은 조직사업은 한살림청주를 통해서 진행했다. 하지만 대전의 한살림소비자회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물품만을 이용하는 소비자로 한정하지 않았고, 농업과 생태계를 살리는 한살림운동의 주체로 참여하고자 했다. 따라서 대전의 독자조직 설립을 위한 한살림대전 준비모임(1999년)을 구성했다.

이 준비모임에 참여한 구성원은 주로 대전매장의 소비자회원과 한살림의 생명운동에 공감하는 시민들로 ‘동화읽는어른모임’ 회원, ‘무교회(無教會)’ 신자 그리고 ‘생명학교’ 를 통해서 교류한 생산자(농민) 등이었다.⁵⁵⁾ 이후 이들은 한살림대전 창

53) 이 글에는 「지역사회운동사 Ⅱ」(2015)의 한살림대전에 관한 일부내용과 인터뷰가 재인용됐다.

54) 한살림운동의 태동에 직접적인 바탕이 된 것은 원주의 지역사회개발운동과 가톨릭농민회운동으로, 원주에서는 1970년대부터 정치적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빈곤한 농민과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삶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협동조합 운동을 전개하며 마을의 자립과 경제민주화를 도모했다. 이 운동에 핵심주체였던 지학순, 장일순, 박재일 등은 이후 관행농업에 대한 폐해를 인식하고, 공동체 회복을 통해서 농업과 농촌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공동체운동 한살림을 창립하게 됐다. 즉 원주, 강릉, 경남지역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 운동이 먼저 전개됐고 이후 90년대 초반 조직의 명칭을 ‘한살림’으로 변경하고 활동했다. 하지만 광주, 청주는 80년대 후반에 조직 창립직후부터 한살림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즉 이 지역들은 한살림모임에 참여하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에 생명운동을 전개하고 지역한살림을 조직한 것이다(모심과 살림연구소, 2006).

55) 무교회주의는 1920년대 한국·일본에서 전개된 교회 혁신운동이다. 무교회주의는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이른바 교회주의에 반대 또는 저항하는 신앙과 신학사상으로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립을 위해 2년여 동안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모임을 위한 사무실을 개소하고 송촌동, 신선동에서 주민모임을 시작했으며, 2001년에 일본생협 그린코프를 방문하여 학습을 진행했다. 여기에 한살림서울과 한살림청주는 교육과 행정 지원 등 다각도의 실질적인 협력을 보였다. 또한 매년 여름과 겨울에는 농산촌 생산지 현장을 방문하여 생명사상을 공부하고, 지역생산자와 교류하는 생명학교를 실시해 한살림대전의 설립에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축적했다.

“초기에 대전 소비자들을 생명학교를 통해 접하면서 소비자들이 한살림활동을 지역에서 잘 할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한살림청주에서는 대전의 분화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때 소비자들이 과감하고 밀고 나갔기 때문에 창립을 서두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해요. 저도 잘 될 거라 믿었고요. 그래서 처음 준비모임도 옥잠화에서 여러 번 했어요. 옥잠화에서 여름에는 생명학교를 하고, 겨울에는 심성학교를 했거든요. 그러면 청주는 주로 제가 했다면 대전은 소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참 잘했어요. 한살림청주가 실무자 중심이었다면, 대전은 소비자와 생산자조직이 중심이 되어 다른 방법으로 시작하지 않았나 해요. 소비자와 생산자 중심으로 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⁵⁶⁾

즉 소비자회원들은 한살림대전의 창립을 위해 각고의 열정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그리고 마침내 회원 1,040명, 출자금 34,221,000원, 소모임 2곳(송촌동, 신성동), 직영매장 2곳(신성동, 월평동)을 기반으로, 2001년 12월 19일 한살림대전을 창립했다. 한살림대전의 창립 특징은 8,90년대 농민운동 및 환경운동을 기반으로 한 다른 지역한살림 조직과는 차별적으로 소비자가 운동의 주체가 되어 조직했다는 점이다. 즉 한살림의 소비자들은 화학농업과 저곡가 정책으로부터 벗어나 생태적인 농업·농촌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능동적 소비를 통해 선택하고 확산했다. 이러한 가치관은 창립문

시도는 일본의 무교회주의 창시자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의 문하에 있었던 한국인 유학생들로부터 비롯된다. 1921년 우치무라의 로마서 강의를 청강하여 27년 3월 귀국할 때까지 7년 동안 영향을 받은 김교신(金敎臣)을 중심으로 하여 함석헌(咸錫憲)·송두용(宋斗用)·정상훈(鄭相勳)·유석동(柳錫東)·양인성(楊仁性) 등이 1927년 7월 동인지 형태의 월간지 《성서조선(聖書朝鮮)》을 발간하였는데, 이 잡지가 한국에서 무교회주의 운동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인터넷 두산백과).
56) 한살림대전(2011), 「10주년 자료집」 내용 중 영동 옥잠화공동체 생산자 서순악 인터뷰 중에서

의 내용, ‘자연생태계의 순리에 맞는 생산방법과 생활양식을 실천함으로써, 생명살림 농업살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어나가는 활동을 펼치려 한다’ 로 표현되어 있다.

{자료 3. 3} 한살림대전 창립문

한살림대전 창립 다짐 문

우리는 건강한 자연과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생산과 생활, 그리고 이웃 간의 협동이 없으면 행복한 삶을 살수 없다. 특히 생명의 젖줄인 밥과 이 밥을 생산하는 튼튼한 농업이 없으면 인간생존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황금만능 이기주의에 기초한 우리 인간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생산과 생활양식은 인간생존 터전을 광범위하게 파괴시켜 공기와 물은 물론 마음 놓고 먹을 것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게 했으며 농업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아내고 있다.

인간관계 또한 불신과 갈등, 끝없는 경쟁의 골이 깊어가고 자연생명계의 그 어떤 동종 간에서도 볼 수 없는 생명경시 풍조가 최고의 고등동물이라고 자처하는 인간의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사회의 모습이 지속될 때 이 지구상에서 인간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위기적 확신이 높아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의 자원을 아끼고 자연생태계를 오염시키지 않으며 건강한 농업이 활기를 갖는 대책을 실천함으로써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 미래의 우리자식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일은 나와 너의 생활에 있어서 작은 부분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함께 변화할 수 있는 활동과 더불어 사는 삶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때 가능하다. 이 같은 시대적 소명에 따라 우리 한살림은 우리 농촌과 도시에서 자연생태계의 순리에 맞는 생산방법과 생활양식을 실천함으로써 생명살림, 농업살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활동을 펼치려 한다. 인간 생명유지는 건강한 농토, 농민생활이 보장되는 농업, 농촌에서 건강한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만큼 우리는 먹을거리를 살려내고 나누는 일을 기초로 생명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펼쳐 가는 활동을 해 나가려 한다.

한살림대전을 창립하는 우리들은 농촌, 직장, 가정 등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생명살림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한살림 이념과 운동이 대전지역에 뿌리내리고 확대 발전하도록 이웃과 함께 실천하고 활동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01년 12월 19일

한살림대전 창립총회 참석자 일동

(2) 정착단계: 2002~2004

창립직후 한살림대전의 중점 활동방향은 조직운영체계 구축이었다. 즉 조직사업과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물품판매 사업을 통해서 수지경영을 안정화하고, 회원들의 한살림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조직활동을 모색했다. 이에 2002년 공급차량 구입, 유성구 장동 배송센터 건립 등 사업의 물리적 기틀을 마련하고, 물품

이용액의 3%의 무출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1억1,928만원의 출자금을 조성하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했다. 또한 위원회, 소모임, 교육사업, 현장체험 및 도농교류 그리고 지역사회민사회와의 연대활동을 추진하며 조직활동의 폭을 넓혔다. 즉 회원들이 참여하는 2개의 위원회(물품위원회, 소비자활동위원회)와 5~6개의 마을 소모임이 구성됐으며, 회원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7회의 교육, 생산지 견학 및 체험 등 도농교류 활동 13회, 시민사회 연대활동 3회가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가을과 겨울에는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생명학교와 심성학교를 개최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적 교류를 위한 괴산 눈비산 마을에서의 감자심기, 영동 옥잠화 공동체의 들꽃 축제, 경남 합천 우리밀 밀사리 행사 등에 회원과 참여하여 농촌을 경험하고 일손을 도왔다. 이러한 행사에는 평균 15~20명의 회원이 참여했고 주로 가족단위 참여자가 많았다. 또한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도 진행됐는데, 농업희생 100인 100일 견기, 학교급식 조례재정 연대회의 참여, GMO 식품 위험성 공동강좌 개최 등을 진행했다. 특히 송촌동 마을모임에서 수돗물 불소화반대서명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1,500명의 서명을 받는 성과를 달성했다. 즉 2002년에는 조직 운영의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회원들과의 협력 안에서 안정적으로 사업과 활동이 추진됐다. 따라서 이와 같은 초기의 노력은 2002년 말 회원 수 2,262명, 매출액은 15억 8,464만원을 창출하며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초기의 재정적 열악함과 조직운영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사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가입회원 수와 물품 판매량은 크게 증가했으며 동시에 한살림대전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와 요구도 높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실현해줄 수 있는 살림꾼(직원)의 수와 전문적 역량은 매우 부족했다.⁵⁷⁾ 당시 직원은 총 10명으로 실무책임 1명, 공급 2명, 회계 1명, 매장책임 활동가 2명 그리고 시간제활동가 5명이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한살림청주에서 실무자를 지원해주기도 했지만 지속하지 못했고 결국 임원과 회원의 협동 그리고 무엇보다 실무자와 활동가들의 헌신 안에서 조직이 운영됐다. 이러한 가운데 소식지를 창간했고, 노은매장을 추가 개설했으며, 업무효율화를 위한 전산화시스템 마련, 생활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준비했다. 또한 조직의 부채 9천 만 원을 상환하는 성과도 달성했다.

57) 한살림에서는 본부에서 일하는 사람을 '실무자',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활동가'로 부르며, 이들을 총칭하여 '살림꾼'으로 명한다.

창립 2년 동안의 자산을 바탕으로 2004년 2월 26일, 한살림대전은 협동조합의 틀을 갖추기 위해 기존의 농업회사법인에서 생활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이는 단순히 조직의 법적지위를 변경한 것이 아닌, 조직운영 체계를 보다 민주적체제로 확고히 하고자 한 것이었다. 따라서 생명사상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자주적 공동체로서, 특히 한살림의 지역적·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지역생산자를 발굴하고, 환경보전형 지역농업의 조직화를 추진하여 생명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자료 3. 4}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설립취지문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설립 취지문

한살림대전은 2001년 12월 19일 한살림청주에서 분리되어 2년여 동안 양적· 질적성장 속에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초창기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의 근본을 함께 사는 것이며,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주의 생명을 먹고 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이들이 힘을 함께 하여 어려움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들어 환경과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운동이 확산되면서 뒤늦게나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도 합법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생명살림의 뿌리를 내리고자 합니다.

한살림대전생협은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원칙을 가진 조직체로 공동의 경제적, 문화적 필요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자주적인 공동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상실한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스스로 돕고 더불어 나누며 책임지는 가운데 평등한 자유로운 사람들의 연대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한살림대전생협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공동체 사회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단순한 생활재의 공동구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생명가치를 실현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주민복지와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스스로 실현해 나가며 이것이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문화가 도리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한살림대전생협의 지향은 궁극적으로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바꾸는 운동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의 지향과 가치를 바꾸지 않는다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편리하고 안락한 삶, 소비적이고 경쟁적인 마음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향을 통해 삶의 질적인 풍요로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일상의 행복으로 실현하는 힘을 얻고자 합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은 대전 및 충청권의 생명문화운동의 터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 터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넓히고, 개인을 넘어서서 이웃과 자연만물, 아직 오지 않은 우리의 다음세대까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 보살피며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스스로 생활을 계획하고 가꾸며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곳을 인간다운 지역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이러한 바램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부족과 현실적인 조직운영의 차이로 인해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내부적으로 잦은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실무자와 이사진 간의 심각한 갈등구조가 형성돼 조직운영은 파행국면을 맞이했다. 이러한 주된 이유는 조직운영체계가 아직 공고하게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확장되고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시도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사업과 정책별로 조직운영자들 간의 불분명한 역할과 이해의 차이가 발생했고, 이는 서로의 역량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당시 조직의 살림꾼들은 청주에서 내려온 사무국장을 제외하고는 다수가 한살림운동과 농업·농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한살림대전의 창립은 농민운동과 환경운동 등의 토대 위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전문인력 수급은 어려웠다. 즉 사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고용이 진행된 것이었고, 결국 현실적으로 사무국장이 조직운영의 전반을 기획·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한살림운동에 공감하고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조합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불만은 축적됐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사무국과 조합원 간의 내재된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 ICA, 1995.9)’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에 의한 참여와 권리가 보다 강화되는 구조에서 기존의 사무국 중심의 조직운영은 불신강화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무국에 대한 잠재된 불만은 이미 2003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한살림의 산란계 사양기준에 부족한 토종란이 한살림대전에서 공급·판매 된 것을 이유로, 이사진은 사무국장을 공급담당자로 인사이동 시켰고 이 사건은 사무국, 생산자, 조합원들을 크게 동요시켰다. 왜냐하면 비록 명분 있는 인사단행이었지만 이는 사무국과 이사진과의 권력싸움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으며, 조합원들은 이사진의 결정에 대한 동의여부로 분열됐다. 이러한 배경 안에서 진행된 2004년 2월 생협전환과 2대 이사장 선출

은 조직의 균열과 갈등을 증폭시켰고, 마침내 12월, 부여 김장배추 공급사건을 계기로 폭발하게 됐다.⁵⁸⁾

조직운영은 파국의 상황에 놓였다. 조합원들은 실망과 분노를 표현했으며 12월 이사전원이 사퇴했다. 그리고 한살림대전정상위원회가 설치되고, 조직운영은 한살림대전 감사회와 사단법인 한살림에 위임(2014년 12월6일에서 2015년 2월 22일까지)되기에 이른다.⁵⁹⁾ 사건 조사를 담당한 정상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태의 주요원인으로 이사, 실무자, 활동가, 조합원 등 조직 구성원 모두 한살림운동과 조직운영 원리와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파악했다. 즉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개인적 해석과 판단으로 조직운영이나 실무집행을 추진한 결과, 오해와 갈등이 초래됐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조직내부의 역할과 업무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구축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정상화위원회의 평가를 수용하여 이사장과 실무책임자와의 관계, 총무팀, 공급사업팀, 매장사업팀과의 역할분담 그리고 조합원활동가 중심의 일반조합원과의 관계가 재설정됐다. 즉 이러한 조직내부의 갈등사건은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게 하고, 조직을 보다 전문화시키는 결과로 작용했다.

(3) 안정화단계: 2005~2012

2005년, 인적쇄신을 통해 조직은 새로운 변화를 시작했다. 새로운 임원진과 실무자가 구성됐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안정화, 특히 사무국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됐다. 사무국을 팀제로 개편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회의 보고 체계, 관련 규정 정비 및 신설 그리고 인사관리를 위한 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조직 내부의 지난 갈등의 여파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조직의 불안정 요소로 작용했다. 따라

58) 부여 김장배추공급 문제는, 부여 생산지에서 수확한 배추를 김장철에 유기농산물로 판매·공급했는데 이후 이 농산물이 유기농이증을 받지 못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배추를 생산한 농부에 진술에 따르면, 배추를 경작한 토지는 유기농이증을 받은 곳이었지만 그 전에 생산한 농산물로 등록되어, 배추로 생산물품목변경을 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였다고 한다. 하지만 한살림대전 조직내부의 잠재된 갈등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사건의 수습보다는,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실무자들의 업무과실을 부각했고 결국 갈등은 확대됐다.

59) 정상화위원회에는 한살림대전 감사회와 사단법인 한살림(전국한살림모임) 그리고 한살림대전과 이해관계가 없는 한살림서울, 고양, 강릉 등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서 조직통합을 위한 문화행사, 단오잔치(6월 보은백록공동체)와 가을걷이 한마당(11월 태평동 버드네 초등학교)을 추진했다. 이 행사는 전통문화의 체험 속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교류하는 축제로 이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 생산자, 조합원들이 함께하여 협동하는 문화를 형성했다.

이후 2006년부터 사무국이 전문화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조직은 안정화됐다. 사업은 양적으로 급속하게 팽창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조직 규모에 맞는 장기비전과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런 배경에서 2006년 농업안정기금이 조성됐다. 농업안정기금은 매년 잉여금의 10%를 적립하여 생산자 및 한살림 생산자 모임에 대한 생산자금, 친환경 유기농업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⁶⁰⁾ 즉 생산자 조합원이 친환경유기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조직사업이 펼쳐진 것이다. 이는 곧 한살림대전의 중장기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2007년 조직규모는 더 확대됐다. 회원수 7,030명, 매출액 약49억, 매장 4곳, 살림꾼 총26명에 달했다. 즉 사업의 팽창과 더불어 조합원 참여에 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적극적으로 표현되지 못하는 조합원들의 의사 수렴 방안이 모색됐고 이에 ‘조합원 활동실’이 구성됐다. 이는 조직활동가를 양성하여 마을모임 등 조합원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합원활동가는 조합원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즉 조합원들이 한살림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조합원노동의 기초가 마련됐다. 2009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장은 다양화되고 경쟁국면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멜라민, 광우병 등 식품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한살림의 매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조직의 성장은 보다 체계적인 비전과 중장기계획수립을 필요하게 했다. 이에 2009년 처음으로 ‘한살림대전 3개년(2010~2012) 중기비전’이 수립됐다. 중기비전의 핵심내용은 내부동력원을 육성해서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즉 지역생산자와 연대하여 지역물류토대를 구축하고, 조합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일

60) 농업안정기금은 한살림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지역사회단체 등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 2008년 처음 사용된 내용을 살펴보면, 총 적립액 23,839,551원 중 4,713,600원으로 아산당진 쌀과 김장용 배추를 구입하고, 이를 콜텍 ASA노동조합 조합원 백미30포와 김치5개, 가정위탁 지원센터 백미30포와 김치5개, 성바오로의 집 백미30포와 김치5개, 알벗공동체 백미40포와 김치5개를 지원했다.

꾼들의 업무체계 수립, 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 양성이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세부 전략으로 충남서남부권 공급확대, 지역물류체계 구축, 조합원의 일터인 지역 워커즈 신설 등이 제시됐다. 즉 한살림대전은 치열해지는 친환경유통산업의 경쟁 흐름에서 조직 안정화를 확고히 하기 위해 생산자, 소비자, 살림꾼의 연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전략화했다.

2011년 한살림에는 연합조직인 ‘한살림연합’이 창립됐다. 이는 지역한살림생협(19곳), 생산자조직(한살림 전국생산자연합회 1곳, 시·군생산자연합회 10곳), 지원조직(사단법인 한살림 1곳)이 함께 통합된 것으로 한살림의 모든 사업과 활동을 아우르는 전체조직이 설립된 것이다. 즉 조합원과 지역생협, 지역생협과 지역생산조직 간 수평적으로 연대하는 조직구조가 구축됐다. 한살림연합의 창립은 한살림 활동의 도약을 의미했다. 왜냐하면 연합조직이 출범함으로써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된 생산조직 및 지역생협 간의 협업이 통합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즉 각 지역생협 간의 연대구조가 공고해졌다.

이러한 외부 흐름 안에서 한살림대전은 2011년 ‘지역살림기금’을 조성함으로써 활동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했다. 총잉여금의 10%를 기금화한 지역살림기금은 대전 지역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② 생활협동조합간의 연대 및 사회적경제 영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③ 풀뿌리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④ 지역복지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한다. 즉 지역사회 기여와 연대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4) 전환단계: 2013~현재

국내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간의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던 한살림의 매출액이 둔화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에 조직은 사회운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과 활동의 외연을 확장하며 대응하고 있다. 지역순환농업체계 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브랜드 ‘가까이앓’을 출시하고 지역물류센터와 생명문화센터를 건립했다. 가까이앓의 물품들은 대전 인근 농촌지역에서 생산한 것으로 지역물품이용이라는 가치와 신선도

라는 물품질의 측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또한 가까이웃 지역 물류센터와 생명문화센터가 조합원들의 자발적 출자증좌운동인 ‘벽돌한장운동’의 성과로 완공되면서 협동의 힘을 체감하게 했다. 그리고 국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축회(한살림축산생산자영농조합)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벧짚사료사주기운동’을 시행했고 조합원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냈다.⁶¹⁾ 동시에 기존의 부여, 공주매장을 중심으로 2015년 충남남부지부를 신설하여 충남권으로 물품공급을 확장하는 한편 지역의 생산자들과의 교류를 촉진했다. 즉 사업을 통해서 생산자, 소비자, 살림꾼들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적 성과와 더불어 새롭게 추진된 조합원 활동은 크게 ‘워커즈(workers) 학교’, ‘다른경제 학습동아리’ 등과 같은 대안모색 공부모임과 ‘탈핵운동’, ‘GMO반대운동’ 등 과 같은 생태운동이다. 워커즈는 기존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노동자 스스로의 협력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로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고용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됐고, 이에 한살림대전에서는 2015년 조합원들의 워커즈, ‘협동조합 엄마꿈’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다른경제 학습동아리는 사회적경제 사상을 공부하는 모임으로 정책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경제로서의 한살림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살림대전은 현재 대전지역 사회적경제 단체 12곳과 협약을 맺어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한살림대전에서 현재 결합하고 있는 사회운동은 탈핵운동과 GMO반대운동으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탈핵운동은 대전핵연료시설 증설 반대 및 지역대책위에 참여하고, 반대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생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속하고 있다. 또한 GMO반대운동은 GMO완전표시제 입법화를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동시에 토종종자 보존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즉 한살림대전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 “건강한 협동조합, 한살림대전”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61) ‘한축회 벧짚사료 사주기 운동’은 사료수급시기에 갖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포장벧짚 1롤(7만원)을 대신 구입해주고 이후 생산한 한우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2) 자원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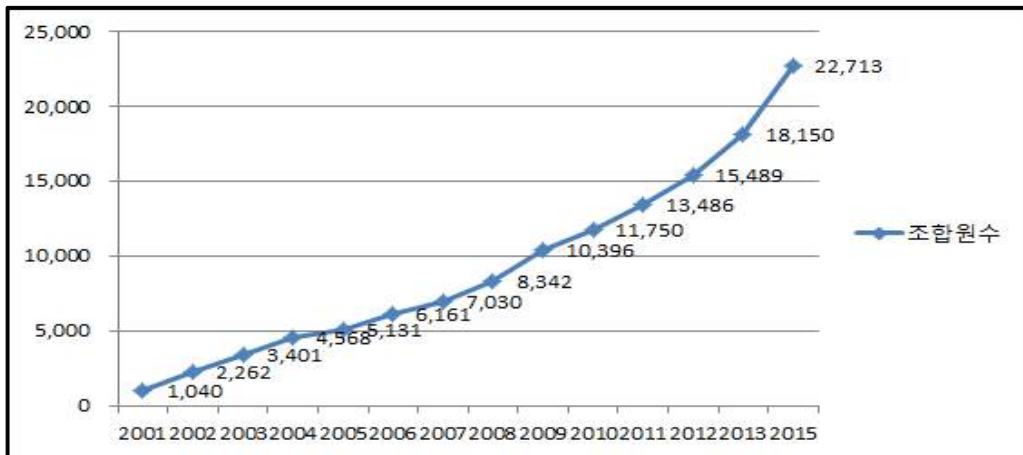
(1) 인적자원

한살림대전의 15년의 성장은 조합원, 생산자, 살림꾼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조합원은 조직의 핵심동력으로 물품소비를 통해 조직의 양적성장에 기여하고 조합원활동으로 조직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조합원의 수는 2001년 창립 당시 1,040명에서 2015년 현재 22,713명으로 약22배 증가했다(<그림3.10>참조). 즉 한살림의 조합원은 창립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초기 조직 내부의 갈등 상황에서도 조합원의 가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러한 이유는 2000년대 이후 계속된 식품안전사고와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증가로 건강한 먹거리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중산층의 증가는 한살림의 사업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웰빙(well-being)을 삶의 가치로 추구하는 소비력 있는 중산층의 증가는 유기농산물에 대한 선호와 친환경적 삶의 방식에 대한 선호로 이어졌다. 관계자의 구술에 따르면, 당시의 사무국 인원으로는 소비자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회원가입이 많았으며 따라서 물품판매량도 급증했다고 한다.

“당시 홍보도 거의 없을 때였는데, 아는 사람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한살림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물품 구입해서 먹는 사람들 보고, 이야기 들어보고 가입한 거예요. 그렇게 가입하신 분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막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분들이었는데, 그 애들이 아토피로 고생 했어요...내 아이가 이렇게 아팠는데, 이렇게 해서 나왔어 뭐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고...부모들은 아이가 아토피로 아픈데 왜 아픈지 몰라서 힘들어했고 그러다 먹을거리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안전한 유기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 이런 거죠.”⁶²⁾

62) 이정섭의 인터뷰(2015년 11월 13일) 중에서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까지 지속됐다. <2013 조합원 생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 가입경로로 조직의 홍보효과보다는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아는 사람의 소개’로 가입한 경우가 6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3.21>참조).⁶³⁾ 하지만 이는 단순히 지인의 소개나 권유에 따른 것이 아니며 ‘안전한 먹을거리 구입을 위해(98.1%)’와 ‘생태·환경을 살리는 환경운동에 기여하기 위해(38.9%)’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공생과 협동에 참여하기 위해(29.1%)’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조합원에 가입했다(<표3.22>참조). 즉 조합원들은 기존의 화학농업과 식품산업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이에 생명사상을 바탕으로 한 한살림의 가치와 도농교류 생산방식을 신뢰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살림물품을 소비하는 조합원의 경우에, ‘한살림의 물품 모두를 다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2.5%에 달하며, 특정 항목 중에서는 ‘농산물(46.8%)’이 가장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표3.23>참조).



[그림 3. 10] 한살림대전 조합원 수

63) ‘한살림대전 조합원생활조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기간은 2013년 12월 16일~12월 18일까지, 조사방법은 매장, 홈페이지, 공급상자를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했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1,284부이다.

<표 3. 21> 조합원 가입경로

한살림 조합원으로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습니까?	빈도	%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아는 사람의 소개	846	66.4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133	10.4
한살림의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매장 등)	113	8.9
한살림의 온라인 홍보활동을 통해(홈피, 페이스북 등)	46	3.6
기타	136	10.7
계	1,274	100.0

출처: 한살림대전 내부자료, (사)모심과살림연구소

<표 3. 22> 조합원 가입 목적

한살림에 가입한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중복응답)	빈도	%
안전한 먹을거리 구입을 위해	1254	98.1
도시와 농촌의 공생과 협동에 참여하기 위해	372	29.1
생태·환경을 살리는 환경운동에 기여하기 위해	497	38.9
식품을 배달해주는 편리함 때문에	47	3.7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245	19.2
기타	16	1.3
계	2431	190.2

출처: 한살림대전 내부자료, (사)모심과살림연구소

<표 3. 23> 한살림 신뢰 물품

한살림 물품중 가장 신뢰가 가는 물품은 무엇입니까?	빈도	%
농산물	541	46.8
가공식품	45	3.9
생활용품	4	.3
수산물	18	1.6
축산물	56	4.8
모두 다 믿을 수 있다	491	42.5
계	1,155	100.0

출처: 한살림대전 내부자료, (사)모심과살림연구소

또한 조직발전의 한 축인 살림꾼의 규모 역시 조직의 성장과 함께 확대됐는데, 창립 직후 2002년 총11명에서 2015년 현재 73명에 이른다. 살림꾼은 본부에서 일하는 실무자와 매장에서 일하는 활동가로 나뉘며 따라서 매장이 증가함에 따라 매장 활동가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그림3.11〉참조). 〈2015 살림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살림꾼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는 ‘주변의 권유’가 34.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한살림 활동가에 평소 관심이 있었다(28.1%),’, ‘조합원 활동으로 처음 시작하게 됐다(15.6%)’ 순이다(〈표3.24〉 참조).⁶⁴⁾ 즉 살림꾼의 78.1%는 사회운동으로 한살림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한살림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참하기 위해 살림꾼에 지원하게 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응답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변의 권유’ 역시 단순히 지인의 권유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한살림활동과 연계된 학업, 도농교류, 사회운동 등을 통해 추천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터뷰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는 농대에 있었어요. 식물자원학과, 옛날 농학과…사실 전 원래 부모님도 생산자세요. 20년 전에 귀농하셔서 전북 진안에서 한살림생산자로 계속 계시고, 저도 시골에서 생활하다가 고등학교를 홍성 풀무학교에 다녔고요. 사실 거기에서 교육을 통해서 한살림이 말하는 지향이나 철학 이런 것을 접하게 됐고, 대학에 갈 것인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대학사회 경험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대학에 진학했어요. 그런데 대학공부가 저에게 큰 도움이 안됐고…어쨌든 졸업하기 전에 군대에서 고민하다가 한살림에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⁶⁵⁾

“3개월 제약회사 다니다가 오마이뉴스 기자도하고, 후배가 다른 거 해보겠냐고 해서 지방의제21에서도 일했어요. 그때 하던 일이 금강 친환경 하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간사를 1년 정도 했어요. 그 프로젝트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만뒀어요…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느날 우연찮게 어떤 분하고 교육을 같이 갔는데 앞으로 어떤 일 하고 싶냐고 그래서 공동체 이런 일 하면 재밌겠다 그랬더니 한살림은 어떻겠냐고 제안해줘서 거기 이력서 내고 들어 간 게 인연이에요.”⁶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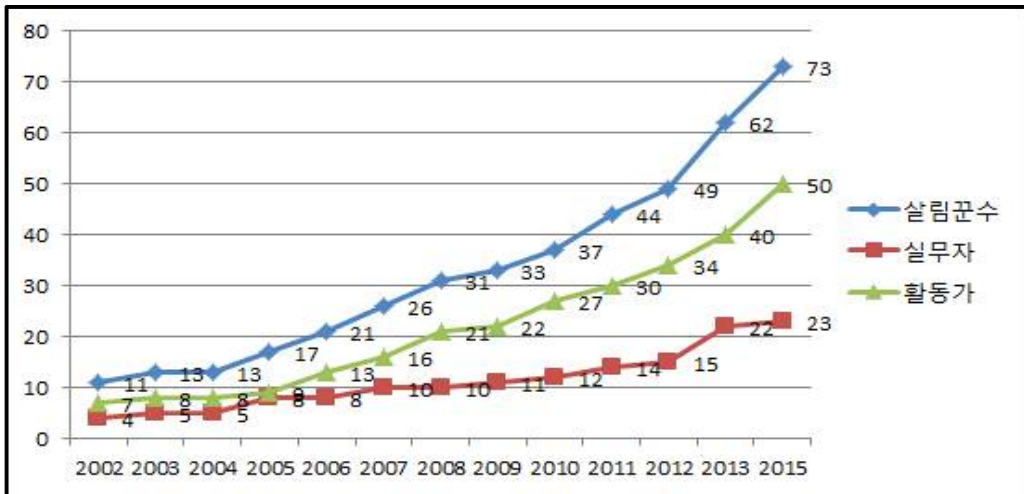
64) ‘한살림대전 살림꾼 설문조사(2015)’는 한살림대전의 살림꾼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조사됨. 총65명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됐다.

65) 권성현의 인터뷰(2016.9.9.)중에서

66) 정철주의 인터뷰(2016.9.6.)중에서

즉 한살림의 살림꾼들은 고용의 문제보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한살림운동에 동참하는 경향이 강하다. 살림꾼들의 근무년수는 ‘3~5년’이 3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1~2년(29.2%)’, ‘1년 미만(16.9%)’, ‘6~10년(13.8%)’, ‘11년 이상(7.7%)’ 순이다(표3.25)참조). 즉 살림꾼의 46.1%는 2년 미만이며, 3~5년은 32.3%, 6년 이상은 21.5%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년 미만의 살림꾼들은 주로 공급, 조직, 매장 활동가들이고, 상대적으로 본부의 실무자들의 근속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15년의 역사에서 6년 이상의 장기근무자들이 약20%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신규채용의 증가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직률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점증적으로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향후 조직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하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대로 살림꾼들은 대체로 사회운동 참여자로서 한살림에 입사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실현이 조직활동에서 구현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조직이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매장과 물품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조직차원에서의 조합원 서비스는 증가하고 있지만, 반면에 살림꾼들이 운동가로서 체감할 수 있는 활동과 역할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 과다 및 미흡한 복리후생 등 실질적인 노동조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 3. 11] 살림꾼 수

주: 1) 살림꾼수=실무자+ 활동가
 2) 시간제노동자의 수를 포함함

<표 3. 24> 살림꾼 참여 계기

한살림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빈도	유효 %
주변의 권유	22	34.4
일자리 공고	12	18.8
한살림 활동가에 평소 관심이 있었다	18	28.1
조합원 활동으로 처음 시작하게 됐다	10	15.6
기타	2	3.1
합계	64	100.0

출처: 한살림대전 내부자료

<표 3. 25> 살림꾼 근속년수

한살림에서의 근속년수	빈도	유효 %
1년 미만	11	16.9
1-2년	19	29.2
3-5년	21	32.3
6-10년	9	13.8
11년 이상	5	7.7
합계	65	100.0

출처: 한살림대전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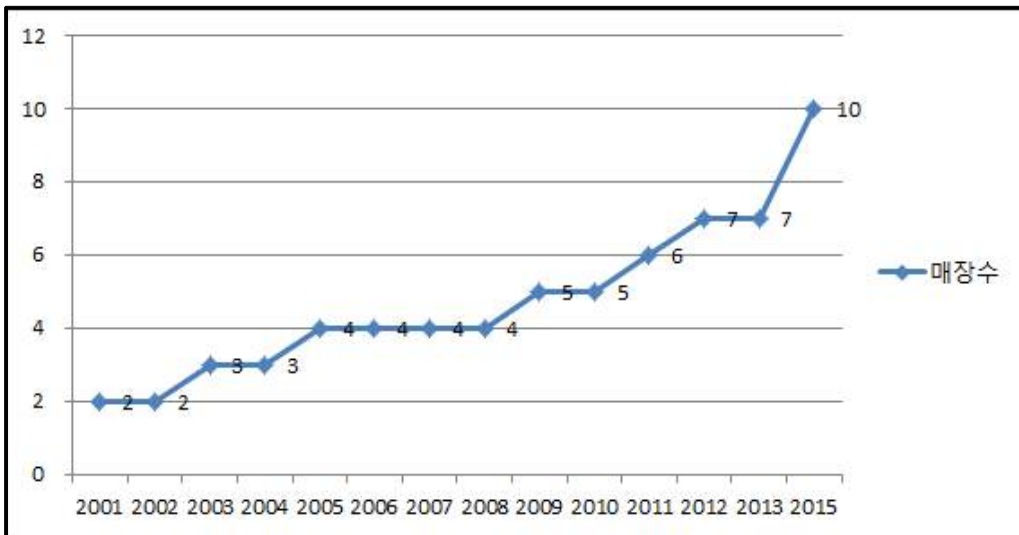
(2) 물적자원

한살림대전은 창립시 직영매장 2곳에서 2015년 10곳으로 평균 2년마다 1곳의 매장을 증축하며 성장해왔다. 현재 대전에 8곳(가오, 관저, 관평, 노은, 신성, 월평, 탄방, 태평)의 매장이 있으며, 충남에는 2곳(공부, 부여)의 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그림3.12>참조). 총 매출액은 2002년 약16억에서 2015년 약150억으로 10배의 성장, 출자금은 2002년 약1억에서 2015년 약26억으로 26배를 축적했다(<그림3.13>참조). 이처럼 한살림대전이 급성장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민의식의 성장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문화의 형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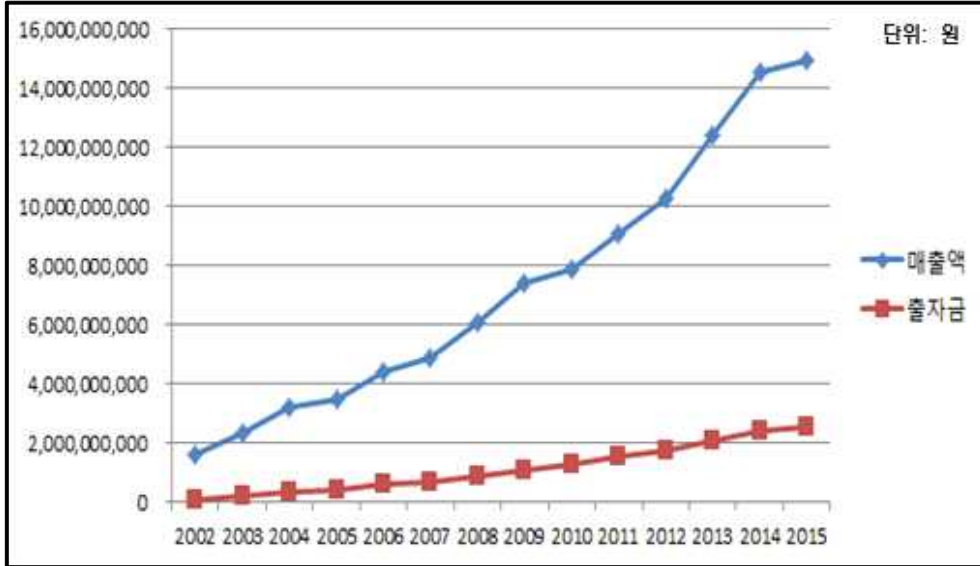
87년 민주화 이후 90년대에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주권의식과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생협도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1999년 소비자생활협동조

합 법의 제정으로 법적기반이 마련되고, 2000년대 이후 수입농산물의 증가로 식품관련 사고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협이 꾸준히 성장했다(윤형근, 2006; 김철규, 2012:12 재인용). 실제로 광부병, 멜라민 파동, 신종플루, 메르스 등 다양한 식품사고와 신종질환이 발생할 때마다 생협은 급속하게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이에 한살림대전의 조합원의 수와 매출량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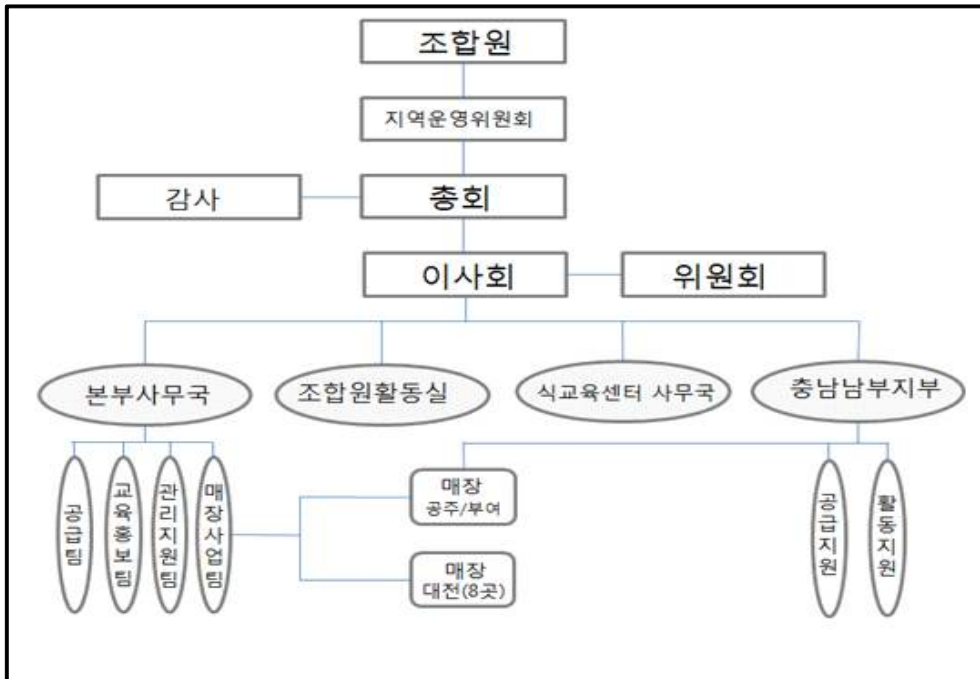
한살림대전은 현재 마을모임 24개, 소모임 33개와 7개의 지역위원회, 대의원 115명, 13명의 이사, 4개의 위원회(가공품위원회, 농산물위원회, 교육위원회, 협동경제위원회)로 구성되며, 큰 틀 에서 본부, 조합원활동실, 식교육센터 사무국, 충남남부 지부로 조직된다(<그림3.14>참조). 즉, 한살림대전은 대전 사회적경제의 핵심조직으로 조직규모와 조직력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사회위기가 가중되는 현실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의 한살림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그림 3. 12] 매장 수



[그림 3. 13] 매출액과 출자금



[그림 3. 14] 조직현황

3. 마당극패 우금치

1) 창립과정

대전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마당극패 ‘우금치’는 1990년 8월에 창립한 마당극 전문예술단체이다.⁶⁷⁾ 우금치의 전신은 1988년에 창립하여 90년대 초까지 활동했던 지역의 문화운동단체, 충남문화운동협의회의 공연분과 ‘얼카텔이’이다. 충남문화운동협의회(이후 충남문화운동연합, 이하 충문연)는 지역 대학의 탈춤반, 노래패 등에서 활동하던 구성원들이 87년 6월 항쟁이후 본격적으로 문화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결합한 조직으로 산하에는 다양한 분과가 있었다. 그 중에 얼카텔이는 현장에서 민중문화운동을 지원하는 공연분과였다.⁶⁸⁾ 하지만 1989년 충문연 내부의 민족운동과 노동운동 진영 간에 이념갈등이 갈수록 격화되자 이러한 소모적인 갈등에 회의감을 느낀 얼카텔이의 일부 단원들은 충문연에서의 독립을 선언한다.⁶⁹⁾ 그리고 전문예술단체인 놀이패 우금치를 결성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놀이패 우금치의 창립정신은 민중(농민)을 위한 민족문화예술 활동이다. 단체명인 우금치(牛禁峙)는 공주시에 있는 고개이름으로, 198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과 친일관군이 맞붙은 최대 격전지였다. 즉 놀이패 우금치라는 명칭은 새로운 세상을 열망했던 동학농민정신을 기리며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농촌지역인 충청도의 지역 색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금치를 창단한 구성원들은 주로 80년대 초 학번으로 대학의 탈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처음으로

67) 이 글은 우금치의 단원인 성장순(2013)의 석사학위논문 ‘마당극패 우금치 연구’를 바탕으로 2015년 다음(daum)의 ‘스토리 펀딩:마당극패 우금치 별별마당’을 위해 저자가 수집한 자료와 취재 인터뷰를 기초해서 작성한 것이다.

68) ‘얼카텔이’이라는 이름의 문화운동 조직은 1985년부터 지역에서 존재했다. 이는 지역 대학에서 활동하던 탈춤동아리와 연극동아리 구성원들이 만든 조직으로 ‘민중에게 문화를’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마당극, 풍물, 탈춤 등의 활동을 펼쳤다. 여기에는 현재 마당극패 우금치의 대표인 류기형이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이 모태가 되어 충남문화운동협의회가 조직된다. 즉 민중문화운동을 펼친 얼카텔이의 정신이 우금치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금치의 창립멤버 다수는 1985년에 창단된 얼카텔이가 아닌 1988년 창립한 충문연의 산하분과 ‘얼카텔이’ 출신이다. 따라서 우금치의 직접적 전신은 충문연의 산하분과 얼카텔이라 하는게 적절하다.

69) 조성철, 류기형, 최정훈, 이주행, 김정수, 우문숙, 김인경은 충문연 얼카텔이에서 독립하여 놀이패 우금치를 결성했다.

전통예술을 접했다. 이들은 탈춤, 창작판소리, 풍물, 마당극 등을 경험하면서 전통 예술의 맛과 멋을 체화했으며 동시에 전통예술이 방송에서 보던 것과 같이 획일적인 모습이 아닌 민중의 정신과 삶을 표현 할 수 있는 역동적인 예술임을 자각했다. 또한 우리의 교육과 삶이 이러한 전통예술과 분리된 채로 진행된 것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조건을 인식했다.⁷⁰⁾ 따라서 이들은 이와 같은 전통예술을 계승하여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충문연에 적극적으로 결합한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갔는데 대학생활이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둘까 고민하다가 탈춤반 동아리가 재밌어 보이길래 들어갔죠. 탈춤은 그때 처음 취 본거죠. 고등학교때까지 우리 것에 대해 접한게 전혀 없잖아요. 생경하지만 굉장히 애착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좋았고 어떤 의무감도 들었고 화도 났던 것 같아요.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스무 살이 되도록 왜 전혀 접할 수 없었나 하는, 그러면서 탈춤과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거치고 분단을 거치면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탈춤은 춤짓이 굉장히 매력적이예요. 부채춤, 고전무용, 텔레비전으로 봤던 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내 신명으로 힘껏 할 수 있는 거기에 탈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풍자와 해학으로 시대를 반영한 부분이 매력 있었죠…(사회문화운동)아프고 소외된 사람들 편에서 사회가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하지 않으니깐, 작지만 내가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⁷¹⁾

하지만 충문연에서의 활동은 집회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문화선전대 역할이 주된 활동이었으며 여기에 풍물강습, 공동체놀이 등을 하며 전통예술을 알리는 사업을 병행했다. 이는 전문적인 문화운동을 하고자 했던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또한 충문연 내부에서 계속되는 이념갈등은 현장중심의 실천적인 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에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 하는 전문예술단체, 놀이패 우금치를 설립하게 된다.⁷²⁾

70) 이들이 접한 당시의 탈춤, 마당극 등은 단순한 전통예술이 아니었다. 80년대의 전통예술은 사회운동으로서 문화운동의 흐름 안에 있었다. 즉 독재정권 하 사회적 억압으로부터의 민중해방적 표현양식이자 동시에 식민지·분단의 역사적 한계를 민족예술로 극복하려는 사회운동이었으며, 이런 흐름은 70년대에 부흥하여 80년대 전국적으로 대학가에서 조직적으로 활성화됐다. 따라서 우금치 창단멤버들의 전통예술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흐름 안에서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71) 이주행의 인터뷰(2016. 2) 중에서

2) 전개과정

(1) 형성단계: 1990년~1995년

창립 직후부터 우금치는 쇠락해가는 농촌문제의 본질을 마당극으로 만든 <호미풀이(1990)>를 제작하여 1년 여 동안 대학가와 전국을 다니며 공연했다. 당시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이 작품에 관객의 반응은 뜨거웠고 마당극의 역동적인 현장성에 감명을 받은 관객이 신입단원으로 입단하기도 했다. 이후 쌀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촌농민여성 문제를 다룬 <아줌마만세(1991)>가 제작되고 이 두 작품은 전국농민총연맹의 초청으로 20~30회 공연했다. 이후 아줌마만세는 제5회 민족극한마당 최우수 작품상(1992), 제3회 민족예술상(1993), 전국농민회의 감사패(1995년)을 수상하며 우금치는 주목받는 예술단체로 급부상한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등장과는 다르게, 우금치 내부의 조직체계와 단원의 예술적 기량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었다. 왜냐하면 단원들은 대학의 동아리 탈춤반 출신으로 전문적인 예술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문화선전대 수준에서 벗어나서 전문성 있는 예술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류기형 대표의 인식과 단원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과 단원의 예술역량 향상을 핵심과제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조직운영 체계는 큰 틀에서 동인제(同人制) 시스템을 채택했다. 동인제시스템이란 단원 모두가 극단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공동출자, 공동운영 방식의 조직구조이다. 이는 1960년대 한국 연극운동의 산물로 많은 소극단의 운영방식이기도 했다.⁷³⁾ 이러한 동인제 방식에 더하여 우금치는 여느 직장생활과 같이 출퇴근제,

72) 단체의 명칭은 1990년에 ‘놀이패 우금치’로 창단하여 1996년에는 ‘민족예술단 놀이패 우금치’, 2000년에는 ‘민족예술단 우금치’, 2010년 ‘마당극패 우금치’로 부분 변경했다. 이러한 이유는 극단의 성격 변화의 흐름에 맞춘 것으로 1990년 창립 ‘놀이패’때는 공연활동만 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놀이, 풍물강습, 전통민속혼례도 주된 사업의 하나였다. 이는 열카맹이 시절부터 해온 사업이었다. 하지만 1996년 창작공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위의 사업은 축소되고 마당극 공연이 주요활동이 된다. 따라서 민족예술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전문예술단체임을 부각했다. 이후 민족예술단이라는 표현이 시립예술단과 같은 종합예술단체나 대중상업성이 짙은 연예인예술단, 민속예술단으로 인식되는 혼란이 빚어지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극단의 주요사업을 마당극으로 국한시키기 위해서 마당극패라는 명칭을 사용한다(성장순, 2013:8).

73) 동인제는 1960년대 한국 연극 극단에 널리 수용됐다. 1960년대 ‘실험극장’(1960. 10)을 선두로 하여 ‘민중극장’(1963. 1), ‘산하’(1963. 9), ‘가교’(1965. 3), ‘광장’(1966. 3), ‘자유극장’(1966. 4), ‘여인극장’(1966. 10) 등 동인제 극단이 새로 결성됐고 활발한 활동으로 극계를 이끌어갔다. 동인제 극단들은 1950년대와는 달리 직업극단으로서의 체제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 동인제 극

월급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방식은 규모가 큰 국공립 예술단체를 제외하고는 보기도 드문 것으로, 소규모 예술단체의 경우에는 공연시기와 수입이 부정기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우금치는 부족한 예술기량을 습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와 소액이라 할지라도 정기적인 수입이 단원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단체의 지속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을 수립한다.

단원의 일상은 오전 9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출근 후에는 조직운영 전반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마당극을 창작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연기, 풍물, 춤 등을 교육받았다. 퇴근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강습을 받거나 부족한 기량을 훈련하며 시간을 보냈다.⁷⁴⁾ 초기에 우금치의 주요사업은 전통예술을 알릴 수 있는 공동체놀이, 풍물, 마당극 등 다양한 활동이었다. 하지만 수입은 주로 마당극 공연 수익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당시의 1회 공연료(1991년)는 평균 20~30만원으로 공연 횟수에 비해서는 수익이 적은 편이었다.

함석영, 고우진, 이향주, 성장순(1991년), 이신애, 임창숙(1993년), 이용운, 김황식, 박세환(1994년)이 신입단원으로 입단했다. 이들의 입단은 우금치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조직 규모가 커진 만큼 조직 관리를 위한 규율도 엄격하게 집행됐다. 규율은 다소 엄격하게 처리됐다. 예를 들면, 출근 시간에 2~3분만 늦어도 지각처리가 됐고, 지각 3회시 급여에서 5,000원이 감봉됐다. 잦은 지각단원에게는 공개적으로 반성할 시간이 주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지각관리자와 단원 사이에서는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단원은 월 75,000원(1992년) 급여 중 절반이 감봉되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자유로운 예술적 감수성을 지닌 단원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다소 피로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원들은 자신들이 정한 규율에 순응하면서 협력적으로 조직의 체계를 다져갔다.

단의 구성원 중 상당수가 1950년대와는 달리 연극을 직업으로 하여 극단 활동에 몰두했기 때문에 연극계에 새로운 토대를 형성하는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었다. 새로운 동인계 극단의 출범과 연극운동은 급격한 연극계의 세대교체를 뜻하는 것이었다. 연극계에 대한 새로운 이념 또는 접근 방법의 정립을 재촉했고, 세계 연극 속의 한국 연극이라는 인식을 촉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74) 이후 오전10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으로 변경됐다.

조직을 크게 창작국, 훈련국, 사무국으로 3분화하여 전 단원이 부서별로 배치되어 업무를 담당했다. 회의는 조회, 주회의, 연간 상·하반기 총회를 개최하고 상황에 따라서 임시회의가 진행됐다. 총회에서는 주로 일과과정 평가, 재정보고, 공연 및 공연료, 급여 및 복지 등 조직운영에 필수적인 내용들이 논의되고 결정됐다. 낮은 급여와 열악한 환경 안에서도 단원들은 우금치를 전문화시키기 위해 협력했다. 이러한 이유는 우금치가 단순히 예술가들의 모임이 아닌,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치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민중을 위한 전통예술로 당면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하여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들이 우금치를 창립한 이유였다. 따라서 자신들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역량이 축적되어야 했다. 또한 단원들에게 자신들의 예술적 기량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조직을 위해서, 나아가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누구도 나태해질 수 없었다.

이러한 열정의 결과, 공연의 장을 확장하며 1993년부터 대학 대동제와 동아리연합회 행사에 수차례 초청되어 공연을 했다. 1995년 전국 22개 대학에서 총22회 공연, 총 2,677만원의 수익이 달성됐다. 지역별로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대전·충청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기·인천(5곳), 경상도(4곳), 전라(2곳), 강원(1곳)이었다(〈표3.26〉 참조). 호미풀이, 아줌마 만세에 이어서 작품제작도 왕성하게 진행되어 〈인물(1992년)〉, 〈우리동네 갑오년(1994)〉, 〈땅풀이(1995)〉 등이 창작됐다. 창립직후부터 우금치는 내부적으로 조직체계의 틀을 구축하고 예술전문성을 축적해가면서 외부적으로는 농민회, 대학의 총학생회 등 사회운동 진영과 연계하여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장해가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의 부족과 창작공간의 문제가 주요 과제로 부각됐다. 1995년까지 사용했던 중구 선화동 주택가에 위치한 30평 규모의 지하공간은 장마철에는 침수되었으며 임대료가 인상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무엇보다 공연연습으로 인한 소음으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자 새로운 창작공간의 확보가 시급해졌다.

<표 3. 26> 우금치 대학 공연 현황(1995년)

지역	학교이름(지역명)	일시	공연비(단위: 만원)
경기·인천(5곳)	안양대(안양)	5.16	110
	숙명여대(서울)	5.24	100
	서울신학대(부천)	10.4	150
	강남대(수원)	10.5	150
	성균관대(수원)	10.6	150
대전·충청(10곳)	공주교대(공주)	5.10	95
	건국대(충주)	5.16	102
	교원대(청주)	5.17	95
	목원대(대전)	5.22	100
	순천향대(천안)	5.23	115
	청주교대(청주)	5.30	90
	고려대(조치원)	9.27	150
	충북대(청주)	10.17	150
	충남대(대전)	10.13	110
	공주대(공주)	10.17	150
전라(2곳)	전주대(전주)	6.2	115
	동신대(나주)	9.29	120
경상(4곳)	동의대(부산)	5.25	130
	경산대(경산)	9.21	130
	대구공전(대구)	9.28	100
	금오공대(구미)	10.20	150
강원(1곳)	강릉대(강릉)	5.18	115
합계	22개 대학	22회 공연	2,677

자료: 성장순(2013):13

(2) 정착단계: 1996년~2005년

극단에게 공간은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즉 창작을 위한 공간은 예술단체의 존망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 특히 마당극과 같은 종합예술(풍물, 노래, 춤 등) 장르의 공연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심에서의 높은 임대료와 연습소음 발생으로 인한 민원문제 때문에 공간 마련이 쉽지 않았고

결국 우금치는 도심외곽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곽부근에서도 적당한 규모의 임대공간을 찾지 못하자 마침내 단원들은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필요한 공간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우금치의 재정 상황은 좋은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안정적인 창작공간의 필요성을 강하게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사업을 추진했다. 선하동 연습공간에서 찾은 전세금과 은행 대출금 그리고 12명의 단원이 출자한 금액(1인 100만원)을 합하여 동구 하소동에 위치한 포도밭 500평을 구입했다.

단원들의 평균 연령은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분담한 출자금은 개인에게는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하지만 우금치의 도약을 위해서 이러한 획기적인 시도를 강행했다. 구입한 토지에는 100평의 연습공간, 기숙사, 사무실 등이 조립식 건물로 마련됐다. 건물 공사에는 단원들의 직접적인 노동력이 투여했지만 결국 9천8백만원이라는 큰 빚이 발생했다.⁷⁵⁾ 하지만 이렇게 하여 우금치는 창립 6년 만에 자신들의 자체공간을 확보했다. 이는 우금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공유자산, 즉 공동소유의 자산이 생성됐기 때문이다. 공동운영이라는 형식상의 조직체계가 실질적인 재산권의 공동소유자로서 구체화됐다. 즉 우금치에 대한 단원의 주인 의식과 책임감은 더 강해졌다.

이후 새 공간에서는 자유로운 시간에 악기연습 등을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기숙사가 마련되어 단원들이 거주하며 공연연습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었다. 기숙사에서는 기혼자 단원을 제외한 6명이 공동운영원칙을 정하고 기숙했다.⁷⁶⁾ 이러한 변화에 맞게 조직체계는 변화를 주었다. 새롭게 운영위원회가 구성하고 기획실을 신설했다. 따라서 일상적인 안건은 각 부서의 장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러한 이유는 모든 회의에 단원 전체가 참석하는 것이 주는 피로감과 비효율성 때문이었다. 따라서 단원들은 창작활동과 공연연습에 매진할 수 있는 회의구조를 채택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상 안건회의는 운

75) 이 빚은 8년 후 청산하게 된다.

76) 기숙사의 명칭은 ‘터줏대감’이었다. 기거하는 단원들은 월3만원의 이용료를 지급했다. 기숙사생활 운영원칙으로는 ‘사내 연애 시 퇴소, 부양가족 기거 불가, 우금치의 공식적 업무와 관련한 손님 의 경우는 숙식제공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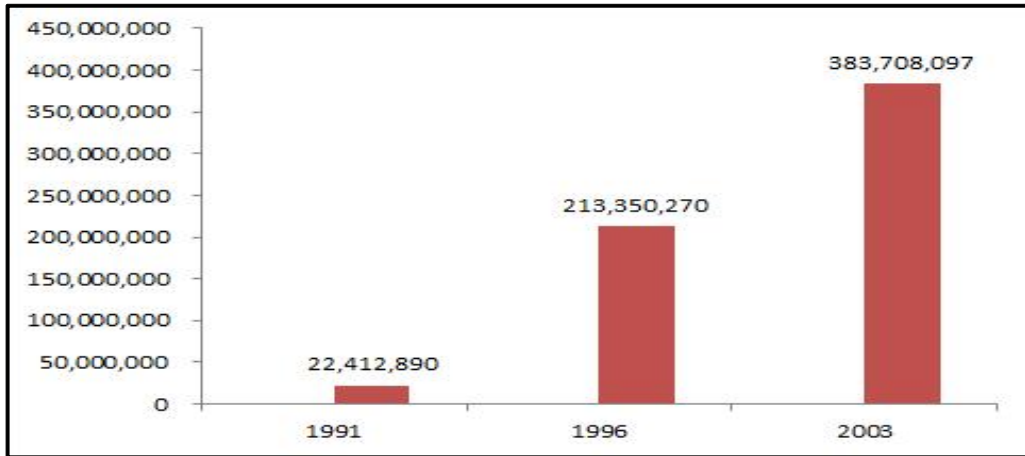
영위원을 중심으로 매주 월요일에 진행했다. 운영위원으로는 대표와 각 부서의 장(사무국장, 훈련국장, 기획실장)이 참여했다. 대표는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장은 주로 재정업무와 자료, 소식지 기록 등을 담당했고, 훈련국장은 단원의 예술교육훈련 등을, 기획실장은 공연 기획 및 홍보 등을 주관했다. 특히 기획실의 업무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는데 이는 증가한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 단원 모두가 부서별로 배치되어 조직의 운영에 참여하며 필요한 행정과 전문성을 습득했다.

이후 우금치는 빠르게 양적·질적으로 성장해갔다. 내부적으로는 안정적인 연습공간의 확보로 단원들의 예술기량이 향상됐고, 외부적으로는 공연의 장의 확대로 수익도 크게 증가하며 단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도 향상됐다. 2000년대 들어서 우금치의 주된 수입은 지역축제 공연과 마당극 제작·연출 의뢰에서 받는 수입료였다. 반면에 대학가에서의 공연은 급속하게 축소됐는데 이는 소비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대중문화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축제의 무대는 학생회가 아닌 전문기획사 주도로, 창작예술이나 학생참여 공연이 아닌 대중 연예인 초청행사가 무대에 올랐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대학축제에서의 마당극 공연은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문민정부 이후의 공연예술 지원사업의 확대, 95년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지역활성화 정책은 정책적으로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즉 야외축제와 행사의 수가 증가하면서 명성이 있는 우금치가 많이 초청됐다. 또한 지역특성을 살린 마당극 제작 의뢰도 증가했다. 하지만 당시의 지역축제는 주로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상업성 높은 축제가 다수였고 현실참여적인 마당극을 제작하던 우금치로서는 이러한 낮은 상황에 쉽게 수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하소동 토지매입으로 인한 부채를 타개할 방안으로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민속을 발굴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작품의뢰를 수용했다. 이렇게하여 처음 만들어진 작품이 1996년 금산인삼 축제에서 공연된 <강처사 설화>다. 이 마당극은 특산물 홍보가 중심이 아닌, 금산을 배경으로 한 효를 주제로 하는 작품이다. 이를 계기로 우금치는 사회의식을 담은 마당극과 지역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마당극 제작을 병행한다.⁷⁷⁾

또한 지역 예술단체와 사회운동 단체와의 연대 작업도 진행했다. 극단 ‘금강’ 과 함께 신채호의 일대기를 다룬 <꿈 하늘> 공연, 환경운동단체인 녹색연합 과 공동기획으로 환경문제를 다룬 <형설지공(1998년)> 제작, 여성단체와의 협력 안에서 여성문제를 마당극으로 만든 <북어가 끓이는 해장국(1999년)>을 제작 공연했다. 이 작품들은 국내외적으로 순회공연을 하면서 시민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우금치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쪽빛황혼(2000년)>도 이 시기에 제작됐다. 이 작품은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한 것으로 2일 2회 공연에 3,500만 명의 관객이 관람하면서 큰 성과를 거둔다. 또한 2005년에는 일곱빛깔 마당극 축제를 국립극장에서 추진하여 7편의 마당극을 공연에서 총 6,549명의 관객이 관람했다. 즉 우금치의 수입은 창립 이후 1991년에 22,412,890원에서 1996년 213,350,270원 그리고 2003년 383,708,097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단원들의 급여도 상승했는데 창립 이후 몇 년 동안은 7,500원~150,000에서 1996년 300,000원 2003년에는 7,000,000원으로 증가했다(<그림3.15> 참조).

(단위: 원)



[그림 3. 15] 우금치의 수입의 변화

성장순(2013):16을 도표화함

이 외에도 지역사업으로 대전에서 일어났던 만세운동을 마당극으로 재현하는 행사를 진행했고, 우금치 공간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민속놀이를 소재로 한 마당극 <산내 공주말 디딜방아 뱅이>를 연출하여 지역 주민 80여명과 함께 제40회한국민 77) 1회 공연비 100~150만원, 4일 9회 공연을 했다.

속예술축제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후 이 공연은 산내동의 주민축제의 주축이 됐다. 또 2003년부터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시작했다. 이는 주로 노인요양원,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에서 진행됐다. 이러한 활동은 단지 봉사활동만이 아닌 조직력의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했다. 즉 우금치의 창립정신을 살리며 대내외적으로 문화공공성을 추구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했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의 우금치는 내부역량의 토대인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집중적인 훈련과 창작 활동으로 전국적으로 역량 있는 마당극단로 자리매김한다. 열악한 조건에서 시작하여 2005년 15년 만에 명실상부한 마당극단으로 명성을 굳히게 된 것은, 단원들의 강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직운영 방식에 있었다. 단원 모두가 조직운영에 책임감을 갖는 조직체계와 민주적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공유자산은 우금치의 바탕이자 동력이 된다. 또한 활동이 조직의 이익에만 매몰되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추진되었다는 점도 우금치가 명성을 얻으면서 외연을 확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우금치의 단원들은 서로에 대한 공고한 신뢰와 전문예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쌓아갔다.

(3) 안정화단계: 2006년~2010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운영으로 우금치는 전문예술단체로서의 명성을 얻으며 역량을 쌓아갔다. 하지만 조직 활동이 주로 마당극 창작과 전국 순회공연에 집중되자 창립정신 즉 문화공공성을 위한 지역사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자성의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하소동 연습공간은 도심의 변두리에 위치하여 시민과의 교류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단순히 장소의 이동의 측면이 아닌, 우금치의 발전 방향과 관련이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공동체의 예술단체’로 거듭나고자 하는 우금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이미 중년이 되고, 자녀를 둔 부모가 된 단원들은 고심이 깊어졌다. 왜냐하면 도심으로의 연습공간의 이동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원들은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새로운 시도를 결행했다.

이후 2006년 (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폐교활성화사업에 응모했고 당선하면서 대동에 위치한 폐교, 대동초등학교가 4번째 우금치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4,000평 폐교의 규모는 너무 넓고 연간 1,100만원의 임대료는 부담이 됐다. 하지만 폐교가 위치한 곳은 공단 지역과 아파트 단지 그리고 30~40가구의 씨족마을과 가까운 도농복합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곳을 기반으로 시민과의 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당시 우금치가 중심을 두었던 사업은 교육사업과 지역에서의 상설공연이었다. 이는 15년간의 축적된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의미가 있었다. 교육사업은 시민들에게 바른 전통문화예술을 알리는 효과와 단원에게는 교육강사로서의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각 계 각층을 위한 풍물, 민요, 탈춤, 마당극 등의 교육의 장이 펼쳐졌다. 폐교 근처의 농민들에게 풍물을 가르쳤고 가족과 함께하는 1박 2일 마당극 학교가 개최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우리문화체험교실을 진행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동복지관과 여성장애인 연대에서 장애인, 서구노인복지센터와 대전노인요양원의 노인을 대상으로 전통예술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지역의 상설공연은 시민들에게 우금치를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왜냐하면 우금치의 공연은 주로 전국순회공연으로, 대전 및 인근 지역에서는 연간 3~4차례 정도만 공연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6년 폐교에서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우금치와 함께 하는 좋은 하루’ 라는 정기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우금치의 마당극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초청 공연도 있었으며, 우금치의 준비로 음식도 제공됐다. 또한 2007년부터 3년간 주말야외상설 공연 ‘우리가락 우리마당’ 이 진행됐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진행된 전국 8개 도시에서 펼쳐진 국악상설공연이었다. 기존의 이 사업의 취지는 국악 대중화를 위한 것이었으나 우금치는 판소리 등으로 획일화된 전통예술의 고정적 틀을 깨고 대전충남지역 농요를 바탕으로 한 마당극, 우리의 신화를 모태로 만든 마당극을 공연했다. 이와 같은 지역사업은 시민들에게 우금치라는 이름을 인식하게 하고 우금치의 공익성을 대내외적으로 각인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증가하는 사업과 조직규모에 비해서 너무 넓은 폐교 관리로 인한 피로감, 그리고 적자 재정은 조직운영의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우금치의 재정은 주로 공연수입이었다. 하지만 공간 임대료, 관리비 그리고 단원의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조직운

영비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재정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선배의 임금을 동결하여 단원 모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 시기에 우금치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후속세대 양성의 문제였다. 즉 마당극을 하려는 신입단원이 모집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조직의 지속성 측면에서 심각하게 인식됐다. 특히 3~4년 차 되던 단원들이 경제적 문제로 탈퇴하면서 우금치의 성장은 정체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금치는 다시 전환을 모색했다.

(4) 전환기 단계: 2011~2015년

민중예술을 펼치고자한 20대의 청년들이 우금치를 창립하고 활동한지 2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다수의 우수한 작품으로 그 예술성을 인정받아 명성을 얻었지만, 조직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위기에 있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쌓은 자산을 전승할 후속세대가 양성되지 않는 것 그리고 여전히 불안정한 창작공간의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단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는 것을 중점사업으로 채택했다. 지금까지 다양하게 증설되었던 사업의 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하고 사무실을 중구 대흥동으로 이전했다.

대흥동은 대전의 원도심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시민의 유동이 많은 특징이 있다. 또한 지역의 시민단체와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위치한 곳이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시민과의 교류를 기대했다. 대흥동으로의 공간이전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우금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접근성이 좋아지자 많은 시민들이 우금치를 찾았다. 그 중에서는 마당극을 배워보려는 젊은이들이 생겨났고 그 중에서 연극영화과 출신 4명의 청년이 6개월 수습단원으로 입단했다. 이들의 입단은 우금치에 활력이 됐다. 또한 2012년에 공연장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 공모에 당선되면서 대전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 입주하게 됐다. 이곳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간으로 편의 시설이 구비되고 공간관리자가 따로 있어서 단원들은 창작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금치의 창작은 계속됐는데, <선녀와 나무꾼(2011년)>, <결결선생의 백일몽(2011)>, <견우영감 직년할멈(2012년)>, <별을 먹는 장돌뱅이(2012)>, <덕만이 결혼원정기(2013년)>을 제작하고 공연했다.

2011년 우금치는 조직의 법적지위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이유는 자신들의 공유자산을 사회자산화하려는 목적이었다. 만일 조직이 해소될 때 재산의 권리가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취지였다. 이후 2012년에는 대전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했다. 이는 우금치의 사업활동과 목적이 사회적기업의 목적과 부합하며 무엇보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였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으로 5명의 신규단원을 채용했다.

“(사회적기업 지정이후)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면서 젊은 친구를 5명 정도 확보 했어요…우금치가 초반에 탈춤이라든지 풍물이라든지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결성 된 거예요. 그런데 대학의 그런 동아리 문화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새로 수급될 인력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사회적기업되면서 100만원이라는 급여를 준다고 했을 때…채용사이트를 통해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대학의 연극과 교수님들도 제자를 보내줄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그전에는 월급도 적고, 고생하고. 그런데 지금은 4대 보험도 되고 취업률에도 잡히고…그 친구들이 와서 열심히 배우고 있죠. 우금치가 갖고 있는 기존의 이념을 서서히 배워가고 있어요”⁷⁸⁾

하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이 된 후 행정업무가 과다하게 증가하자 창작과 공연 연습을 해야 하는 단원들에게는 부담이 됐다. 이러한 이유는 사회적기업 관련 행정은 서류절차가 복잡하고 주로 일반기업을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로서는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후속세대를 채용의 형태로나마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었다. 이후 우금치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78) 정선기·이정림·김도균·민병기(2013).“2013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경영실태 조사보고서” 내용 중 김시현 인터뷰 중에서

하지만 불안정한 공간의 문제는 계속됐다. 왜냐하면 평송수련원의 임대공간은 2년 계약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후속세대 양성과 안정적인 마당극 전수를 위해서 자체 마당극장 설립은 강행했다. 2015년 대흥동에 위치한 폐교회를 구입했다. 1973년에 지어진 교회를 활용하여, 마당극 교육과 연습 무엇보다 시민과 교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교회 매입비 6억원은 단원들이 각출하여 마련했다. 하지만 전기시설 하나 구비되지 않은 폐교회의 리모델링비가 부족했다. 이에 시민들이 ‘별별마당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후원금을 모금하고 지원했다. 이는 우금치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시민들의 보답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2월 27일 대흥동에 마당극패 우금치의 마당극장 ‘별별마당’이 건립됐다.

제5절 종합

대전지역 사회적경제운동의 역사는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20년대 동아일보 신문 기사를 보면 대전(목하소비조합, 대동소비조합)과 공주(공주소비조합)에서 소비자협동조합이 결성되고 활동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전 지역의 사회적경제운동의 본격적인 형성기는 87년 6월 항쟁이후 지역시민사회로부터 출발한 한발생협, 한살림대전, 지역화폐운동(한발레츠), 민들레의료생협운동, 자활공동체운동 등이 태동하고 정착한 2000년대 중반이다. 즉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생협운동과 자활공동체운동이 대전지역 사회적경제운동의 형성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사회적기업육성법(2007년 1월)과 협동조합기본법(2012년 12월)이 통과되면서 국가에 의한 사회적경제의 제도화 과정이 지역사회에서도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제도화 과정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국가에 의한 포섭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민관협력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어떤 관점을 취하든 법의 제정과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경제 담론의 확산은 물론 사회적경제조직의 양적 팽창을 가져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87년 이후 민주화 운동이후 독재 대 민주라는 거대한 대립구도가 해체되면서 생활상의 다양한 의제들이 사회운동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형태가 협동조합 운동을 지향하는 생협운동이다. 생협운동은 외부 권력이나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과 개혁을 추구하기보다 식품안전이라는 생활의제를 운동에 중심에 두고 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사회운동보다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즉 대전에서도 지역여성들을 중심으로 한발생협(1990년)과 한살림대전(2001년)이 창립됐다.

한살림대전보다 먼저 출발한 한발생협은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과 경험의 부재 등으로 인해 초기 경영상의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생협과의 물류통합을 통한 유통비 절감과 조합비제도 도입을 통해 만성적인 적자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낮은 가격에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대신하여 생협의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합원 조합비제도는 한발생협의 재정 적

자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계기를 마련했다. 한살림운동은 생명사상을 기반으로 한 도농직거래 운동으로 1986년 설립되어 대전에서는 1997년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한살림대전의 창립특징은 1980, 90년대 농민운동 및 환경운동을 기반으로 한 다른 지역한살림 조직과는 차별적으로 소비자가 운동의 주체가 되어 조직했다는 점이다.

두 생협 모두 지난 시기 조합원 및 사업의 규모가 크게 성장해왔다. 이러한 이유는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성장한 시민의식과 생협법의 제정과 같은 제도적 변화, 그리고 수입농산물 증가에 따른 식품안전사고의 증가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즉 높은 소비자주권의식과 환경의식을 지닌 시민의 등장은 생협을 성장시켰고, 계속되는 식품관련 사고는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필요를 강화시켰다. 여기에 대전의 특수성인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웰빙(well-being)을 추구하는 소비력 있는 중산층의 증가 또한 생협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됐다.

대전의 사회적기업인 마당극패 우금치는 80년대 사회참여적 문화운동 흐름 안에서 형성하여 이후 역량 있는 전문문화예술단체로 활동해 오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매우 독특한 사례이다. 우금치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이전부터 협동조합 방식의 운영원리를 강력하게 지향해왔다. 우금치는 창립부터 단원 모두가 극단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는 공동출자, 공동운영의 동인제(同人制) 시스템으로, 투명한 재정과 민주적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구성원 간의 높은 신뢰를 형성해 왔다. 또한 단원들의 출자를 통해서 창작공간 등 공유자산을 축적하여 조직의 기반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시장도 국가(정부)도 아닌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공동체 혹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등을 강조한다. 이상으로 이러한 틀에 비추어 대전지역 사회적경제운동의 역사적 과정과 한밭생협, 한살림대전, 마당극패 우금치 등의 주요 사례를 검토해 보았다.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1장

- 김도균(2016), 대전지역 사회운동의 성장과 분화: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시민사회와 NGO 제14권 1호), pp.165-212.
- 정태석(2015), 분산하는 사회운동과 접합의 정치(경제와 사회 105호), pp.37-62.
- 조희연(2010), 독재이후 및 개발이후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운동의 변화 재구성, 『거대한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조희연·김동춘·김정훈 엮음, 한울출판사, pp.25-137.

2장

(1) 국내 문헌

- 김동춘(2001), 한국 사회운동의 현주소, 『독립된 지성은 존재하는가』, 삼인
- 김성훈(2003), 주민과 함께 일군 ‘우리 병원’ (국토 229)
- 김영남(2012), 풀뿌리여성운동을 통해 본 여성주의 시민성의 확장에 관한 연구-대전여민회 활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전광역시 대덕구(2015, 1999), 『대덕구통계연보』
- 대전광역시 중구(2015), 『중구통계연보』
-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2007. 3),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첫걸음 및 2007 총회』 자료집.
-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대전시민사회연구소(2007), 마을어린이도서관 확산을 통한 생활공동체운동기반구축(2007년도 제5회 풀뿌리 시민운동 사례공모 보고서).
- 대전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2002. 8), 『창립총회』 자료집.
- 대전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2003. 2), 『제1차 정기총회』 자료집.
- 대전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2006. 1), 『제1차 대의원총회』 자료집.
- 대전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2012. 2), 『제10차 정기총회(제7차 대의원총회)』 자료집.
- 대전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2013. 2), 『제11차 정기총회』 자료집.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2005), 마을어린이도서관 만들기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운동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2016. 2), 『통합16차 정기총회』 자료집.
- 민병기(2016), 한국에서 노동운동과 녹색운동의 정치세력화에 관한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양운(2011), 솔밭나눔장터에서 마을기업까지 대전여민회의 실험(대전발전포럼 37).
- 밀브래스 레스터(Milbrath, Lester W)(2001), 『지속가능한 사회: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의

- 이해』, 이태건·박지운·노병철 역, 인간사랑.
- 박노동·김도균·김덕진·김종남·김경희·이정림·한상현·이기동(2016), 『지역사회운동 역사II』, 대전발전연구원.
- 박영신 편역(1981), 『사회변동과 사회운동』, 경문사.
- 박재목·김도균·민병기·임현정(2014), 『대전시 마을공동체의 현황과 실태조사』,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 박해광(2010), 한국 시민사회의 참여정치 구조(민주주의와 인권 10권 2호).
- 박형신·정현주 역(2006), 『정치사회학』, 일신사.
- 박홍순(2013), 지역희망을 만드는 풀뿌리운동(민주 9호).
- 석교마을신문(2013. 6.),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문화 카페 ‘24/7’, 2호 7면.
- 석교마을신문(2014. 12.), 석교동 마을여행 해보셨나요?, 19호 5면.
- 석교마을신문(2015. 8.), 석교동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설문조사, 27호 3면.
- 신명호(2003), 도시공동체 운동의 현황과 전망, 『도시공동체론』, 한국도시연구소 엮음, 한글.
- 양병찬·지희숙·박혜원(2011), 전업주부의 배움의 방식과 주체형성(평생교육학연구 17권 4호).
- 여관현(2013), 마을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성장과정 연구-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6권 1호).
- 이근행(2006), 한국 공동체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NGO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신행(2006), 『풀뿌리 정치와 사회적 정당성』, 법문사
- 임병호·지남석(2015), 『석교동 돌다리마을 활성화 계획에 관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 장상환·정진상(2001), 『한국의 사회운동』, 진주: 경남대학교 출판부.
- 정규호(2012), 한국 도시공동체운동의 전개과정과 협력형 모델의 의미(정신문화연구 35권 2호).
- 정선기·이정림·김도균·민병기(2013. 12.), 『2013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경영실태 조사보고서』, (사)풀뿌리사람들
- 정태석(2015), 분산하는 사회운동과 접합의 정치(경제와 사회 105호).
- 중도일보, “[대전 특화거리를 가다]중구 목동·중촌동 맞춤형패션거리”, 2013. 7. 9.
- 지남석·임병호·이시영(2015), 대전 석교동 마을공동체 활동의 전개와 활성화요인(국토지리학 회지 제43권 3호).
- 지희숙·양병찬(2011), 작은도서관 운동의 평생교육적 의미 분석: 대전지역 ‘알짹마을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평생학습사회 제7권 2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5), 『소셜챌린저30』, 성남.
- 한발레츠(2016. 2.), 『제15차 한발레츠 정기총회』자료집.

(2) 해외문헌

- Alain Touraine. 1981. *The Voice and the Eye: An Analysis of Social Movemen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lain Touraine. 1985.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Social Movements," *Social Research*, 52(4).
- Alberto Melucci. 1980. "The New Social Movements: A Theoretical Approach," *Social Science Information*, 19(2).
- Daniel A. Foss and Ralph Larkin, 임현진 역. 1991. 『혁명을 넘어서-사회운동의 변증법』. 서울: 나남.
- Friedhelm Neidhardt and Dieter Rucht. 1991. "The Analysis of Social Movements: The State of the Art and Some Perspectives of Further Research," in *Research on Social Movements*, ed. Dieter Rucht(Boulder: Westview Press).
- Giovanni Arrighi. 1986. "Dilemmas of Antisystemic Movements," *Social Research*, Vol. 53, No. 1, 송철순, 천지현 옮김, 『반체제운동』,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 Goode, Erich · 박형신·정현주 역. 1992. 『정치사회학』. 서울: 일신사.
-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1977.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 Parti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6).
- Mario Diani. 1992. "The Concept of Social Movement," *The Social Review*, 40(1).
- Ralph Turner and Lewis M. Killian. 1972. *Collective Behavior*. New Jersey: Prentice-Hall
- William Bruce Cameron. 1966. *Modern Social Movements: A Sociological Outline*. New York: Random House.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대전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djunggu.go.kr>)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http://www.mindlle.org>)

석교마을신문 홈페이지(<http://www.doldari.net>)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info.nec.go.kr>)

3장

김도균(2016), 대전지역 사회운동의 성장과 분화: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시민사회와 NGO 제14권 1호), pp.165-212.

김명준(1988), 협동조합형 소비자운동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기(2013), 한국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전망, 김성기 편,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기업: 21C 지역사회 변화의 주역』, 아르케.
- 김승오(2010), 시범사업단계: 자활사업 제도화 초기, 『자활운동의 역사와 철학』,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pp.22-40.
- 김신양(2009), 다른경제의 희망, 「2011년 진보신당 사회적경제 활동가 워크숍 자료집」, pp.7-23.
- 김신양(2013),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한국지역진흥재단, 「2013년도 협동조합 아카데미 교육」, pp.83~127.
- 김영철(2011), 사회적경제와 지역의 내발적 발전(지역사회연구 제19권 2호), pp.25-49.
- 김정원(2010), 자활사업의 정착단계: 제도적 정형화와 다양한 모색, 『자활운동의 역사와 철학』,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pp.60-83
- 김철규 · 김진영 · 김상숙(2010), 대안 먹거리운동과 한국의 생협(지역사회학 제14권 제1호), pp117-143
- 김형미(2012),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 식민지 시대의 소비조합운동을 찾아서,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푸른 나무, pp.14-56.
- 노대명(2010), 자활사업의 제도화 단계: 근로연계복지의 출범, 『자활운동의 역사와 철학』,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pp.42-58.
- 마당극패우금치(2013), 「마당극패 우금치 총회 자료집(2013)」
- 박노동 · 김도균 · 김덕진 · 김종남 · 김경희 · 이정림 · 한상헌 · 이기동(2015), 지역사회운동 역사II, 대전발전연구원, pp. 210-222
- 보르자가(C. Borzaga)와 드푸르니(J. Defurny)(2009), 『사회적기업 I: 이론과 실제』, 박대석 · 박상하 · 고두갑 역, 시그마프레스.
- 성장순(2013), 마당극패 우금치 연구,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2016), 『icoop생협 2016년 입문 협동조합』, 알마.
- 엄형식(2008),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 유철규(2014), 자본주의, 사회적 경제 그리고 협동조합,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 김창진 엮음, 가을의 아침, pp.153-171.
- 이문국(2010), 자활사업 제도화 전 단계: 생산공동체의 역사, 『자활운동의 역사와 철학』,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pp.10-20.
- 이미연(2012), 점포형 소협 설립과 성장의 역사,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푸른 나무, pp.232-273.
- 이정림(2014), 어촌마을의 사회적 경제: 공유자원의 자율적 관리와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채민(2010), 물류통합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의 성격변화: 한밭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원봉(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 집.
- 장중익(2002), 농협의 장기비전과 체제개혁 방향(농정연구 제3호), pp.11-67.
- 장창수(2014), 대전지역 자활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대전발전연구원.
- 정규호(2012), 한국 도시공동체운동의 전개과정과 협력형 모델의 의미(정신문화연구 35권 2호), pp.8-33.
- 정선거·이정림·김도균·민병기(2013). 「2013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경영실태 조사보고서」, (사)풀뿌리사람들
- 정은미(2006), 한국생활협동운동의 특징(농촌경제 29권 3호), pp.1-18.
- 정태석(2015), 분산하는 사회운동과 접합의 정치(경제와 사회 105호), pp.37-62.
- 조희연(2010), 독재이후 및 개발이후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운동의 변화 재구성, 『거대한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조희연·김동춘·김정훈 엮음, 한울출판사, pp.25-137.
- 최공숙(2003),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한밭생활: 조직개편을 중심으로, 「14차 대의원 총회자료집」 한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pp.221-227.
- 폴라니 칼(Polanyi Karl)(1983), 『인간의 경제』, 박현수 역, 풀빛.
- 폴라니 칼(Polanyi Karl)(2002),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 홍기빈 역, 책세상.
- 폴라니 칼(Polanyi Karl)(2009), 『거대한 전환』, 홍기빈 역, 도서출판 길.
- 한국도시연구소 편(1996), 『도시서민의 삶과 주민운동』. 발언
- 한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의원 총회 자료집(2001~2016년)」, 각 년도.
- 한살림대전, 「정기대의원총회 회의자료(2001~2015)」, 각 년도.
- 홍기빈(2008), 역자해제: 시장경제 유평파와 사회의 개편, 폴라니 칼,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 홍기빈 역, 책세상.

인터뷰 대상자

강영희 2016년 9월 23일
 권성현 2016년 9월 9일
 김제선 2016년 7월 11일
 민양운 2016년 9월 19일
 최덕선 2016년 7월 18일

고철영 2016년 10월 28일
 김성훈 2016년 9월 28일
 김종남 2016년 10월 1일
 정철주 2016년 9월 6일

정책연구보고서 2016-46

지역사회운동사 Ⅲ

발행인 유 재 일

발행일 2016년 11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3523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 TEL 042-○-○ FAX 04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